

발 간 등 록 번 호

11-1051000-00066-10

2019~2023년 국 가 재 정 운 용 계 획

대 한 민 국 정 부

목 차

제 1 부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념과 실효성 / 3
2.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절차 / 5

제 2 부 | 2019~2023년 경제·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경제 여건 / 11
2. 재정운용 여건 / 13

제 3 부 | 2019~2023년 재정운용 방향

1. 재정운용 기본방향 / 19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 21
3.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 39

제 4 부 | 12대 분야별 투자방향

1. 보건·복지·고용 분야 / 49
2. 교육 분야 / 63
3. 문화·체육·관광 분야 / 76
4. R&D 분야 / 86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 98
6. SOC 분야 / 117
7. 농림·수산·식품 분야 / 128
8. 환경 분야 / 142
9. 국방 분야 / 152
10. 외교·통일 분야 / 162
11. 공공질서·안전 분야 / 172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 194

제 5 부 |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혁신 방향

1. 지출 혁신

- 1) 지출 구조조정 / 207
- 2) 지출구조 개선 / 208

2. 세입기반 확충

- 1) 비과세·감면 정비 / 210
- 2) 탈루소득 과세 강화 / 211

3. 투자재원 다변화

- 1) 국유재산 활용 확대 / 212
- 2)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214

4. 리스크 관리 체계화

- 1)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 / 216
- 2) 국고채 안정적 관리 / 217

5. 재정관리의 혁신성 제고

- 1)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 / 218
- 2)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 220
- 3) 재정정보 관리 고도화 및 공개 확대 / 221
- 4) 공공기관 혁신 강화 / 223

6. 재정운용의 포용성 강화

- 1) 재정분권 추진 / 225
- 2) 국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 / 226
- 3)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 228

제 1 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제1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념과 실효성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에 대한 재정운용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재정운용 계획을 말한다.

■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자원배분 방향을 제시

국가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매 년도마다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시계에서 국가 정책적 목표를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자원배분도 중요하다. 단년도 위주의 예산 편성만으로는 국가 발전전략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하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재정운용전략과 자원배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5개년도 단위의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동계획으로서 계획 수립 이후의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 수정·보완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4년에 최초로 수립되었으며, 2007년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2013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2013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 전략적 자원배분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더욱 강화

우리나라는 2004년에 4대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롯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 성과관리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등을 도입하면서 제도적 측면에서 선진 재정운용시스템을 구비하게 되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도입과 발전으로 기존 단년도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거시경제 및 재정여건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운용의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전략적인 자원배분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정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4년 최초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 발전되어 왔으며 2010년 5월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현재와 유사한 체제와 내용을 갖추게 되었다.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수입을 국세·세외수입·기금수입으로 세분화하였고, 통합재정수지의 전망, 근거 및 관리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전년도 계획 대비 변동사항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를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2012년부터는 재정지출을 의무·재량지출로 구분하여 지출성격별로 전망근거와 관리계획 등을 제시하였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도 첨부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절차에 있어서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 재정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절차

■ 각 부처에 계획 수립지침 통보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2018년 12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였다. 각 부처는 동 지침에 따라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19년 1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 분야별 작업반 운영 등 폭넓은 의견 수렴

2019년 2월부터 정부, 학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14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하고 각 분야별 정책방향과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8월 8일에는 공개 토론회, 8월 23일에는 민간전문위원, 지자체, 각 부처가 참석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방향 및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국회 보고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2019년 7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2020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제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되었으며, 2020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다.

■ 1982년부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중기재정계획 작성

- 정부는 재원배분에 있어 중기적 시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82년부터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하였다. 초기의 중기재정계획은 재정적자 전망이나 적자축소 계획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을 제시하였고, 예산편성 시 재정당국의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제도화

- 2004년에는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전략적 재정운용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고,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동 계획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 정부는 경제·재정여건을 전망하여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5년 단위 재정총량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12대 분야별 중점투자계획 및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전까지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방향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포함범위 확대 및 실효성 강화

- 2005년부터는 일반회계 등 예산 중심에서 예산과 기금을 망라하는 총지출 기준으로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또한 계획 수립과정에서 분야별 작업반, 재정정책자문회의 등을 통해 민간전문가, 정책고객, 관계부처,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계획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기 재원배분 우선순위와 그에 따른 재정소요를 분석·제시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재정건전성 관리 병행

-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가시적 성과를 구현하는데 재정운용의 중점을 두었다.
-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여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및 총수입 증가율보다 높게 유지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양적·질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입기반 확충도 병행하였다.
-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2018~2022년 계획기간 중 적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GDP 대비 △2.9%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또한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 동안 GDP 대비 40% 초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일자리·저출산·소득분배 개선, 혁신성장 지원에 중점

- 재원배분 측면에서는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대에 중점을 두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도 집중 투자하였다.
- 또한,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성장 분야를 적극 지원하는 가운데, 국가안보·국가안전 관련 투자도 지속 확대하였다.

<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 >

(단위 : 조원, %)

	'18		'19	'20	'21	'22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재정수입	447.2	447.7	481.3	504.1	525.4	547.8	5.2
- 국세수입	268.1	268.1	299.3	312.7	325.7	340.3	6.1
▪ 재정지출	428.8	432.7	470.5	504.6	535.9	567.6	7.3
▪ 관리재정수지	△28.5	△31.4	△33.4	△44.5	△54.2	△63.0	
(GDP 대비)	(△1.6)	(△1.7)	(△1.8)	(△2.3)	(△2.6)	(△2.9)	
▪ 국가채무	708.2	700.5	741.0	790.8	843.0	897.8	
(GDP 대비)	(39.5)	(38.9)	(39.4)	(40.2)	(40.9)	(41.6)	

■ 우리나라의 재정은 예산(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19개)과 기금(67개)으로 구성

-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일반회계는 국세 등 일반 세입으로 경제개발, 복지, 교육, 국방 등 일반적 지출을 충당하는 회계이고,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 운영, 특정 자금 운영, 기타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회계이다.
- 기금은 사회보험료, 부담금 등 특정 자금을 운용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 재정의 회계구조 >

구분	예 산		기 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개수	1개	19개	67개
규모	총지출 469.6조원*		
내용	세 입	세 출	기타 특별회계 (1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 국세 관세 교통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세외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 교육 교통및물류 국방 일반지방행정 농림수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곡관리 조달 책임운영기관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교통시설 농어촌구조개선 국가균형발전 에너지 및 자원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험성 (6개) 금융성 (8개) 계정성 (5개) 사업성 (4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주택도시기금, 남북협력기금 등

* '19년 국회 확정 본예산 기준

제 2 부

2019~2023년 경제·재정운용 여건

제2부 2019~2023년 경제·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경제 여건

1) 대외 여건

2019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교역 둔화 및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전망이다.

선진국은 미국의 성장세가 완만하게 조정을 받는 가운데, 유로 지역의 제조업 경기 부진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경제심리 위축 등이 성장세를 제약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의 경우 미-중 무역갈등의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전망이다.

2020년 이후

세계경제는 향후 성장세가 개선되겠으나, 국가별 여건에 따라 회복 여부와 속도의 차별화가 예상되며, 하방리스크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은 유로지역의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재정정책 효과가 약화되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전망이다. 반면, 신흥국은 확장적 재정·통화정책과 구조개혁 노력 등에 힘입어 인도, 브라질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미-중 무역갈등 및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중국의 경기 둔화 심화 가능성 등이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지속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단위 : %)

	'18	'19	'20	'21	'22	'23
세 계	3.6	3.2	3.5	3.6	3.6	3.6
- 선진국	2.2	1.9	1.7	1.7	1.6	1.6
- 신흥국	4.5	4.1	4.7	4.9	4.8	4.9

* 자료 : World Economic Outlook(IMF, '19.4, 7월)

2) 대내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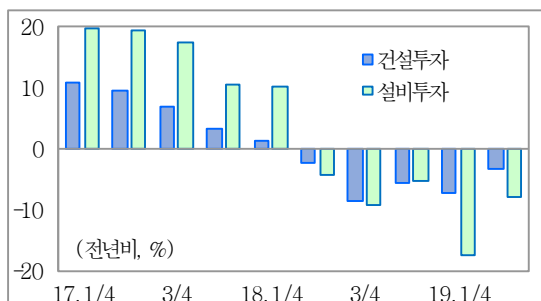
2019년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기·교역 둔화 등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며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고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수출은 글로벌 교역 및 반도체 경기 둔화의 영향 등으로 부진하겠으며, 민간투자도 불확실성 확대,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미·중 무역갈등 확산·장기화,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해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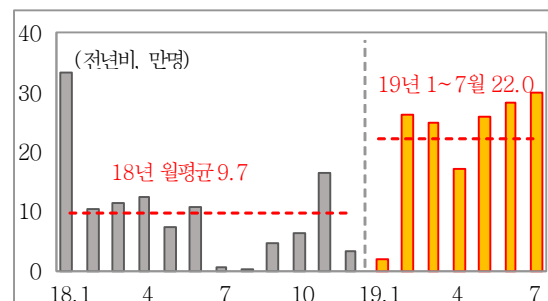
고용은 정책 효과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고, 질적 측면에서 상용직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가 예상된다. 다만, 수출·투자 부진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30~40대 고용 부진이 이어지는 등 고용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추이



* 자료: 통계청

취업자수 증감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2020년 이후

세계경제 회복 및 정책 효과 등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겠으나, 대외 불확실성 및 구조적 제약 요인이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이후 세계경제 개선 등에 따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경제 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 등 정책 노력에 힘입어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소비패턴 변화 등 구조적 문제들이 성장세를 제약할 가능성도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2. 재정운용 여건

1) 재정수입

■ 국세수입

2020년에는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이 현행 15%에서 21%로 6%p 상향 조정되면서 부가가치세가 감소하고, 금년도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 법인세 둔화가 예상되면서 세수증가세가 제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1년 이후에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경제활력 제고·혁신성장 등 정책 노력에 힘입어 경제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 등으로 인하여 2018~2022년 계획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등의 불확실성에 따라 수입 여건은 다소 유동적일 것이다.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해 2018~2022년 계획 보다 증가율이 다소 상승할 전망이다.

2) 재정지출

■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를 위한 의무지출 소요 지속 증가 전망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지급 기준 완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규 도입 등의 노력으로 복지지출이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관련 의무지출도 증가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도 복지지출을 확대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공적연금의 수급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의무지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 경제활력 제고,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위한 소요도 증가

대내외 여건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 소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선,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하여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이끌어갈 혁신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이다. 안전투자 및 생활 SOC 투자를 확충하고, 미세먼지 저감, 재해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 각 부처가 요구한 2019~2023년 지출증가율은 연평균 7.7% 수준

2019년 1월말 각 부처에서 요구한 2019~2023년 계획기간 중 지출증가율은 연평균 7.7%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지출증가율 7.3%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 '18~'22년 계획 대비 '19~'23년 부처요구 >

(단위 : 조원, %)

	'18	'19	'20	'21	'22	'23	연평균 증가율
▪ '18~'22년 계획(A)	428.8	470.5	504.6	535.9	567.6		7.3
▪ '19~'23년 부처요구(B)*		469.6	539.7	574.2	605.6	632.1	7.7
▪ 계획대비 추가요구(B-A)			35.1	38.2	38.0		

* 중기사업계획서 부처요구 ('19.1월말)

제 3 부

2019~2023년 재정운용 방향

제3부 2019~2023년 재정운용 방향

1. 재정운용 기본방향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재정이 적극 뒷받침

지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확대 등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투자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출·투자 부진으로 경제 활력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 대응이 시급한 구조적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출·투자·내수 활성화 및 혁신성장 가속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대비를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사회·고용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소득분배 개선 등 포용국가의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생활SOC 확충 등 국민 생활 밀착형 투자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병행

증가하는 지출 소요와는 달리 글로벌 경기 둔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향후 세입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과 더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다.

유사·중복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재정사업평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사업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이다.

또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국유재산 활용 확대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민 편익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 재정운용·관리 과정에서 혁신성·포용성 제고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운용·관리시스템 전반에도 혁신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계약제도를 능력·기술 중심으로 개선하여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추진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공공 서비스 수준도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현행 예산회계시스템을 대체하는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정정보관리를 고도화하고, 재정·경제·행정 정보를 망라한 통합재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 재정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1) 재정수입

■ 재정수입¹⁾은 연평균 3.9% 증가 전망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재정수입은 2019~2023년 기간 중 연평균 3.9%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재정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인 5.2%를 밑도는 수준으로 국세수입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것이다.

< 중기 재정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19		'20	'21	'22	'23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재정수입	476.1	476.4	482.0	505.6	529.2	554.5	3.9
(증가율)	(6.5)	(6.5)	(1.2)	(4.9)	(4.7)	(4.8)	
○ 국세수입	294.8	294.8	292.0	304.9	320.5	336.5	3.4
○ 세외수입	26.6	27.0	27.8	28.9	30.1	30.5	3.4
○ 기금수입	154.7	154.7	162.1	171.7	178.5	187.6	4.9

* '19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1) 재정수입은 예산수입과 기금수입을 합친 규모이며, 예산수입은 크게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나뉜다.

■ 국세수입은 연평균 3.4% 증가

2019년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20년은 세수 증가세가 둔화되나, 이후 성장 지속에 따른 세수 증가로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기 국세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19		'20	'21	'22	'23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국세수입	294.8	294.8	292.0	304.9	320.5	336.5	3.4
(증가율)	(9.9)	(9.9)	(△0.9)	(4.4)	(5.1)	(5.0)	

* '19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 세외수입은 연평균 3.4% 증가

세외수입은 2019~2023년 기간 중 26~31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기 세외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19		'20	'21	'22	'23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세외수입	26.6	27.0	27.8	28.9	30.1	30.5	3.4
(증가율)	(△0.3)	(1.1)	(4.5)	(4.1)	(4.0)	(1.2)	

* '19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 기금수입은 연평균 4.9% 증가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의 확대에 따라 2019~2023년 기간 중 연평균 4.9% 증가할 전망이다.

< 중기 기금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19		'20	'21	'22	'23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기금수입	154.7	154.7	162.1	171.7	178.5	187.6	4.9
(증가율)	(1.5)	(1.5)	(4.8)	(5.9)	(4.0)	(5.1)	

* '19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 조세부담률은 19%대를 유지할 전망

조세부담률은 2016~2018년 간의 높은 국세수입 증가세가 완화되면서 2019년 이후 19%대로 조정·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부담률은 같은 기간 27%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위 : %)

	'19		'20	'21	'22	'23
	본예산	추경				
■ 조세부담률	19.6	19.6	19.2	19.2	19.3	19.4
■ 국민부담률	26.8	26.8	26.7	26.9	27.1	27.4

* '19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 조세부담률

조세수입(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경상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 국민부담률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경상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 부담률보다 포괄적으로 국민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여금을 의미한다. 사회보장부담률은 사회보장기여금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조세부담률에 이를 더하여 국민부담률을 산출한다.

$$* \text{국민부담률} = \text{조세부담률} + \text{사회보장부담률}$$

주요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단위 : %, '17년 기준)

	한국	미국	일본 (2016년)	영국	프랑스	OECD 평균
조세부담률	18.8	20.9	18.2	26.9	29.4	25.0
국민부담률	25.4	27.1	30.6	33.3	46.2	34.2

*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18)

2) 재정지출

(1) 총 괄

■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6.5%

정부는 2019~2023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6.5%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혁신성장 가속화, 포용국가 구현, 삶의 질 제고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한 대응을 재정이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높게 유지할 계획이다.

< 중기 재정지출 계획 >

(단위 : 조원, %)

	'19		'20	'21	'22	'23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재정지출	469.6	475.4	513.5	546.8	575.3	604.0	6.5
① 예산·기금별 구분							
○ 예산지출	328.9	332.6	352.4	375.3	393.2	412.9	5.9
(비중)	70.0	70.0	68.6	68.6	68.4	68.4	
○ 기금지출	140.7	142.8	161.0	171.5	182.1	191.1	8.0
(비중)	30.0	30.0	31.4	31.4	31.6	31.6	
② 지출성격별 구분							
○ 의무지출	239.3	239.8	255.6	270.7	289.5	302.8	6.1
(비중)	(51.0)	(50.4)	(49.8)	(49.5)	(50.3)	(50.1)	
○ 재량지출	230.3	235.6	257.8	276.1	285.8	301.3	6.9
(비중)	(49.0)	(49.6)	(50.2)	(50.5)	(49.7)	(49.9)	

* '19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2) 의무지출

■ 의무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6.1%

2010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는 재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고 증가율, 산출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의해 단가, 대상 등이 결정되므로 지출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지출규모의 통제 가능성, 재정건전성 관리 등의 측면에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무지출의 범위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지출에 한정하였으며, 정부 총지출 산정방식에 따라 보전거래(국채·차입금 등 원금상환), 내부거래(회계/기금간 거래),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 사업은 제외하였다.

의무지출은 2019~2023년 기간 중 복지분야 법정지출을 중심으로 연평균 6.1% 증가할 전망이고,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 >

(단위 : 조원, %)

	'19		'20	'21	'22	'23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지방이전재원	111.5	111.5	111.6	116.3	121.9	126.2	3.1
▪ 복지분야 법정지출	106.7	107.2	120.2	130.5	140.7	150.2	8.9
▪ 이자지출	15.9	15.9	17.9	19.6	20.5	20.2	6.2
▪ 기타 의무지출	5.2	5.2	5.9	4.4	6.4	6.2	4.5

* '19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3) 재량지출

■ 재량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6.9%

경제활력 제고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에 따라 재량지출은 2019~2023년 기간중 6.9%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유사·중복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심도 깊은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지출구조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 지방이전재원²⁾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46%('19년 기준)와 교육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다.

* 담배값 개별소비세의 20% 제외(소방안전교부세)

2017년부터는 교육세 일부를 세입으로 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지방이전재원 중 의무지출은 정부에서 추계한 내국세, 종합부동산세 및 교육세 등 세입 전망치와 의무지출 사업 등을 통해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2020년 지방이전재원 규모는 세입 둔화 등에 따라 전년대비 0.1조원 증가하고, 이후 세입 증가에 따라 2019년 107.7조원에서 2023년 126.2조원으로 연평균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방이전재원(의무지출) 전망 >

(단위 : 조원, %)

	'19	'20	'21	'22	'23	연평균 증가율
【 합 계 】	107.7	107.8	112.7	118.8	126.2	4.0
▪ 지방교부세	52.5	52.3	54.6	57.4	60.3	3.5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2	55.5	58.1	61.4	65.9	4.5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제외

- 2)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제도에는 교부금(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지방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의미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이전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을 꾸준히 상향 조정해왔다. 지방교부세율은 1995년 13.27%에서 2006년 19.24%(내국세 대비비율)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은 1995년 11.8%에서 2019년 20.46%로 상향조정되었다.

■ 보건·복지·고용 법정지출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무지출로 분류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사업)에 대한 국가부담액은 2019년 12.5조원에서 2023년 16.0조원으로 연평균 6.4%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 소요 추정시 수급자수, 가구당 인원수 등은 기 산정방식을 유지하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급 기준 완화 등 급여별 지원대상자 확대를 적극 고려하였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주거지원 지원대상 확대 등

주요 급여별로 보면, 생계급여는 2019년 3.8조원에서 보장수준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3년에는 5.7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급여는 2019년 6.4조원에서 2023년 7.7조원으로 4.9% 수준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며, 주거급여는 선정대상 확대(중위소득 44→45%) 등으로 2019년 1.7조원 수준에서 2023년 1.8조원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 전망 >

(단위 : 억원, %)

	'19		'20	'21	'22	'23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합 계 】	124,717	898	137,075	150,979	155,342	159,890	6.4
▪ 생계급여	37,508	109	43,379	53,651	55,261	56,918	11.0
▪ 의료급여	63,915	459	70,038	72,940	75,128	77,382	4.9
▪ 주거급여	16,729	-	16,305	17,055	17,434	17,878	1.7
▪ 교육·해산장제·자활	6,565	330	7,353	7,333	7,520	7,712	4.1

② 건강보험

건강보험 관련 의무지출은 2019년 8.7조원에서 2023년 12.7조원으로 연평균 9.8% 증가할 전망이다.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일반회계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의 14% 상당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보험료 예상수입의 6% 상당액(단,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은 2022년 말까지 한시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020년 일반회계 지원규모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보다 1.1조원 가량 증액된 7.08조원을 지원한다. 2020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과 함께 일반회계 지원도 2023년까지 9.5조원, 연평균 1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규모는 2018년 담배 반출량 실적인 34.84억갑 기준 1.88조원이다. 2020년 이후에는 담배반출량 및 담배 부담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국가부담금보험료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국가부담금보험료는 2020년은 예상보험료(6.69%, 전년대비 3.49% 인상 가정) 등을 적용하여 0.89조원 수준이며, 2023년까지는 보험료인상, 보수월액 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연평균 5.5%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건강보험 의무지출 전망 >

(단위 : 억원, %)

	'19	'20	'21	'22	'23	연평균 증가율
【 합 계 】	87,130	98,510	105,035	114,611	126,850	9.8
▪ 가입자 지원(일반)	59,721	70,826	76,862	84,623	95,048	12.3
▪ 가입자 지원(기금)	19,011	18,801	18,801	20,101	21,401	3.0
▪ 공무원·교직원 국가부담금	8,398	8,883	9,372	9,887	10,401	5.5

③ 4대 공적연금

○ 국민연금

노령·유족·장애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되는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2019년 23.0조원에서 2023년 36.3조원으로 연평균 12.1% 증가할 전망이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9년 521만명에서 2023년에는 665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은 2019년 16.9조원에서 2023년 24.0조원으로 연평균 9.2% 증가할 전망이다. 연금수급인원 증가(2019년 51.1만명 → 2023년 62.9만명, 연평균 5.4%)에 따른 퇴직급여 증가분과 퇴직자 증가(연평균 2.3%)로 인한 퇴직수당 증가분이 반영되었다.

○ 사학연금

사학연금 의무지출은 2019년 3.4조원에서 2023년 4.8조원으로 연평균 9.4% 증가할 전망이다. 연금수급자 수는 2019년 12.7만명에서 2023년 15.6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연금선택률 및 퇴직자 증가, 수급기간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과거 5년 평균 수급자 증가율을 반영한 결과이다.

○ 군인연금

군인연금 의무지출은 2019년 3.4조원에서 2023년 3.9조원으로 연평균 3.9%증가할 전망이다.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연금수급기간 장기화 및 수급인원 증가(11.3만명→12.2만명)에 따라 급여지출도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 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 전망 >

(단위 : 억원, %)

	'19	'20	'21	'22	'23	연평균 증가율
【 합 계 】	466,701	520,335	577,714	640,342	690,838	10.3
▪ 국민연금	230,193	270,034	298,947	337,292	363,031	12.1
▪ 공무원연금	169,172	177,189	201,089	220,617	240,242	9.2
▪ 사학연금	33,710	38,455	41,487	44,776	48,345	9.4
▪ 군인연금	33,626	34,657	36,191	37,657	39,220	3.9

④ 노인부문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준 하위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급여액('19년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2019년 약 11.5조원(국비 기준)으로 '19~'23년동안 연평균 10.4% 증가할 전망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2023년간 연평균 19.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에도 건강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으로 보험료 예상수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도 0.3조원 확대할 계획이다.

< 노인부문 의무지출 전망 >

(단위 : 억원, %)

	'19	'20	'21	'22	'23	연평균 증가율
【 합 계 】	123,864	143,304	163,177	175,338	188,792	11.1
▪ 기초연금	114,952	131,765	149,746	159,704	170,594	10.4
▪ 노인장기요양보험	8,912	11,539	13,431	15,634	18,198	19.5

⑤ 보훈부문

독립유공자와 상이를 입으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보상금은 2019년 2조 8,131억원에서 2023년 3조 1,46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고령화되신 국가유공자의 작고와 군사고로 상이를 입으신 분 들을 고려한 인원 변동과 물가상승률 등 거시지표를 고려한 보상금 인상률을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2019년 6,877억원에서 2023년 5,146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이는 2018년 월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 지급 단가를 동결하고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작고 추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 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의료 지원을 위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는 지원인원과 단가 추이 등을 적용한 결과, 2019년 6,575억원에서 2023년 6,561억원으로 연평균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된다. 이와함께 재활센터와 치과병원을 신축하여 고령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충하고 있다.

< 보훈부문 의무지출 전망 >

(단위 : 억원, %)

	'19	'20	'21	'22	'23	연평균 증가율
【 합 계 】	45,988	46,387	46,650	47,055	47,611	0.9
▪ 보상금	28,131	29,444	30,022	30,690	31,460	2.8
▪ 참전명예수당	6,877	6,412	5,959	5,538	5,146	△7.0
▪ 6.25자녀, 고엽제 등 수당	4,405	4,446	4,432	4,432	4,444	0.2
▪ 보훈 · 위탁병원 진료	6,575	6,085	6,237	6,396	6,561	△0.1

이자지출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성 국가 채무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9년 11.9조원에서 2020년 13.6조원으로 증가한 이후 2023년 16.2조원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주택도시기금 국공채이자

주택도시기금 국공채이자는 2019년 1.3조원 수준에서 2023년 1.5조원 수준으로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국공채이자는 부동산 등기·등록 시 발행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5년 만기)에 따른 이자가 대부분인데, 2016년 이후 채권 발행 규모 감소, 최근 저금리 추세에 따른 발행금리 하락 등으로 인해 이자상환 규모가 2021년 감소되었다가 이후 예년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이자지출 전망 >

(단위 : 억원, %)

	'19	'20	'21	'22	'23	연평균 증가율
【 합 계 】	158,860	179,405	195,619	205,215	202,047	6.2
▪ 공공자금관리기금	119,146	136,419	149,541	157,776	161,807	8.0
▪ 주택도시기금	13,196	15,244	11,851	13,782	14,931	3.1
▪ 기 타	26,517	27,742	34,227	33,657	25,309	△1.2

■ 기타 의무지출

①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은 쌀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논 의 형상을 유지하는 경우 논 1ha당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수매제 등 가격지지정책과 달리 논 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재정에서 직접 개별농가에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WTO에서 허용하는 정책(허용보조)이다.

지급면적 축소세(2016년 837 → 2018년 818천ha) 감안시 2019~2023년간 연평균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유엔 PKO 예산분담금

국제기구분담금 중 유엔 PKO(평화유지활동) 예산분담금은 유엔개혁 및 PKO 예산 건축 기조에 따라 2019년 1,571억원에서 2020년 1,543억원으로 다소 감소할 전망이며, 2019~2023년 전체적으로도 연평균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타 의무지출 전망 >

(단위 : 억원, %)

	'19	'20	'21	'22	'23	연평균 증가율
【 합 계 】	51,888	59,378	43,883	63,784	61,922	4.5
▪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8,028	7,994	7,903	7,813	7,733	△1.0
▪ 유엔PKO예산분담금	1,571	1,543	1,466	1,422	1,393	△3.0
▪ 기 타	42,289	49,841	34,515	54,549	52,806	5.7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관리재정수지³⁾는 연평균 △3% 중반 수준으로 관리

경제활력 제고, 혁신성장 가속화, 미래 대비,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면서도, 중기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통해 2019~2023년 계획기간 중 연평균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중반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관리재정수지는 2020년 GDP 대비 △3%대를 기록한 후, 2023년까지 GDP 대비 △3% 후반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에 적자로 전환된 후, 2023년에는 적자폭이 GDP 대비 △2.2%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기 재정수지 전망 >

(단위 : 조원, %)

	'19		'20	'21	'22	'23
	본예산	추경				
■ 관리재정수지	△37.6	△42.3	△72.1	△81.8	△85.6	△90.2
(GDP대비)	(△1.9)	(△2.2)	(△3.6)	(△3.9)	(△3.9)	(△3.9)
※ 통합재정수지	6.5	1.0	△31.5	△41.3	△46.1	△49.6
(GDP대비)	(0.3)	(0.05)	(△1.6)	(△2.0)	(△2.1)	(△2.2)
■ 경상 GDP 성장률	3.0*		3.8	4.1	4.1	4.1

* '19.7.3 발표

3)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입 - 통합재정지출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지

■ 국가채무는 40% 중반 수준 이내로 관리

2019~2023년 계획기간 중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2021년 GDP 대비 비율이 40%대에 도달하며, 2023년까지 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증가세가 전망된다.

이같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이며, 국제기구와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을 건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남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 중기 국가채무 전망 >

(단위 : 조원, %)

	'19		'20	'21	'22	'23
	본예산	추경				
■ 국가채무	740.8	731.5	805.5	887.6	970.6	1,061.3
(GDP대비)	(37.1)	(37.2)	(39.8)	(42.1)	(44.2)	(46.4)
■ 경상 GDP 성장률	3.0*		3.8	4.1	4.1	4.1

* '19.7.3 발표

■ 통합재정수지

- 당해 회계연도의 통합재정수입에서 통합재정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통합재정수입 및 통합재정지출은 예산, 기금 등 정부 재정수입·지출 규모에서 회계와 기금간 내부거래, 차입 및 채무 상환 등의 보전거래를 제외하여 계산한다.

<table><tr><th>통합재정수입</th></tr><tr><td><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수입 (조세, 세외수입 등)■ 자본수입 (토지매각 등)</td></tr></table>	통합재정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수입 (조세, 세외수입 등)■ 자본수입 (토지매각 등)	-	<table><tr><th>통합재정지출</th></tr><tr><td><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지출 (공사비, 용역비 등)■ 자본지출 (토지매입비 등)■ 순융자</td></tr></table>	통합재정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지출 (공사비, 용역비 등)■ 자본지출 (토지매입비 등)■ 순융자	=	<table><tr><th>통합재정수지</th></tr></table>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수입 (조세, 세외수입 등)■ 자본수입 (토지매각 등)									
통합재정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지출 (공사비, 용역비 등)■ 자본지출 (토지매입비 등)■ 순융자									
통합재정수지									
+		+							
<table><tr><th>보전수입</th></tr><tr><td><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채발행수입■ 차입금 · 차관수입■ 전기이월 (세계잉여금포함)■ 내부거래수입 (회계 · 기금간)</td></tr></table>	보전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채발행수입■ 차입금 · 차관수입■ 전기이월 (세계잉여금포함)■ 내부거래수입 (회계 · 기금간)		<table><tr><th>보전지출</th></tr><tr><td><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채원금상환■ 차입금 · 차관상환■ 차기이월■ 내부거래지출 (회계 · 기금간)</td></tr></table>	보전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채원금상환■ 차입금 · 차관상환■ 차기이월■ 내부거래지출 (회계 · 기금간)			
보전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채발행수입■ 차입금 · 차관수입■ 전기이월 (세계잉여금포함)■ 내부거래수입 (회계 · 기금간)									
보전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채원금상환■ 차입금 · 차관상환■ 차기이월■ 내부거래지출 (회계 · 기금간)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는 장래의 연금·보험 등의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것으로 당해연도의 재정건전성 상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재정수지 산정시 제외한다.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 사회보장성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3.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1) 기본방향

고용·사회 안전망을 적극 확충하고 구조적 과제 지속 대응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고,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사회 안정망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육·돌봄·청년주거 등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응을 강화하고, 일자리 확대 등 노인소득 기반도 확충해 나갈 것이다. 또한 미래 핵심인재 양성,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성장 동력 창출과 생활편의 증진 인프라 확충

데이터·5G·AI 및 3대 핵심산업 활성화와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조기공급 안정 등에 집중 투자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신기술을 접목하여 국민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인프라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튼튼한 국방안보 태세와 안전한 국민생활 투자 확대

핵·WMD 대응 전력 등 핵심무기체계 투자 확대, 스마트 정예군 육성 등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재해예방 투자, 노후 기반시설 안전 투자 등 국민안전을 위한 선제적 투자도 지속할 계획이다.

2)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 : 조원, %)

구분	'19	'20	'21	'22	'23	'19~'23 연평균
총 지출	469.6 (9.5)	513.5 (9.3)	546.8 (6.5)	575.3 (5.2)	604.0 (5.0)	(6.5)
1. 보건·복지·고용	161.0 (11.3)	181.6 (12.8)	198.4 (9.3)	213.2 (7.4)	229.1 (7.5)	(9.2)
2. 교육	70.6 (10.1)	72.5 (2.6)	76.0 (4.9)	79.1 (4.1)	82.0 (3.5)	(3.8)
3. 문화·체육·관광	7.2 (12.2)	8.0 (9.9)	8.3 (4.6)	8.6 (3.8)	9.0 (3.6)	(5.4)
4. R&D	20.5 (4.4)	24.1 (17.3)	26.7 (10.7)	28.7 (7.7)	30.9 (7.6)	(10.8)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8.8 (15.4)	23.9 (27.5)	26.4 (10.3)	28.0 (6.1)	29.9 (6.9)	(12.4)
6. SOC	19.8 (4.0)	22.3 (12.9)	23.4 (4.9)	23.7 (1.4)	23.7 (△0.3)	(4.6)
7. 농림·수산·식품	20.0 (1.5)	21.0 (4.7)	21.5 (2.3)	21.9 (1.9)	22.2 (1.6)	(2.6)
8. 환경	7.4 (7.2)	8.8 (19.3)	9.6 (8.5)	10.1 (5.8)	10.6 (4.2)	(9.3)
9. 국방	46.7 (8.2)	50.2 (7.4)	53.4 (6.5)	56.4 (5.7)	59.5 (5.4)	(6.2)
10. 외교·통일	5.1 (7.2)	5.5 (9.2)	5.9 (6.2)	6.3 (6.5)	6.6 (5.6)	(6.9)
11. 공공질서·안전	20.1 (5.6)	20.9 (4.0)	21.8 (4.2)	22.7 (3.9)	23.5 (3.7)	(4.0)
12. 일반·지방행정	76.6 (11.0)	80.5 (5.1)	82.4 (2.4)	84.3 (2.3)	86.1 (2.2)	(3.0)

■ 보건·복지·고용 분야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재량지출 증가율은 중기 계획 5년간 연평균 10.0% 수준으로 전망된다(2019년 52.2 → 2023년 76.5조원).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일자리 창출 및 청년취업 지원과 서민 주거 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 등 고용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수요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 및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전세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 위기 아동·청소년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 교육 분야

교육 분야 재량지출은 2019~2023년 중기 계획기간 중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19년 11.6 → 2023년 15.1조원). 이는 주로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대학혁신 지원 및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 확대에 기인한다. 아울러, 동 기간 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연평균 4.5% 증가되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2019년 55.2 → 2023년 65.9조원).

미래사회를 위한 투자와 병행하여 교육비 경감, 평생교육 기회 보장, 선취업-후학습 지원 등 국민의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량지출은 2019~2023년 중기 계획기간 중 연평균 5.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19년 7.2 → 2023년 8.9조원) 국민체육센터 등 일상에서 쉽게 누릴 수 있는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콘텐츠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초 예술에 대한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 강소형 관광 기업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 혁신기반 마련 등 관련 투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R&D 분야

R&D 분야의 재량지출 증가율은 2019-2023년 간 연평균 10.8% 수준으로 전망된다.(2019년 20.5조원 → 2023년 30.9조원) R&D 분야는 혁신성장의 성과창출 가속화, 혁신역량 확충,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감안하여 재정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조기 공급 안정화를 위한 R&D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혁신성장 성과 확산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3대 핵심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셋째, AI 사회로 전환을 위해 DNA(Data, Network(5G), AI)에 투자를 강화할 것이다. 넷째, 혁신역량 확충을 위해 기초 및 혁신연구, 중소기업 R&D 등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다섯째, 대학과 강소특구를 매개로 한 R&D 성과의 사업화 제고와 지역이 주도하는 재난안전 등 사회문제해결에도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전략적 투자 강화와 함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R&R 기반 출연(연) 지원 강화, 일몰사업 관리 혁신제도 운영, 연구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적 제도 정비 등도 병행할 것이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재량지출 증가율은 중기 계획 5년간 연평균 12.4% 수준으로 전망된다.(2019년 18.8조원 → 2023년 29.9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량지출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창업·벤처, 소상공인, 에너지 분야 지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융 등 수출지원을 확대하고,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스마트공장·스마트산단 지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혁신 창업 생태계 확충을 위해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및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등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및 에너지복지를 위한 정책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 SOC 분야

SOC 분야 재량지출은 2019~2023년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19년 19.8 → 2023년 23.7조원) 이는 70년대 이후 집중 건설된 SOC의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선제적인 안전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생활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등 국민편의증진과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가 반영된 것이다.

향후 자연재해 등 위험요인의 증대, SOC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도 제고 등을 고려하여 SOC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한 투자를 지속 늘려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균형발전의 지속 추진 및 4차 산업혁명·미래 신산업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하는 한편,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균형발전 등에 기여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분야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량지출 증가율은 중기 계획 5년간 연평균 3.1% 수준으로 전망된다.(2019년 18.3 → 2023년 20.6조원)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청년들의 농어업·농어촌 유입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스마트 양식 확산 등 스마트 농어업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어업 분야에 적용할 계획이다. 예비 청년농·어업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청년들의 초기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관측 강화, 쌀 이외의 타작물 재배기반 확충 등을 통해 작물별 수급관리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어업인 복지확대 및 농어촌 지역개발을 통해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

■ 환경 분야

환경 분야의 재량지출 증가율은 중기 계획 5년간 연평균 9.6% 수준으로 전망된다.(2019년 7.2 → 2023년 10.4조원) 환경 분야는 미세먼지 저감, 붉은 수돗물 대응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붉은 수돗물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을 신설하고, 설치된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상수관로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저감하기 위해 수송부문에 대해서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장 배출원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비재정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면서, 영세사업장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에 의존하던 폐기물 처리에서 공공 처리를 강화하고 각종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여 국토를 청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 국방 분야

국방분야 재량지출은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방위력개선 투자 확대 및 전력유지비 적정수준 확보를 위해 2019~2023년 중기 계획기간 중 연평균 6.2% 증가할 전망이다.(2019년 46.7 → 2023년 59.5조원)

방위력개선 분야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 핵심전력인 ‘전략표적 타격’, ‘한국형미사일방어’, ‘압도적대응’ 등 핵·WMD 대응 전력에 집중 투자하고 무기 국산화, 방산기술력 확보를 위해 국방R&D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력운영분야는 군 전력 극대화를 위한 빈틈없는 군수지원 및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과학화 교육훈련 확대 등을 추진하고,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는 국방운영을 위해 장병 기본 복지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국방운영을 위해 국방인력구조 개편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통일 분야

외교·통일 분야 재량지출은 2019~2023년 중기 계획기간 중 연평균 7.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19년 4.8 → 2023년 6.3조원) 이는 ODA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를 지속 확대하고,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교류협력 확대 등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평화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영사조력법 시행(‘21년)에 대응해 재외국민 보호기반을 확충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 확산, 사회문화교류 지속 확대 등을 통해 평화통일 기반 구축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 공공질서·안전 분야

공공질서·안전 분야 재량지출은 2019~2023년 중기 계획기간 중 연평균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19년 20.1 → 2023년 23.5조원) 이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인프라와 현장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인권 보호를 강화하며, 생활속 안전관리 강화 등 재해예방 인프라 확충 및 해경·소방 현장대응능력 강화에 대한 투자 확대에 기인한다.

향후에도 공동체 중심의 예방 및 협업치안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적 보호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충 및 재소자 진료 확대, 취업지원 등을 통한 재소자 인권보호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해·재난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민 일상보호를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투자와 함께 대형·복합 재난대비 전국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일반·지방행정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재량지출은 2019~2023년 중기 계획기간 중 2019년 11.7조에서 국책은행 출자 완료, 통합청사 완공 등으로 2023년 9.1조원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소외·낙후지역에 대한 투자 및 생활밀착형 지역사업 투자를 확대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추진해왔다. 또한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통한 행정서비스 효율성 제고, 시민참여 확대·공공데이터 공유 등을 통한 열린 정부 혁신도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일자리·소상공인 매출 확대, 과거사 정리 및 기념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주도의 사회 문제 해결, 공공데이터 개방 등 열린 정부 구현도 지속 추진한다.

제 4 부

12대 분야별 투자방향

제4부 12대 분야별 투자방향

1. 보건·복지·고용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 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건강보험(1977), 국민연금(1988), 고용보험(1995), 국민기초생활보장(2000), 기초노령연금(2008) 제도 등 사회보장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최근에도 4대 중증 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질환),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2013), 기초연금 도입(2014) 및 장애인연금 확대(2014),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2015), 아동수당 도입(2018) 등 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해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복지 분야 투자규모는 연평균 8.0%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4	'15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 보건·복지·노동 분야(조원)	106.4	115.7	123.4	129.5	144.7	8.0%

* 본예산 기준

■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강화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통해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하였고, 2015년 7월부터는 급여별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을 다층화 하는 맞춤형 급여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새로 도입된 맞춤형 급여체계는 모든 혜택이 수급자에게만 집중되는 최저생계비 단일기준(All or Nothing)을 폐지하는 대신, 생계(기준 중위 소득의 30%) · 의료(40%) · 주거(43%) · 교육(50%)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다층적 급여체계로 개편하여 소득이 더 늘어나도 주거비, 교육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저출산 · 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확충

지난 5년간 저출산 ·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공보육 이용률 제고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아동수당을 신설(2018)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지원하였다.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2008) 뿐 아니라 주택연금(2007), 농지연금(2011) 등 다양한 노후 대비 수단을 도입하여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도입(2008) 및 대상자 확대, 노인 틀니(2012) 및 임플란트 급여화(2014), 치매안심센터 설치(2017), 치매 어르신 장기요양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2017) 등을 통해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었다.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중심 투자 확대

최근 5년간 어려운 일자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직접일자리,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실업소득 등 전반적으로 지출이 증가되어 왔다. 특히 '18년에는 에코세대 노동시장 유입 확대를 위해 취업 애로가 큰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설,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추가 등 청년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을 안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도입하였다.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1분위 중심 저소득층 소득개선

최근 저소득층 소득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비수급빈곤층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저소득 고령층이 1분위로 급속히 편입됨에 따라 고령층 근로소득 등 소득기반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노인일자리를 지속 확충하는 한편 기초연금도 인상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 경감 및 자산형성 지원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주거·의료·교육비 등 필수 생계비의 부담이 높아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 교육 지원 확대 등 서민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 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미래 대비 투자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제1·2·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2018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을 발표하여 정책 방향을 기존의 국가주도 성과 제고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미래 대비 투자로 전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역량 집중이 필요한 핵심 과제들을 중심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직업훈련 개편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노동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구직자 또는 재직자 대상 직업훈련도 미래의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을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개편하고, 훈련 단가를 인상하는 등 높은 수준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직업훈련이 취업을 촉진하고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여 갈 계획이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던 구직자들을 포괄하여 전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틀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2020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고, 고용서비스를 강화하여 취업의사 있는 구직자들이 생계 곤란 없이 조기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구직급여는 급여 수준 인상 등 보장성 강화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를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 조현병, 마약, 자살 등 국민건강 관리강화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응급개입팀 신설, 정신건강 전문요원 대폭 확충 등을 통해 정신질환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마약 및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 고위험군 집중 관리 및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결핵 및 감염병 등 국민건강 위협요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결핵 취약계층 무료검진 실시, 결핵전담간호사 확충 등 결핵 예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A형 간염 고위험군(만성간질환자, 혈액응고질환자)에 대한 예방접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각 분야별 맞춤형 지원사업과 함께 유망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보건의료산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제약·의료기기 분야 핵심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해 나가며 데이터, 네트워크, AI(D.N.A)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한 보건의료 산업 고도화를 지원할 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책임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권역외상센터, 공공어린이재활 병원(센터) 등 필수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 시설·인력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고용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19	'20	'21	'22	'23	연평균 증가율
□ 보건·복지·고용	1,609,972	1,815,703	1,984,090	2,131,655	2,290,930	9.2
▪ 기초생활보장	127,046	139,939	154,091	169,107	194,124	11.2
▪ 취약계층지원	34,019	39,587	44,480	49,312	57,038	13.8
▪ 공적연금	503,116	561,525	619,842	677,633	736,281	10.0
▪ 보 훈	55,588	56,761	56,657	57,022	57,575	0.9
▪ 주 택	257,309	300,865	325,371	341,639	350,577	8.0
▪ 사회복지일반	12,958	14,359	15,350	16,340	18,207	8.9
▪ 아동·보육	81,297	84,473	84,896	86,320	90,047	2.6
▪ 노 인	139,776	165,887	186,111	203,023	226,425	12.8
▪ 여성·가족·청소년	10,475	10,877	11,367	11,878	12,413	4.3
▪ 고 용	194,598	224,015	253,848	272,479	279,307	9.5
▪ 노 동	67,138	76,883	82,468	88,088	93,907	8.8
▪ 고용노동일반	5,449	5,296	5,630	5,998	6,320	3.8
▪ 보건의료	25,930	27,783	29,172	30,722	33,377	6.5
▪ 건강보험	90,187	101,956	108,991	115,941	128,822	9.3
▪ 식품의약품안전	5,086	5,497	5,816	6,153	6,510	6.4

* 본예산 기준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데 이어 국정과제상 부양의무자 단계적 완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는 추가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제외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25~64세 대상 근로소득 공제를 도입하는 등 탈수급 유인 강화와 함께 보장성 강화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기초연금 조기인상 및 노인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하여 노인·장애인의 소득기반을 확충한다. 특히,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어르신까지 기초연금 지급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여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노인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액의 소득을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의 수를 지속하여 늘려나갈 계획이다. 소득 공백을 방지하고자 2020년에는 기존 9개월 일자리 참여자들을 최소 10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근로기간을 연장한다.

■ 노인돌봄체계 개편 및 고령화 인프라 투자 확대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돌봄체계를 개편한다. 기존에 6개 재정사업을 통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돌봄서비스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고, 17여종의 서비스를 수요에 기반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확대도 병행하여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체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고령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돌봄로봇 및 보조기구 개발, 치매극복 연구, ICT 활용 지역사회 돌봄모델 개발 등 고령친화 R&D에 대한 투자를 병행한다.

■ 주거비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 주거안정 강화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였다. 또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에 따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19.7.30)에서 중위소득을 44%에서 45%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도 '19년 대비 급지별 7.5~14.3% 인상하는 등 지원대상과 최저 보장수준을 확대하였다. 향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마련으로 빈곤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최저주거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보장수준을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할 것이다. 2022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을 연평균 17만호씩 총 85만호를 공급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커 출산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해 임대주택을 4.5만호 확대 공급하여 총 89.5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30% 이상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을 도입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가 등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비롯하여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 세어하우스 등 청년 임대주택도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자금 지원, 전월세 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전세자금 융자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금리 수준을 우대하는 등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결혼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아동수당 확대, 보육체계 개편 등 보육·돌봄 지원 강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수당의 지원대상을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2020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반(16시 이후)을 도입하여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장보육료를 신설하여 지급하여, 연장보육반을 위한 전담교사가 지원됨에 따라 보육의 질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2021년 공보육 이용율 40% 달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및 직장 어린이집도 지속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 장애인, 위기 아동·청소년 등 소외계층 지원 강화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상생활 지원 분야인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개편하여 기능중심 인정조사 체계에서 수요중심 종합조사 체계로 전환한다. 급여량 분류를 4구간에서 15구간으로 전환하며 월 평균 지원시간을 17시간 이상 대폭 확대하고, 제도 개편과정에서 발생한 서비스 감소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존 수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연금도 기초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기반을 강화한다.

한편, 요보호아동 사례관리사를 확충하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빈곤·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위기·다문화·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안전망팀을 구축하고 이주배경 청소년 센터를 확충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5대 건강위험요인 예방·관리체계 확립

전국 17개 시·도에 응급개입팀을 신설하고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전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응급실과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전담요원을 대폭 확충하고,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획 점검 강화 및 생활하수 분석을 통한 마약류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3가에서 예방력이 높은 4가로 전환하고, A형 간염 고위험군(만성간질환자, 혈액응고질환자) 예방접종을 신규 실시한다.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긴급상황센터를 가동하고 신종 감염병 환자 전문 치료를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도 지속 지원한다.

■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수도권·대도시 위주의 의료자원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공공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전국을 70여개의 진료권으로 분류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농어촌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 개선을 지속 지원한다. 취약지역·필수의료분야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새로이 설립·운영하고, '19년부터 재추진되고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도 운영 성과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가가 치매 예방 및 검진, 요양, 치료 등 치매전주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이행한다. 전국 254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초기 상담 및 의료·요양시설 연계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중증 치매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공후견사업도 신규 지원한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통해 MRI·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의 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보건의료산업 지원 강화 및 응급의료체계 선진화

병원별 진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에 활용 할 수 있는 데이터 중심병원을 구축하고, 의료기기 '임상·인허가·제품화'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한 범부처·전주기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근거 중심의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위해 한의약 표준화·과학화를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의료시스템과 의료기기 등 우리의 유망분야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간 협력을 확대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지역사회 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그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확충 등을 통해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내년부터는 복지전달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보건 복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서비스 통합 및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지역에는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하여 국민의 복지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기업이 4차 산업혁명 분야 훈련을 주도하는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 훈련센터를 활용하여 대기업과 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의 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대기업의 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한 직업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고용위기가 현실화되기 전 단계에서 고용위기지역에 준하는 수준의 직업훈련 및 고용장려금 등의 우대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 발생을 미연에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도 도입할 예정이다.

■ 고용안전망 확충 및 고용서비스 질 대폭 개선

새로운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한다. 매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을 신설하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통해 1:1 밀착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복지서비스 연계, 구직활동기술 향상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는 대상 선정시 I유형과의 중복을 제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으로 개편하고, 직업훈련 참여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자력에 의한 조기 취업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 추가 채용시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당초 계획대로 2021년까지 신규 취업자를 지원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중장년에 대해서는 신중년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경력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여 인생 3모작을 지원한다. 참고로, 청년사업 등으로 최근 지출이 확대된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국고지원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수지를 개선하고, '23년까지 법정적립배율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적립배율 목표 >

구 분	'19	'19추경	'20	'21	'22	'23
▪ 적립배율	0.9	0.8	0.7	0.7	0.7	1.1

마지막으로, 노인·아이돌봄, 안전, 문화·여가 등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해나갈 계획으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1.8만명, 어린이집 보조교사 1.2만명, 장애인활동보조인 0.8만명 등 전년보다 9.6만명 확대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대 사회의 각종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구분	'19		'23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만명)	184	⇒	252
▪ 기초연금 수급자 수(만명)	538.6	⇒	661.3
▪ 돌봄서비스를 받는 독거노인 비율(%)	44.4	⇒	60.2
▪ 지역간 치료가능한 사망률 격차	1.33배 ('17년)	⇒	1.23배
▪ 지역간 응급환자 사망비 격차	2.4배 ('17년)	⇒	1.9배

■ 추진배경

- 최근 1분위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소득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며,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비수급빈곤층이 그 원인 중 하나로 판단

■ 주요내용: 기초생활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

-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자발적 근로유인 강화를 위해 25~64세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공제 30% 신규도입
-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50%(월 4.17→2.08%) 조기인하 ('22.10→'19.9월)
-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현실화로 수급요건 완화
 - * (주거용재산한도) 대도시 1→1.2억원, 중소도시 6.8→9천만원, 농어촌 3.8→5.2천만원
 - * (기본재산공제) 대도시 5.4→6.9천만원, 중소도시 3.4→4.2천만원, 농어촌 2.9→3.5천만원
- 아들(30%)과 출가한 딸(15%)의 부양비율을 10%로 하향

■ 기대효과

- 약 7.9만가구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신규 수급 예상

중증장애인 부양의무 제외	근로소득공제 30% 신설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인하	부양비 10%로 하향 조정	수급자 재산요건 완화
+1.6만가구	+2.7만가구	+2.5만가구	+0.6만가구	+0.5만가구

< 4대 공적연금 >

- (국민연금) 국가지원금 102억원
- (공무원연금) 기여금·퇴직수당 국가부담금 및 보전금 등 3.8조원
- (사학연금) 연금·퇴직수당 국가부담금 0.9조원
- (군인연금) 기여금 국가부담금 및 보전금 등 2.78조원

< 기타 보험 >

- (고용보험) 모성보호지원 및 수지개선지원금 0.6조원
- (산재보험) 산재보험 지원 0.4조원
- (건강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8.96조원*
 - * 예상 보험료수입의 14.0% 수준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 지원 1.15조원*
 - * 예상 보험료수입의 18.4% 수준

(단위: 조원)

'20년	공적 연금				기타 보험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고용	산재	건강	노인장기
수입	132.9	23.3	12.4	3.5	18.2	16.4	74.3	9.5
자체	67.9	16.1	5.3	0.7	13.5	9.0	63.9	6.3
정부	0.01	3.8	0.9	2.8	0.6	0.4	9.0	1.2
기타	65.0	3.3	6.2	0.05	4.0	7.0	1.4	2.0
지출	132.9	23.3	12.4	3.5	18.2	16.4	76.7	9.6
사업비	27.8	19.9	5.0	3.5	15.5	6.9	75.2	9.2
기타	105.1	3.4	7.5	0.06	2.6	9.5	1.5	0.4

■ 추진배경

- '95년 고용보험 도입, 고용안전망으로서의 핵심적 역할 수행
 - 다만, 고용보험제도 밖에 존재하는 취업자가 상당수(전체 취업자 약 2,700만명 중 1,200만명, 45%)이고 고용보험 가입 이직자 중 실업 급여 수급자는 약 1/5 수준에 불과('18년 139만명)
- ⇒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대상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 강화
- (지원내용) 국가는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대상은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
 - 소득지원: 근로능력 및 구직의사가 있는 자 중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고액자산가 배제)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지원
 - *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취업지원: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기대효과

- 근로빈곤층 중 고용서비스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①취업률은 16.6%p, ②근로기간은 1.06개월 더 높고, ③고용보험 가입 일자리를 얻을 확률도 22.1%p 향상 (노동研, '18년)

2. 교육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지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4년 40.9조원에서 2018년 49.5조원으로 연평균 4.9% 증가하였다.

이러한 재정 확충을 통해 누리과정 운영지원, 저소득층 교육비 경감, 온종일 돌봄체제 구축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확대 등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소통 및 협동능력을 기르는 융합 교육과정 운영과 예술·체육 교육 확대를 추진하였다. 자유학기제와 혁신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중심으로 교과수업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진로탐색 활동을 지원하였다.

■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및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고등교육 지원

누구나 경제적 부담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확충해 왔으며, 다자녀 장학금 지원제도의 수혜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14년 1학년 → '17년 1~4학년)하였다.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학생들이 재학 중 등록금 상환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 대학역량진단 평가를 통해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을 선정하였고, 2019년부터 ACE+(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 PRIME(산업연계 교육 활성화선도대학사업), CK(대학특성화사업) 등 기존의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일반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개편하였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SCK(특성화전문대학사업)을 개편하여

전문대학혁신사업으로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대학·전문대학은 자율적으로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이행하게 되었다.

또한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사업을 추진하고, 대학 연구기반 확충 및 석박사급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BK21(Brain Korea 21) 플러스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충해 왔다.

■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및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

청년고용 창출 및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고, 고교 졸업 후 진학보다 취업을 선택한 재직자들이 언제든지 역량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후학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7년에는 평생학습 중심대학사업과 평생학습 단과대학 사업을 통합 개편하여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시행하였고, 2018년 3월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였다. 2018년 5월에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금 II유형)을 신설하여, 고졸 회사원들이 학비 부담없이 언제든지 대학 진학을 통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비문해 학습자, 농어촌 주민 등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확충하여 소득 및 지역 여건에 관계없이 등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8년 평생교육바우처사업을 시작하였고, 2018년부터는 장애인들에게도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 교육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4	'15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 교육 분야(조원)	50.7	52.9	53.2	57.4	64.2	6.1%

* 본예산 기준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4차 산업혁명 대비 핵심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실용적인 교육·연구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들이 각각의 여건과 환경에 맞는 자율적인 혁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약을 통해 이를 지원한다. 2020년부터는 혁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으로 성과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지역대학 중심으로 발전 아젠다를 기획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형 대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대학의 교육·연구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 실험실습기자재를 교체하고 첨단기자재를 확충하며, 석면제거·내진보강·실험실습실 위험물 관리 강화 등 안전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기초학문 육성, 공적역할 수행 등 국립대학이 사회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으로 20주년을 맞는 BK21(BrainKorea 21)사업의 3단계 사업 종료('20년 상반기)에 따라, 2020년부터는 4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 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 육성 규모를 확대하고, 석·박사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 대학원이 연구 역량을 집적화하고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초중등 교육단계 미래인재 양성 투자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2018년 이후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 되었다. 이에 소프트웨어 교육의 정착을 위해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선진·고도화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에 적합한 학교 공간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부설학교를 중심으로 창의융합형 과학실 선도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학생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구현할 수 있는 융합형 공간 조성을 위해 무한상상실 구축·운영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교육비 부담 경감

헌법상 기본권인 교육권을 고교 단계까지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2019년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학년 대상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교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실질경비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급여 부교재비 지원단가를 1.6배 인상하는 등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부터 학자금대출금리를 2.2% 에서 2.0%로 인하하고 최저임금 상승 및 교통비를 고려하여 교내·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기존 우수장학금인 인문100년·예술체육비전장학금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기술인재(우수)장학금'을 신설하여 전문대학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안전한 교육환경 투자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여 학내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석면·드라이비트 등 위험물질에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한다.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국립대학 시설 내 석면을 조기 제거하기 위해 연간 집행되는 석면제거 예산을 확대한다. 또한 실험실습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 취급·저장소를 설치하고, 고위험물질을 다루는 실험실과 일반교실·실험실을 분리하며, 안전장비를 확충하여 안전한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 및 연합기숙사 건립·운영을 지속 확대하여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 평생학습 활성화

고령화 시대에 급변하는 산업수요에 적응하고, 자기개발을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한다. 한국형온라인공개 강좌시스템(K-MOOC)에 AI 등 신규강좌를 개발하고, 사이버대 산업 맞춤형 강좌 지원을 통해 언제든지 양질의 대학 강의를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바우처 지원을 확대하여 소득 여건에 관계없이 평생학습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성인 문해학습자들의 기초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십억원, %)

구 분	'19	'20	'21	'22	'23	연평균 증가율
□ 교육 분야	70,649	72,483	76,039	79,144	81,952	3.8
○ 유아및초·중등교육	59,383	60,296	62,953	65,766	67,218	3.1
○ 고등교육	10,258	10,982	11,694	11,904	13,267	6.6
○ 평생·직업교육	877	1,068	1,250	1,326	1,312	10.6
○ 교육 일반	131	137	142	148	155	4.2

* 본예산 기준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대학의 역량 제고 유도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을 갖춘 대학들이 교육·연구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대학 스스로 자율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성과 모니터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사회가 지역대학을 육성하는데 보다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형 대학을 선정하고 지원한다. 지역혁신형 대학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의 노력으로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역 인재 육성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맞춤형 교육을 설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학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 내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 산업수요맞춤형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력

그 간 대학 내 산학협력 문화를 조성하고, 산업과 대학교육 간 연계를 강화해 온 LINC+사업을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등 분야와 관련된 교육과정과 융합전공의 개발·운영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선도형 대학을 일반대 기준 20개교(약 7.2천명)에서 40개교(약 14.4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사업(BRIDGE+)의 수혜대학을 18개교에서 24개교로 확대하여, 산학협력으로 얻은 결실이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9년부터 시작된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을 확대하여 기업과 대학 간의 공간적인 접근성을 향상하고, 상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뛰어난 소질을 갖춘 저소득층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영재키움 프로젝트)을 확대한다. 과학 분야에 소질이 있는 소외계층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진로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이공계 진출기회를 제공하는 <사다리프로젝트>도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글로벌 현장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국비유학생 선발과견 기회를 확대하여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 지원도 확대하여,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9 개정 누리과정 시행을 앞두고 영유아들을 위한 질높은 교육과정 제공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를 지속 지원한다. 2020년 기준으로 약 120만 명의 만 3~5세 아동들이 유치원·어린이집에 관계없이 개정 누리과정에 따른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투자효과가 높은 유아교육 단계에서 차별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교육 공공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어린이집 교사를 위한 처우개선비도 국고로 지원된다.

■ 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기술인의 육성과 취업시장 일자리 mismatches 해소하기 위해 직업계열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율·참여 인원이 최근 급감하면서 고졸취업이 위축될 위기에 있어 체계적인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일선 학교에서 현장실습 여력이 있는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체와 학교를 긴밀하게 연결한다. 현장실습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내 실습전담직원(기업현장교사) 수당 등 실습비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취업하는 시기에는 맞춤형 취업 지원과 함께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생애 첫 출발을 응원하고 생활 기반 마련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도 학교를 통해 취업연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졸맞춤형 취업지원 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교육 공간 혁신

창의적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및 협동능력 등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데 적합한 학교·교실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무한상상실·소프트웨어 공간혁신 모델학교 등 미래지향적 교육공간 설계를 지원하고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자유로운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지능정보·융합교육 모델을 제공하고, 이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석면을 제거하고, 드라이비트로 인한 화재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 공간의 안전도를 개선한다.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국립 유·초·중·고등학교 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운영한다. 국립대학의 경우 실험실습실안전환경 조성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고위험 물질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연구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진위험 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해 내진보강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구분	'19		'23
▪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28	⇒	40
▪ 고교무상교육 대상학생(만명)	49	⇒	125
▪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명)	32,000	⇒	56,000
▪ K-MOOC 강좌수(개)	650	⇒	1,200
▪ 학교시설 석면제거(천 m²)	8,265	⇒	18,414
▪ 학교시설 내진보강(동)	5,459	⇒	13,707

■ 추진배경

- 초·중·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 필요

※ 고교 진학률 99.7%('18, KEDI)로 이미 고교 교육 보편화 단계임

-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 격차 해소 필요

* 국·공립고 평균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대금 : 연간 약 160만원

■ 주요사업내용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제외학교)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 (시행방안) 보다 많은 학생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9.2학기 고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1년 완성
- ('19.2학기) 3학년 → ('20) 2, 3학년 → ('21~) 전 학년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고등학교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 부담 경감

※ 월 13만원의 가처분소득 증대('19년 최저임금 8,350원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

-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실현

■ 추진배경

-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대학원 연구역량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

■ 주요사업내용

- (BK21 플러스 사업) 기 선정된 사업단(팀) 소속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연구 활동을 위해 연구장학금* 등 지원

* 단가 : 석사 월 60만원, 박사 월 100만원 이상

- (BK21 후속사업) 신규 선정 교육연구단 소속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에 연구장학금*, 국제화 경비 등 지원 및 대학원 혁신지원비 신설

* 단가 : 석사 월 70만원, 박사 월 130만원, 박사수료 월 100만원

- (지원범위) 핵심학문분야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미래인재양성사업'과 혁신성장 선도 인력을 양성하는 '혁신성장선도인재양성사업'으로 지원

	미래인재양성사업	혁신성장선도인재양성사업
방향	핵심학문분야 후속세대 양성	혁신 성장을 선도할 연구인력 배출 및 사회 문제 해결 기여
신청 단위(안)	대학원의 단일 학과(부)	융복합 학문 성격을 지닌 대학원 및 대학원 단일학과, 협동과정, 융합전공 등

- (대학원 혁신지원) 기존 사업단 단위의 분절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학본부가 대학원 전체 교육 및 연구 경쟁력 향상을 지원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우수 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학업·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연구 성과 제고 및 국내 대학원의 학술연구역량 강화
- 핵심 선도사업 및 혁신성장동력분야,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융복합 인재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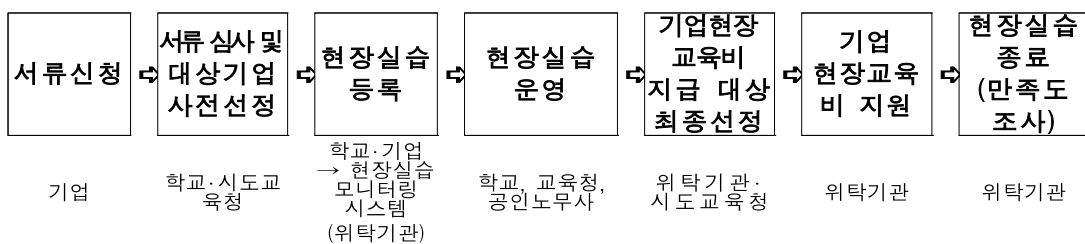
■ 추진배경

- 직업계고 학생들의 가장 큰 취업경로인 현장실습이 안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
- 기업현장교사 배치, 교육비 지급 등 기업에 유의미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현장실습 내실화 및 고졸취업 활성화

■ 주요사업내용

- (지원대상) 현장실습 기업 20,000개소
 - * 현장실습 선도기업 '20년 20,00개소까지 확대 목표
 - 선도기업 현황(개소) : ('18) 8,000 → ('19) 15,000 → ('20) 20,000
- (지원내용) 현장실습 지도·관리 및 교육비(월 50만원)* 2개월 간 지원
 - * 기업현장교사 수당 월 40 + 교육훈련비 월 0~20(학생 1명 참여시 미지급, 2명 참여시 10만원, 3명 참여시 20만원) / 현장실습 운영 기업당 평균 2명 학생 참여

<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사업 절차(안)>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기업현장교사의 배치와 지원을 통해 현장실습 기업 참여 유도, 학생 권익 보호 강화 등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
- 부처별 일자리 정책 연계를 통해 선취업 후학습 정책 활성화 및 현장실습 적응력 향상을 통한 안정적 취업 정착 등 고졸 취업지원으로 청년 고용률 증가

■ 추진배경

- 고졸 취업희망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및 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기업정보 제공 서비스 등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 (학력별 구직 소요기간) 고졸>전문대>대졸이상 / (주요 취업통로) 대졸자 공개채용시험 (37.4%), 고졸자 가족친지 소개 추천(31.2%) [2009 한국고용정보원]

■ 주요사업내용

- 고등학교 취업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앙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 ①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간 협력체계 마련
 - ② 플랫폼 구축 및 시·도 취업지원센터 역량강화
 - ③ 우수기업 발굴 및 홍보, 현장실습 및 취업 현황 관리·모니터링, 고졸 취업자 경력개발 등 지원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희망하는 모든 고등학생에게 현장실습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원하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

3. 문화·체육·관광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위해 문화 분야 투자 지속 확대

문화재정 투자의 기본방향은 국민의 문화 참여 확대 및 격차 해소, 문화 예술 진흥, 문화와 산업의 융합 등을 중심으로,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14~'18년간 문화분야 재정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4.5%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4	'15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 문화·체육·관광 분야(조원)	5.4	6.1	6.6	6.9	6.5	4.5%

* 본예산 기준

■ 생활 속 문화가치 확산 및 문화격차 완화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문화 시설에 대한 이용할인 혜택 등을 적용해 왔다. 2016년 5월에는 문화 기본법 개정('16.5.29)을 통해 '문화가 있는 날'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7년 7월부터는 매달 마지막 주간을 '문화가 있는 날'로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연간 300만 명 이상이 매달 마지막 주간에 공연장과 전시관 및 다양한 장소에서 문화행사를 접하고 있다.

- *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 : ('14년) 19% → ('18년) 68.9%
- *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 ('14년) 28.4% → ('18년) 59.8%
- *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프로그램 수 : ('14년) 15,962개 → ('18년) 28,564개

이와 동시에 문화향유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다. 생활 가까이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지역 문화 시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체육·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였다.

* 문화누리카드 발급매수 : ('14년) 672천매 → ('18년) 1,592천매

■ 국민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 및 기초예술·예술인 복지 확대

지난 5년간 기초예술 활성화 및 국민 예술 참여 확대를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저소득 예술인 창작준비금 확대를 통해 예술인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였으며, 예술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예술인 복지 사업을 확대하였다. 예술인의 기업·기관 파견을 지원('18년 1,000명, 232개 기업)하였으며,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종합시스템인 예술인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 예술창작준비금 수혜자 수 : ('15년) 3,523명 → ('18년) 4,501명

아울러 지역문화거점인 박물관·미술관·도서관·문예회관 등 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생활밀착형 문화공관 조성을 통해 주민 생활권 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등 :

('14년) 2,375개소 → ('18년) 2,749개소

또한 소외계층 및 지역을 찾아가는 '신나는 예술여행'과 지역 문화예술 회관을 거점으로 지역민이 공연·전시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확대를 통해 예술 향유 사각지대를 축소하였으며, 유아·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확대 하였다.

* 소외지역 문화순회공연 : ('14년) 2,001회 → ('18년) 5,758회

■ 핵심 콘텐츠 집중 육성

게임·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진출 지원 등으로 핵심 콘텐츠 대외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4차 산업시대 융합형 인재 양성 및 창작지원을 통해 콘텐츠 산업 기반과 역량을 강화하였다. 지역콘텐츠 산업의 지원을 위한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를 구축(2개소)하고, 지역 기반형 콘텐츠 코리아랩(11개소)도 지속 운영하였다.

더불어 콘텐츠 분야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완성보증 및 펀드사업을 추진하여, 펀드 투자로는 약 2.1조원, 완성보증을 통한 융자는 약 5,180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에 적합한 상품설계를 통해 이차보전 상품을 출시하여, 콘텐츠 기업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 ('14년) 200억원 → ('18년) 540억원
- * 융자 보증 규모 : ('14년) 20억원 → ('18년) 100억원

■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의 균형성장 도모

모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지도자 양성 및 배치, 체육시설 확충 등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동시에 방과 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지원, 대학운동부 지원 등을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선수촌 시설 확충, 체육단체 통합, 우수선수 육성 시스템 개선 등 전문체육 육성에도 힘써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이 상호 보완 하에 선순환하는 선진국형 스포츠시스템의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 *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 ('14년) 17개소 → ('18년) 76개소
- * 국민체육센터 확충 : ('14년) 203개소 → ('18년) 256개소
-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14년) 2,480명 → ('18년) 2,600명

■ 국내관광 활성화 등 내수창출 기여 및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

국내관광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해 여행주간 캠페인을 전개하고, 광역권 관광개발, 창업지원 및 우수 관광벤처기업에 대한 상품개발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 국내여행 참가 횟수 : ('17년) 28,497만회 → ('18년) 31,115만회

국제회의업(MICE), 의료·웰니스 관광, 크루즈 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방한 관광시장 고품격화 및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해외시장별 외래 관광객 유치활동의 적극적인 전개, 전략적 해외 홍보활동 강화, 테마별 관광 상품 개발 등도 함께 추진하였다.

* 외래관광객 입국자수 : ('17년) 1,134만명 → ('18년) 1,535천명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콘텐츠 산업 육성 및 해외 확산 지원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가상·증강현실 등의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를 육성하고, 콘텐츠 분야 투·융자 지원 등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향유 인프라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한류 확산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내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역량 고도화 컨설팅을 실시하고,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음악, 영화, 만화 등 주요 한류 콘텐츠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소외·취약계층의 문화 향유기회 제고와 예술인 복지 강화

국민의 문화 접근성 개선 및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을 2021년까지 1인당 연 10만원으로 상향하고('19년 1인당 연 8만원), 저소득계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강좌이용권을 8개월까지 수혜기간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문화·체육·관광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대상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생활체육용품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예술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창작준비금 대상을 확대하고, 일반 금융제도에서 소외되어 온 예술인을 대상으로 주택마련 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늘릴 예정이다.

■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혁신성장 지원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제적 관광 명소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을 관광거점도시로 지정(광역 1개, 기초 4개)하여 브랜드 구축,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적 관광 상품·아이디어를 지닌 관광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성장단계별 지원을 추진한다. 창업-성장-도약-해외진출의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도입함으로써 관광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기업을 육성하여 관광산업 활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K-POP 공연장 확충, 세계유산(K-헤리티지)의 체계적 홍보·활용 등 한류를 활용한 외래 관광객 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생활체육 저변 확산과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선호도가 높은 수영, 농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다양한 연령·계층의 지역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클럽도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포츠 산업 융자, 창업 기업 보육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십억원, %)

구 분	'19	'20	'21	'22	'23	연평균 증가율
□ 문화·체육·관광분야	7,250	7,969	8,332	8,646	8,955	5.4
○ 문화예술	3,107	3,489	3,612	3,679	3,728	4.7
○ 관광	1,414	1,384	1,535	1,671	1,792	6.1
○ 체육	1,465	1,688	1,739	1,808	1,901	6.7
○ 문화 및 관광 일반	363	345	361	379	397	2.3
○ 문화재	901	1,064	1,085	1,109	1,137	6.0

* 본예산 기준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생활 밀착형 체육시설 공급 확대

국민의 활기찬 삶을 위하여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언제 어디서나 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이 보급될 예정이다.

■ 실감형 콘텐츠 향유 인프라 확충

5G 세계 최초 상용화('19.4.3)를 계기로 전후방 산업 동반 성장, 미래 시장·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해 일반국민의 실감형 콘텐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 ICT 기술 활용 등을 통한 국내관광 활성화

ICT 기술을 활용해 관광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스마트 관광도시를 시범 조성하고,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민관광 지원을 위해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청소년, 청년, 시니어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을 확대한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구분	'19		'23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81.5	⇒	85
▪ 문화콘텐츠산업 매출규모(조원)	122.6	⇒	148
▪ 생활체육참여율(주 1회 이상, %)	63.0	⇒	65.0
▪ 3대 전략시장* 외래관광객 유치(만명) * 비중국 중화권, 아시아·중동, 일본	835	⇒	995

■ 추진배경

-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 격차 완화
- 現 지원금 규모로는 공연, 관광 등 향유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에 이용하기 어려워 다양한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제한

■ 주요사업내용

- 경제적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6세 이상) 대상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 지원금액: ('19년) 연 8만 원 ⇨ **('20년) 연 9만 원**
 - * '21년까지 1인당 지원 금액 연 10만 원까지 상향 추진
- 이용분야: 문화예술(공연·전시·영화 관람, 도서·음반 구입 등), 국내 여행(숙박, 관광지, 교통 등), 체육 활동(4대 프로스포츠 관람, 운동용품 구입, 체육시설 이용 등)
- 발급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mnuri.kr) 신청
 - * '19년부터 기존 수혜자는 ARS 전화로도 재충전 가능

■ 기대효과

-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 기본권 보장으로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기반 조성

■ 추진배경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을 지원하여 예술경력단절 방지 및 창작여건 개선 필요
 - * 예술경력단절 경험자 비율은 '15년 15.9% → '18년 23.9%
 - 예술활동 포기 이유 중 수입 부족이 68.2% ('18년 예술인실태조사)
- 수도권에 비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지역예술인 등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사회·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 복지 강화

■ 주요사업내용

- 낮고 불규칙한 소득으로 경제적 위기에 놓여 있는 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 지원(1인 3백만원, 격년제)
 - (지원규모) : ('19년) 5,500명 ⇨ **('20년) 12,000명**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완료자(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산출)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와 연계하여 소득인정액 산출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상·하반기 분할 신청)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예술가의 직업 및 작품활동 안정을 통한 국가 문화예술 발전 기반 조성

■ 추진배경

-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안건인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에서 지역혁신 대표 과제로 관광거점도시 육성 발표(‘19.4.2.)
- 서울, 제주 등 일부 지역에만 외래 관광객이 집중되고 있어, 외래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관광도시의 전략적 육성 필요

■ 주요사업내용

- (국제관광도시) 서울, 제주 외 세계적 관광도시의 잠재력을 보유한 광역 지자체를 ‘국제관광도시’로 육성(1개소)
 - 한국 관광의 새로운 목적지가 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 등 전략적·집중적 지원
- (지역관광거점도시) 일정 수준 이상의 인프라와 매력*을 갖춘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광 콘텐츠·마케팅 등 종합지원(4개소)

* 예) ▲전통적인 지역 중심성 및 주변 연계·파급력, ▲광역 교통접근성,
▲관광 매력도 ▲기본적 관광 수용태세 보유

■ 기대효과

- 서울 등 일부 지역 외에도 외래 관광객이 인지할 수 있는 새로운 대표 관광도시로서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
- 외래 관광객 방문 확대 및 지역관광 발전 도모

4. R&D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 사람 중심의 R&D 투자 강화

정부는 2019년에 연구자가 혁신을 주도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사람중심의 국가 R&D 강화를 목표로 집중 투자하였다.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5G 등 유망분야 기초·핵심기반기술과 융합 기술 등 미래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선도형 R&D에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 성장의 중추인 중소기업 전용 R&D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2018년 8월에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한 이후, 플랫폼 경제와 선도사업에 투자를 강화하였다.

과학기술기반의 고급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정부는 미래 성장 유망 분야 혁신인재 1만명 양성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실행하고 있다.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주도하는 기초연구에 정부 예산을 확대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연구생태계 구축에 지원을 강화하였다. 공공성·범용성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규제개선과 연계하여 R&D에 투자하고자 하였다.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진, 산불 등 재난·안전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R&D에 투자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지원을 늘리는 한편 기후 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R&D에도 투자의 중점을 두었다.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지출효율화 지속

정부 R&D 투자가 2019년에 20.5조원으로 사상 처음 20조원 시대를 열었고, 투입 증가에 따라 1차적 R&D 성과인 논문, 특허, 사업화 실적도 확대되었다. 최근 5년(2013~2017)간 주요 지표의 정부 R&D 성과 추이를 보면, SCI(E) 논문 성과의 연평균 증가율은 9.6%, 국내 특허등록 실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8.5%, 사업화 건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로 모두 양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아직 투자 규모에 걸맞은 혁신적 성과 창출이 미흡하다. 국가 R&D 혁신방안(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SCI급 논문 산출 실적은 2016년에 세계 12위이나 5년 주기별(2012~2016)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는 논문 수 상위 50개 국가 중 33위 수준이다. 그리고 미국·일본·EU 삼국 특허 수는 OECD 회원국 중 5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술무역수지는 2016년 41.5억 달러로 적자이다.

이에 재정지원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지출을 효율화하고 중점분야에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업간 유사·중복성을 심층 검토하여 해당 사업을 통폐합하고, R&D 성과평가결과 부진한 사업은 예산을 감액하는 등 지출효율화를 하고 있다. 관행적 장기계속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일몰 적정성 재검토, 일몰 후속사업 기획 내실화 등을 연계한 일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지출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혁신성장 선도사업 등 국정과제 연계 사업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 R&D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4	'15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 R&D 분야(조원)	17.8	18.9	19.1	19.5	19.7	2.6%

* 본예산 기준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확대

최근 일본의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에 대응하여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조기 공급을 지원하여 경제 체질을 개선할 것이다. 자립화에 필요한 원천 및 핵심기술 확보와 기 보유한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수요기업 투자 연계 등 소재·부품 중기 전용 R&D도 신설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기술의 신뢰도 향상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과 공공 테스트 베드 장비를 확충하는 등의 기반구축 투자도 확대할 것이다.

AI 혁신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D.N.A.(Data, Network(5G), AI)에 투자를 강화할 것이다. 사회문제 해결과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Data와 AI의 융·복합 R&D에 지원을 확대하고 부족한 AI 인재양성에도 중점을 둘 것이다. D.N.A. 핵심·선도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계기로 국내·외 시장 선점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5G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초기 수요를 창출하는 데 지원할 것이다. 5G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고 시험·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도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혁신성장 성과 확산을 위해 3대 핵심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육성에 투자를 강화할 것이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파급력 있는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중소기업 공동 활용 테스트베드 지원 등 초기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맞춤형 의료 서비스 구현을 위해 국가 의료 빅데이터 구축과 차세대 의료기기, 신 의료기술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미래자동차 분야에서는 조기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고도화하고 소비자 수용성 제고를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침체에 빠진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산업성숙도, 글로벌 경쟁력 등을 검토하여 공정혁신, 혁신성장동력 창출 등 지역 기반의 제조업 혁신을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개발 특구 및 강소특구에서 중심으로 R&D성과물의 사업화를 강화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신기술·신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데 투자를 강화할 것이다.

■ 혁신역량 확충을 위한 기초 및 혁신연구 지원 확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총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현장의 예측가능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수월성(신진·중견·리더연구)과 안전성(생애 첫 연구, 기본, 재도약연구), 개인-집단연구 비율, 연도별 투자규모를 고려한 기초연구 투자포트폴리오를 먼저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연구자금을 배분하는 등 기초연구 지원의 전략성도 강화할 것이다.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적 성과에서 벗어나 미래를 선도하고 한계돌파형 성과를 내기 위해 고위험·혁신형 R&D에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과학난제극복, 미래 신시장 창출, 국민생활문제 해결 등 국가전략분야를 중심으로 혁신·도전형 R&D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과제기획, 선정, 평가, 연구수행체계, 보상체계 등 전반적 R&D 프로세스를 모험·도전적 연구에 맞게 개선할 것이다.

■ 산학연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AI, 양자컴퓨팅 등 혁신성장 분야 문제해결형 박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세대 연구인력 양성 등 현장수요에 기반한 이공계 대학의 교육·연구에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토대로 한 실험실 창업 등 대학발(發) 기술창업을 촉진할 것이다.

출연(연) 및 직할(연)의 경우, 기관별 R&R에 따라 강화·축소 분야를 정의하고, 주요 사업과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을 연계하여 핵심투자 분야를 사업으로 명확하게 구조화하여 집중 지원할 것이다.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중소기업 혁신 지원, 기업규모 및 역량에 따른 수준별 맞춤형 R&D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전용 R&D의 투자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의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 확충

국민과 지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재난·안전 연구에 적극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과 국민으로부터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국민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별 재난취약도, 재난원별 파급효과와 이슈 등을 고려한 지역특화 연구도 추진할 것이다. 재난안전 R&D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향상하고 기술을 통한 일상생활의 안전보장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문제 신속해결을 위한 부처협력 연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재난정보 서비스, 리빙랩 실증 R&D 등에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화과학 기초연구부터 정신건강, 만성질환, 노인돌봄·재활·보조 기술 등 고령자 헬스케어 기술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건강·의료 패러다임을 발병 후 치료에서 예측·예방·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 헬스케어 기반으로 일상 예방·관리와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중심으로 R&D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 R&D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19	'20	'21	'22	'23	연평균 증가율
□ R&D 분야	205,328	240,874	266,724	287,280	308,992	10.8
○ 과학기술 부문	63,732	72,078	81,900	90,068	95,785	10.7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	44,867	57,630	62,771	68,667	70,310	11.9
○ 교육 부문	20,392	23,035	26,148	26,877	27,805	8.1
○ 사회복지·보건·환경	9,391	10,431	10,183	10,041	9,999	1.6
○ SOC 부문	7,973	8,783	8,520	8,351	8,267	0.9
○ 기 타	58,975	68,917	77,201	83,275	96,824	13.2

* 본예산 기준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R&R 기반 출연(연) 지원 강화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기대 증가 등 과학기술정책 여건이 변화하는 가운데 정부 R&D 20조 시대에 우리나라 과기정책의 중심점인 출연(연)의 역할 정립과 미래 방향 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출연(연)의 역할로 D.N.A 원천기술, 미래산업 핵심기술, 지속가능 사회 구현, 거대과학 사회기반 기술, 국민생활 안전기술, 과학기술 인프라 및 서비스, 지역발전 특화기술, 통일한국 대비 기술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에 부합하는 출연(연)별 R&R(Role & Responsibility)을 확립하고 있다.

출연(연)이 책임성을 가지고 R&R을 이행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R&R 기반의 평가 및 예산 편성을 강화해야 한다. 출연(연)의 R&R 이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이행실적을 예산 편성과 연계하고 R&R 기준에 따라 사업구조 및 인력운영계획을 혁신적으로 연계 개편한 출연(연)에 예산 및 인력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적 난제 해결,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 분야에서 체감형 성과창출을 위한 공동임무기반의 출연(연)간 연구협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몰사업 관리 혁신 제도 운영

정부는 성과가 저조하거나 목표가 불확실한 관행적인 장기계속사업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 차원에서 일몰제를 추진하여 왔다. 경직성이 높은 장기계속사업에 산업구조, 민간수요 등 환경변화를 시의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 R&D사업의 탄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도입 배경이었다.

그러나 제도추진 과정에서 연구현장에서 연구 성과가 높고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을 인정받는 사업도 일괄적 기준에 따라 일몰되는 경우도 있었다. 일몰 후 재 기획된 사업이 일몰 전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는 등 사업 기획이 부실하거나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이 되는 등 부작용도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일몰 제도의 원래 목적을 유지하면서 관련 법령이나 국가간 협약 등에 따라 추진이 필요한 사업, 국정과제 수행 사업 등의 연구단절을 방지하고 장기적·안정적인 투자가 되도록 기준과 절차에 입각해 일몰사업 연장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일부사업의 수행 기간을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

■ 연구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적 제도 정비

정부 R&D 투자 총량의 지속적 확대로 2019년에 정부 R&D 총 투자 20조원 시대를 열었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등 정책 여건도 변화하는 가운데 정부 R&D 추진 체계의 혁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높은 R&D 투자에 비해 질적 성과가 아직은 미흡하며 이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낡고 복잡한 정부 R&D 관리 시스템이 꼽히고 있다. 정부 R&D 공통 규범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2001년 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으며, 각 부처·사업별로 R&D 관리와 관련한 개별 법률 및 관리규정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과제지원시스템과 연구비관리시스템,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이 부처별로 산재한 비효율적 R&D 관리체제로 연구현장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불필요한 규제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정부 R&D 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 정부 R&D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며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부처 공통규범 마련이 필요하다. ‘공동관리규정’과 각 부처의 R&D 법률 및 관리 규정 등을 총괄하여 모든 정부 R&D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일원화된 제도로 정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기획-선정-수행-평가-보상-행정’의 R&D 전주기에 걸쳐 연구자가 중심이 되도록 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 고도화

그간 정부 R&D 투자는 다른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각 부처별로 R&D 관련 기술정책, 산업정책, 인력 양성정책 등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분야별 종합적·거시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곤란하였다. 신규사업 기획 시 타 부처 사업과 연계성 검토 없이 추진되어 유사·중복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연구성과를 통해 도출된 제품 및 서비스가 과도한 규제나 제도정비 미흡으로 인해 시장진입이 제한되기도 하였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 자문회의는 R&D 성과물이 사장 없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활성화하고 정부 R&D 투자의 효율적인 기획과 배분·조정, 관리를 위해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인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R&D PIE)’을 2018년에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정부 R&D 투자의 전략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향후에는 R&D PIE 적용 대상을 4대 플랫폼·8대 선도사업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투자 필요영역에 대해서는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R&D PIE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R&D PIE 분석을 통해 드러난 투자필요영역에 대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면, 재정당국과 과기자문회의가 재정지원-부처협업계획-제도개선계획 등을 패키지로 심의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그리고, 연말에 실적을 점검하여 차년도 예산편성 시에 이를 활용한다. 이럴 경우, 부처 협업 정착, 기술개발이 제도개선, 관련 정책 등과 긴밀히 연계됨으로써 R&D 투자의 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다.

■ 중소기업 R&D 지원의 전략성 제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력산업의 위기 등 산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성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인 중소기업전용 R&D 지원과 함께 그간의 중소기업 R&D 지원을 대폭 혁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중소기업 R&D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여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 R&D 지원은 단기 소액 중심으로, 저변확대에는 도움이 되나 Scale-up을 통한 혁신성장 기여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역량수준별로 지원에 차등을 두어 창업 초기단계의 기업은 단기·소규모 지원을 통해 기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역량의 축적 정도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하는 등 R&D 지원과 중소기업 역량수준이 부합하도록 지원구조를 체계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범부처 차원에서 일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중소기업 R&D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통합 R&D 지원·관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정부 R&D사업을 수행한 기업의 이력을 관리하는 R&D 이력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NTIS 등 기존 정보시스템을 연계·확충하여 정부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 인력양성 R&D 지원의 체계화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R&D 인력양성 지원 사업의 예산 체계를 부처별로 단순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부처별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하나의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으로 통합하고 지원 유형별로 내역사업을 구성하여, 이 체계화된 사업 구조 내에서 정부재원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하고 공백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 분야 인재양성에 전략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분야별 R&D 인력양성 지원사업 투자현황을 연구인력(학·석·박사 과정, 박사후 연구원), 산업인력(재직·퇴직 기술인력) 등 지원대상과 교육·훈련, 연구 지원, 현장연수·인력활용, 해외연계, 학위지원 등 유형별로 분석하고 인력수급현황을 토대로 투자필요영역을 선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력양성 지원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취업률, 고용유지율, 교육과정 개발 성과 등 인력양성 사업 특성에 맞는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달성도를 점검하여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19		'23
▪ 4차 산업혁명 R&D(조원)	1.5	⇒	2.2
▪ 중소기업 전용 R&D(조원)	1.7	⇒	2.4
▪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지원(조원)	1.7	⇒	2.6

■ 추진배경

- 부진한 출연(연)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출연(연)의 역할과 책임(Role & Responsibility)을 재정립하고 연구역량을 집중할 필요

* 과도한 연구개발 성공률, 단기성과 중심의 소규모 과제 수행 등

■ 주요내용

- (단기) R&R 부합사업 위주로 재원·인력을 반영하고 구조조정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 (사업구조 개편) 출연금 기본연구(주요사업비)의 R&R 부합여부 평가하여 미부합 연구는 구조조정, 부합연구는 투자 확대
 - (인센티브 부여) R&R 이행을 위한 혁신 우수기관을 선별하여, 주요사업비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 (인력운영 개편) 법정소요를 제외한 신규 증원은 R&R 우수기관 중심으로 부여
- (중장기) 우수 사례 공유, R&R 이행노력의 기관평가 반영 등을 통해 추진동력 지속 확보

■ 기대효과

- 혁신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재정립한 출연(연) R&R의 효과적 안착
- '연구자'와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 '현장' 중심으로 출연(연) 정책 변환

■ 추진배경

- 지속적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도 일률적 기준에 따라 일몰되는 등 R&D 일몰제* 단점의 보완 필요성 제기

* 장기계속사업의 관행적 계속 사업화를 방지하고 기술·산업환경 등 여건변화에 적기 대응을 위해 '15년 도입

■ 주요내용 : 필요 사업은 주기적 평가를 거쳐 사업 연장

- (지원대상) 법적근거가 있는 광범위한 응용 및 창의·혁신적 지식창출, 기술 비지정 분야* 등 장기적 관점의 추진이 필요한 일몰사업

* 인력양성, 중소·창업기업, 공공연구 등

- (사업선정) '20년 예산요구 시 각 부처는 자체점검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을 신청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

- 국회 등 외부지적사항 개선, 유사성격의 사업을 연계·통합하는 등의 사업구조개편, 구조조정 등 효율화한 경우에 우선 지원

- (사업관리) 5년 단위(3+2년체제 : 사전점검+확정) 주기적 평가*를 통해 지속여부를 검토하며, 요건 미달 시 대상에서 제외

* 사업목표와 지원내용 연계성, 재원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의 정도 등

■ 기대효과

- 미래대비 역량확충, 국민·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R&D는 일몰에 따른 연구단절을 방지하고 장기적 측면에서 투자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 2년 연속 무역 1조달러 달성,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달러 돌파

2018년 우리나라 수출은 6,054.7억 달러로 최단기,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달러(세계 7번째)를 돌파하였다. 무역 1조 달성 달성 국가는 한국 포함 10개국, 최근 10년간 무역 흑자를 기록함과 동시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4개국(한국, 중국, 독일, 네덜란드)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올해 연간 최대 수출인 1,267.1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일반기계, 석유화학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주력 시장인 미국과 중국 수출이 사상 최대기록을 갱신하였고, 아세안(1,002.8억 달러, +5.3%)·베트남(+1.8%)·인도(+3.7%) 등 신남방 지역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였다.

對美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교역·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아세안·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모색하였다. 한미 FTA 개정협정을 신속하게 타결 및 비준하였고, 美 철강 232조 국가면제 확보를 통해 對美 통상현안에 대응하고,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4	'15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조원)	15.4	16.4	16.3	16.0	16.3	1.4%

* 본예산 기준

■ 산업분야는 업종별 발전방안을 모색, 지역경제 주요 현안에 대응

조선, 반도체, 섬유 등 업종별 혁신성장 이행방안을 마련('18.1분기) 하였으며, 산업경쟁력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견 조선사, 한국GM, 금호타이어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였다.

군산 등 6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재취업·생계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등 현장 체감형 지역대책을 추진하였다.

■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전기차 56.5천대를 보급하였고, 급속충전기 3,800기를 구축('18년 누적) 하였다. 수소충전소 15기를 설치하고 수소 시내버스 시범운행 등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민간의 자유로운 신제품 개발과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 17건의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와 태양광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등 23건의 신재생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석탄 발전 감축 등 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발전 부문 미세먼지 감축, 하계 전력수급 안정적 관리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과거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책임을 규명하고,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한 자원공기업 체제 개편을 추진하였다.

■ 도약·성장하는 원활한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

창업여건 개선으로 2018년 신설법인수가 역대최고치인 10.2만개를 기록하였고, 모태펀드 출자 재원('18. 4.0조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민간 선별능력을 활용한 기술창업지원 플랫폼인 「TIPS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TIPS 타운”도 조성하는 등 창업플랫폼도 확충하였다. 또한, 대학의 창업동아리가 대폭 증가('15년 1,329개 → '18년 2,697개)하는 등 전국적으로 창업붐이 확산되었다.

■ 중소기업 기술개발·혁신성장 지원 및 인력난 해소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은 1997년 이후 약 30배 확대되었고,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민간부문의 투자도 함께 견인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체 연구소, 연구인력 등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고 정부연구개발 참여기업의 매출액과 후속 투자지표도 개선되었다.

또한 특성화고, 전문대·대학 등의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내일채움공제(201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2018) 등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임금지원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활력을 회복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정지원을 통해 유망 업종 중심으로 준비된 창업을 촉진시키고, 한계 소상공인의 전직·전업, 소상공인 공제 및 각종 사회보험 가입 장려 등으로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2조원 판매기조 정착으로 전통시장의 매출은 5년 연속 증가하는 등 매년 2조원 규모의 재정투자를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에 대한 안정적 지원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외의존도 탈피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

친환경,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인 경량화, 융복합화, 스마트화를 구현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생산이 2001년 대비 3배, 수출은 5배 증가하는 등 외형은 크게 성장하였으나, 낮은 기술 자립도, 만성적 대일무역 적자 등 주력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하여 도약하는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20대 품목은 1년 내, 80대 품목은 5년 내 공급안정화를 확보하고,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발굴, 가용가능한 예산을 우선 집중 배정하여 핵심품목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개발부터 실증 및 양산 테스트베드, 신뢰성보증 등 전주기적으로 강력하게 연계지원하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세계 4대 제조강국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4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에 정부 R&D를 투자할 예정이다. 디자인, 엔지니어링, 설계 역량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 산업단지를 개조하여 신산업창출 및 혁신의 전진기지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다. 무역보험기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고, 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고난도 과제에 도전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도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 수출 회복을 통한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

수출 및 투자가 고용확대와 소득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고, 수출 6천억불 시대를 이어가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출바우처 참여부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출준비, 마케팅 및 현지화 등 수출 전주기에 걸친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0년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건축비용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온라인 중소기업의 무역거래 지원을 위해, 디지털무역 기반 전자무역 플랫폼 고도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G2 의존도를 완화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유라시아·아세안·인도 등으로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연계하여 시장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전 국민을 포용하는 에너지정책 구현

에너지전환 확산을 위해 에너지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민친화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원전산업 핵심 생태계 유지를 지원하도록 하겠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용자 및 주택·건물·융복합 등 보급지원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원별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원전해체산업의 미래먹거리 산업화, 고효율기기·에너지 관리시스템 등의 에너지 효율산업 육성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용전기설비 안전 확보,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열수송관 개체 등 에너지시설의 안전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 지역산업 생태계 활력 회복 지원

산업부는 올해 4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해 5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동구, 경남 통영 및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에 대하여 지정기간을 2021년 5월까지 2년 연장하였다. 해당지역에는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추가지원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위기지역 내 근로자 및 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과 재취업 지원책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등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위기지역의 친환경·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 기반의 고도화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생산시스템 혁신을 통해 산업단지를 스마트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원하고, 산·학·연의 데이터 및 자원을 연계, 공유하여 제조혁신의 시너지를 극대화 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AI,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5G 등 스마트 혁신기술이 등장하면서 제조업과 산업 단지의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여건이 조성되어, 산단 스마트화를 추진하여 산단 내 한계에 직면한 기존 주력 제조업의 재도약과 기술혁신에 의한 신산업 유치로 제조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사람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지역특화산업, 지역서비스산업 등을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에 최적화된 혁신성장 거점을 발굴 및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다. 지역의 산업 육성 수요와 국가의 산업발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4개 시도에 ‘스마트특성화 산업’ 55개를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혁신기관간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내 핵심 성장거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경제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 지역산업 고도화·다각화·전환을 지원하여 대내외 혁신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 기업의 연구개발과 제품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 임금, 제조현장 등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칭 완화

정부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이 활성화 되도록 청년일자리 대책('18.3)을 마련하고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개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면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설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21년까지 21만명의 청년재직자가 가입할 예정으로,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장기 재직토록 하여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핵심인력이 장기 재직할 수 있는 여건(공제기간 5년)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와 혁신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생산성이 향상(30.0% ↑)되고, 불량률(43.5% ↓)과 산업재해율이(22% ↓) 감소하는 등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은 경쟁력이 향상되어 자발적으로 임금을 인상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있는 중이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여건이 개선되면서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공장 구축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을 조기에 확산할 예정이다. 2019년도의 경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4,000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5,500개를 목표로 하여 2022년까지 2.5만개의 스마트공장을 차질 없이 보급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자립기반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정부는 국민 모두가 잘사는 경제를 위해 가계소득을 높여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소득주도성장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러한 정부정책의 성공을 담보하는 주요 정책대상이다. 하지만 현재 소상공인 생태계는 다산다사의 구조이기 때문에 생태계 전반에 혁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경영안전망을 확대하고자 한다.

먼저 새로운 유통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소상공인 스스로 온라인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 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융자자금도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속적인 자생 능력 강화와 유지를 위해 신사업창업사관학교와 같은 교육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전담 정책연구기관을 중소기업연구원내에 신설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활력을 주기 위해서 기존의 뿌려주기식 지원에서 탈피하여 지역 골목상권을 재생하고, 전통시장과 같은 상권에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 기반의 아이디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사업을 지원하고,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통한 구상권 재생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과 같은 기존 상권을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고, 주차장 개선 등도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 민간 주도의 개방형 혁신과 창업 저변 확산

민간투자자와 연계하여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인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를 확대하여 혁신창업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적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국가 신성장동력 발굴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TIPS 전후 단계의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의 엔젤투자·창업 생태계의 활성화 및 유망기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후속지원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민간주도로 성장하는 활력 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확인 제도, 벤처투자제도, 모태펀드” 등 벤처 기반 제도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전문가가 혁신성·성장성 위주로 벤처를 선별하고,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으로 VC자생력 확보 및 투자확대를 유도하며, 민간 제안펀드 도입 등 모태펀드를 시장친화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 성장단계별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중심경제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2022년까지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R&D 지원을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지원기간 및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분야 지원 비중을 40%이상으로 늘려나간다.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제고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Scale-up) 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안정적 사업화, 판로개척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초기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성장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성장기반자금 등을 통해 경영·기술혁신과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우수한 재창업 사업계획을 보유한 재기기업인을 발굴하기 위한 재도전 지원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우수기술을 보유한 재창업자에게 재창업 교육, 사업화 자금, 신용 등급 향상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실패 후 재도전으로 연결되는 창업생태계를 구축한다.

수출품목과 해외시장을 다변화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무대에서 외국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내수기업에서 글로벌강소기업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수출 준비활동에서 해외 진출까지 전 과정에서 필요한 “마케팅서비스 통합 메뉴판”을 마련하여 수출준비, 거래선 발굴, 계약체결, 해외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외전자상거래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외 유명한 글로벌 쇼핑몰 입점·판매대행이나 온라인쇼핑몰 구축을 통한 자체 사이트 육성, 마케팅, 관련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거점도시의 사무공간을 제공하여 현지 조기정착과 수출판로 개척 및 시장진출 확대를 지원하는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19	'20	'21	'22	'23	연평균 증가율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87,641	239,266	263,947	279,980	299,335	12.4
○ 무역및투자유치	6,705	10,866	12,605	13,767	15,129	22.6
○ 에너지및자원개발	34,194	38,933	44,821	47,841	50,798	10.4
○ 산업혁신지원	38,049	46,642	53,295	56,451	60,963	12.5
○ 창업및벤처	32,369	45,803	51,689	56,572	61,784	17.5
○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	65,331	83,929	91,432	94,982	99,966	11.2
○ 산업·중소기업일반	6,146	6,571	7,007	7,332	7,690	5.8
○ 지식재산일반	2,848	3,193	3,097	3,035	3,005	1.3
○ 산업금융지원	2,000	3,330	-	-	-	△ 100.0

* 본예산 기준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에 대규모 투자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해 핵심기술 확보를 적극 추진한다. 현재 예타를 진행중인 사업 중 핵심과제는 예타면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시장크기가 작아 경제성(B/C)이 나오기 어려운 분야의 경우에도 적시 투자가 가능하도록 경제성 분석기법 등 대체 평가방법을 개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개발은 장기간에 걸친 대형연구가 필요하므로, 소재부품장비 R&D에 예산을 증액하여 집중투자하고,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연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신성장동력 및 원전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수요기업 중심으로 공급기업과 협력방안을 연계하여 시장요구와 업종특성에 적합한 유연한 사업추진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 및 환경규제 완화 등 기업애로를 해소시켜나갈 계획이다. 또한 핵심품목 지방이전, 신·증설 투자시 현금보조금을 최우대로 지원하고 공장 신증설, 신규장비 도입 등 시설투자비를 지원하도록 하겠다.

■ 지역 제조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사업 정비

R&D, 컨설팅, 판로 등 각기 다른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지역 영세 제조업체에게 바우처 프로그램 형태로 지원하여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역 제조업 혁신 바우처 사업은 ① 실제 영세 제조업체가 필요한 기술, 경영 등 컨설팅 ② 지역 현안, 업체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기술규제, 대기업 규격 검증 등 기술지도 ③ 지자체와 연계한 상품기획전, 대형 유통 기업과 연계한 판로 개척 지원 등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정책적 성과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미래 성장 지원

스마트 공장 등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조 데이터센터를 추진하고, 제조업 현장의 스마트화를 돕는 스마트 공장 보급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제조 데이터를 활용하여 물류나 경영관리 등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과 소상공인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상점 사업도 도입 추진한다.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개편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고 4차산업 혁명시대에 신성장산업 창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R&D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첫째로 단기소액 중심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지원기간과 규모를 R&D 성장 단계별로 Scale-Up하여 지원한다. 또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둘째로, 단순 뿌려주기식 R&D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에 맞추어 ‘투자형’, ‘규제 해결형’, ‘소셜벤처형’, ‘재도전형’ 등 다양한 방식의 R&D 투자를 시행한다.

셋째로, 産·學·研 협력 R&D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 상용화할 수 있도록 Tech-Bridge R&D도 신설한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R&D 선정의 공정은 지속적으로 유지 및 강화해 나간다.

■ 상생협력 기반의 상권 활성화 추진

상권이 활성화될 시 임대료가 상승하여 임차상인들의 경우 안정적인 사업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낙후 상권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와 병행하여 상권내몰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료 계약갱신기간 연장, 임대료 인상률 조정 등 협약을 완료한 상생협력 기반 지역, 쇠퇴상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역에 소비자·지역사회의 특색을 반영한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개방형 혁신을 위한 해외 거점 마련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정책 추진으로 국내 창업 생태계가 개선되면서 창업이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에는 창업이 10만개에 육박하였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해외거점을 제공하는 수출인큐베이터, KOTRA 무역관 등은 전통적인 중소기업의 수출 성과를 높이는 것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기술이 융·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혁신주체가 소통하고 협업하는 ‘개방형 혁신’이 요구된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스타트업이 현지의 스타트업, 연구기관, 대학 등과 같은 혁신주체와 교류와 소통을 통해 개방 혁신을 만들어 내는 글로벌 교류의 장인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KSC)’를 확대할 계획이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구분	'19		'23
▪ 수출액(억불)	6,242	⇒	6,890
▪ KOTRA 수출지원사업 수출창출액(억불)	60.5	⇒	66.9
▪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억불)	200	⇒	220
▪ 국가산단 가동율(%)	80.3	⇒	81.5
▪ 피크억제(MW)	107.9	⇒	151.0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의 에너지절감량(천toe)	207	⇒	259
▪ 에너지절감량(MWh)	45,421	⇒	57,023
▪ 도시가스보급율(%)	83.7	⇒	85.9
▪ 중소기업 전용 R&D 투자(조원)	1.1	⇒	2.5
▪ 신설법인 수(만개)	10.2	⇒	12.0
▪ GDP대비 벤처투자(%)	0.18	⇒	0.25
▪ 지역별 우수기업 육성(社)	194	⇒	1,000
▪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명)	100	⇒	15,000
▪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율(%)	73	⇒	100

■ 추진배경

-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중소·중견기업 혁신성장 모멘텀을 가속화할 필요

■ 주요 사업 내용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 지원
 - * 제품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쏠과정을 IT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 제품설계·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해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구축완료 기업 분석결과, 생산성 30% 증가, 불량률 45% 감소, 원가 15% 절감 등 성과 창출
 - 그 결과, 매출액이 20% 증가하였고 영업이익도 53% 상승
- 생산물량 증가, 새로운 직무 추가 등 고용도 기업당 2.2명 증가
 - 아울러, 근로자 처우 개선 및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
- 생산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로환경의 안전성 제고(구축기업 산업재해율 평균 22% 감소)
 - * 산업재해율(%) : ('14년 구축기업) 0.97 → 0.64, ('15년 구축기업) 0.65 → 0.53

■ 추진배경

- 민간투자자와 연계하여 유망 기술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여 기술인력의 창업활성화 및 글로벌 스타벤처를 육성

◇ 국내창업의 주요 재원조달은 여전히 대출·융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창업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이 존재하여 창업 활성화를 저해

* (창업자금조달) 자기자본 82%, 대출·보증 26%, 엔젤투자 0.4%

◇ 매년 벤처투자 시장은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초기창업자를 투자하는 엔젤투자의 규모는 전체 투자시장의 10% 대로 여전히 부족

* ('17년) 벤처투자규모 : 26,617억원, 엔젤투자규모 : 2,814억원

■ 사업내용

- 성공벤처인·선도기업 등이 주도하는 액셀러레이터(운영사*)가 유망 창업팀을 발굴하여 1억원 내외의 민간투자 후 정부에 추천하면,
* 엔젤투자회사(재단), 초기전문 VC, 중견기업·대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 정부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민간투자자와 연계하여 기술개발자금 5억원, 사업화, 마케팅, 엔젤펀드 등 최대 4억원 지원
- 운영사의 멘토링·네트워크 연계 등의 밀착보육을 통해 선정된 창업팀의 성장을 밀착 지원

■ 기대효과

- 투자방식의 자금조달과 운영사의 보육지원을 통해 창업실패에 대한 위험부담을 완화하여 기술인력의 창업도전을 활성화
- 민간투자자에 정부지원을 연계하여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여 액셀러레이터의 적극적인 초기기업 투자를 유도
- 민간역량을 활용하여 선별된 우수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질 좋은 창업을 견인

■ 추진배경

- 「경제혁신 3개년 계획」(‘14.2)에 “고성장기업 육성계획” 포함
 - * 고성장 기업에 ’15년부터 매년 500개씩 선정, 마케팅·설비자금 지원
- 고성장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토대 마련

■ 주요 사업 내용

- 고용·매출·수출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기업의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해 지속성장 유도
 - 산업부 등 5개 부처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수출바우처 사업 중 하나로 “수출준비→해외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서비스”를 통합 지원
 - * (지원내용) 브랜드개발, 온라인마케팅, 외국어 포장 디자인 개발 등 수출마케팅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
 - 최근 4개년간 고용 또는 매출이 20%이상 성장하거나 수출이 10%이상 성장한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
 - * (’17) 335억원, 738개 기업 지원 → (’18) 290억원, 580개 기업 지원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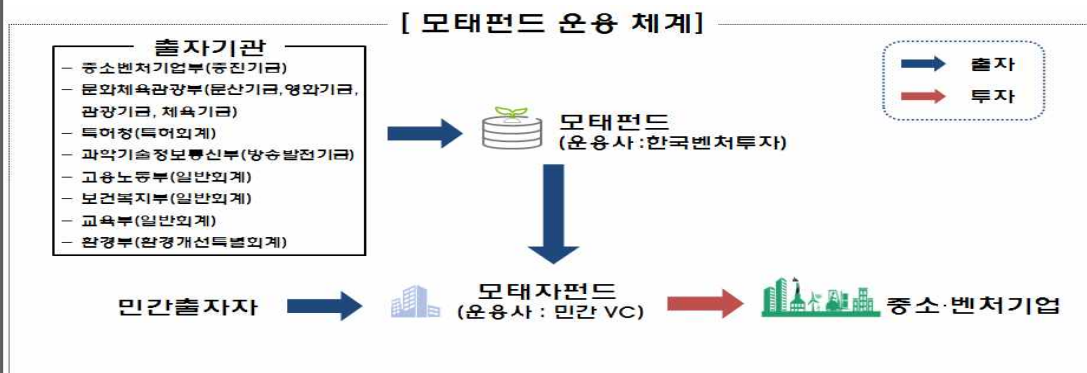
- ’17년부터 수출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해 참여기업의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선택권이 강화되고, 참여기업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수의 수행기관 간 경쟁체제 도입
- 산업부 등 타 부처 수출지원사업과 공동으로 운영하여 기관 간 협업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유사중복 지원을 원천 제거
- 고성장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 구축

■ 추진배경

- 모태펀드 도입 이전에는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벤처펀드에 출자
 - 단년도 예·결산을 하는 기금 특성상 연말 무리한 출자를 하거나, 회수재원을 다른 사업에 집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 이에, 벤처펀드 출자방식을 단년도 회계에서 벗어나, 회수재원을 다시 귀속시켜 재출자하는 모태펀드를 도입 (벤처법 개정, '05년)

■ 주요 사업 내용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민간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조합(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에 기금을 출자



- '18년말 현재 정부 예산 3.8조원 투입 → 출자 6.3조원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모태펀드 결성 직후 벤처펀드는 2배로 급증('04 → '05년) 하였고, 벤처투자도 크게 증가하여 '18년 신규투자가 2.8조원으로 역대 최고
 - 전체 벤처펀드 중 모태펀드 출자비중은 20~30% 수준으로, 민간 자본을 벤처펀드에 유입하여 벤처투자 시장의 마중물 역할 수행
- 최근 5년간('14~'18) 투자받은 2,332개사는 '18년말 기준으로 투자 직전년도 대비 3.5만명, 기업당 평균 15.1명 증가
- 모태 자펀드 투자받은 기업 중 업력 1년 이내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74%로 전체 창업기업의 29% 비해 압도적인 수준

■ 추진배경

- 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장기재직 및 우수 인력유입을 촉진

* 주요일자리 대책 및 청년일자리대책 7개 핵심과제에 포함

■ 주요 사업 내용

- 청년근로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일정기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3천만원)을 청년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사업

* (공제적립금, 만원) 청년근로자 720(월 12)+기업 1,200(월 20)+정부 1,080(3년, 7회)

-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법상 중소기업
- (지원근로자)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
- (지원내용) 청년근로자와 기업이 일정 비율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정부가 최대 3년간 1,080만원*을 추가로 적립

* 정부지원 : (1,2차) 120만원 → (3,4차) 150만원 → (5~7차) 180만원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근로자 상호합의에 의한 자발적 의사에 따라 가입되며,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의 의미 존재
-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통해 노하우 및 기술력 축적, 기술 전수 등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여 및 우수 인력유입을 촉진
-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통한 우수인력의 장기재직 유인으로 청년실업률 해소에 기여

6. SOC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밑바탕이 되고 국민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교통시설과 수자원, 산업단지, 물류시설 등 다양한 SOC 시설을 적기·적소에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의 SOC 투자는 과거 경제성장을 견인하였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SOC 분야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당시 일자리 창출과 내수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70년 이후 SOC에 지속 투자해 온 결과 SOC 스톡이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여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여전히 출퇴근 시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인프라의 질적 수준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되도록 억제하고 완공사업 위주로 투자하면서 전반적인 투자효율성 제고에 주력해 왔다.

한편, 2018년 12월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2019년 6월 인천시 적수 현상 등 '70~'80년대 집중 건설된 SOC 시설의 급속한 노후화에 따른 위험요인의 증대, SOC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도 제고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한 투자도 늘려 나갈 계획이다.

< SOC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4	'15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 SOC 분야(조원)	23.7	24.8	23.7	22.1	19.0	△5.4%

* 본예산 기준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여건변화를 반영한 SOC 투자중점 개선

그간 정부는 산업기반지지 및 국가 교통기간망 구축을 위해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 공급 위주의 투자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최근 교통인프라를 둘러싼 사회·기술·경제·환경 등 다양한 여건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인프라 투자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교통인프라는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국민 편의 증진 등 서비스 및 안전 강화와 같은 정책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건설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기존 시설의 안전관리·운영 중심의 투자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안전·교통 등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건설사업은 완공위주로 투자하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투자효율화를 추진하며, 혼잡구간 해소와 교통수단·노선 간 네트워크 강화에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안전투자는 기반시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체감형 투자를 확대한다. IoT, AI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차세대 교통·주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후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예방중심의 종합적·선제적 안전투자 확대

1990년대 교통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이 도입된 이후 SOC 시설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70~'80년대부터 집중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도 급속히 진행되어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소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 포장도로, 철도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위험도로 개선, 첨단도로교통체계, 자동차 안전도 강화 및 졸음운전 방지 등에 대한 투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층 건축물의 화재, 지진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성능보강 지원,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방범·소방 통합플랫폼 구축 등 생활안전 분야를 확대·강화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저감, 그린 리모델링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세먼지도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국민이 체감하는 국토균형발전 추진

과거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한 압축성장 과정에서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었다. 그런데 향후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그동안 발전이 늦었던 지역이 SOC 투자에서 더욱 불리해지고, 지역간 격차는 심화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역별 경제적 상황과 주민 삶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잡힌 투자를 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물류·간선기능 확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로·철도 신규 사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도시·세종시·새만금 등 주요 성장거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산업단지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노후 공단을 재정비하며, 도시첨단 산업단지 공급을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쇠퇴하는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과 도시 활력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국토균형발전 내용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 담아 국토 장기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신산업 대응

SOC 분야에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융복합되어 관련 산업에 AI·5G 등 신기술이 접목되는 혁신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각종 기술이 접목되는 플랫폼이자 공공서비스 제공 인프라로서의 SOC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혁신성장동력 선도사업인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고, 민간·지자체 제안 사업을 통해 기존도시도 스마트화하여 2021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며, 관련 기술도 국가전략 R&D로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은 각종 규제개선은 물론, 공공 수요를 활용하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고, 자율주행차도 자율차 테스트베드(K-city) 고도화, 도심지 도로 실증 등 조기 상용화에 대비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3차원 설계를 활용하여 스마트건설을 구현하고, 지능형 자동 화물운송, 윈스탑 물류센터 등을 통해 스마트물류 체계를 만드는 등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 신항만 인프라 적기 확충 및 항만 안전성 강화

선박 대형화, 스마트 항만 확대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해외 항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우리 항만의 차별화 전략이 요구됨에 따라, 부산·광양·인천 등 12개 신항만('19.8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고시)을 글로벌 허브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자연재해에 대한 항만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방파제 축조 등 외곽시설 및 내진 보강과 더불어 통항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항로 암초제거 및 준설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깨끗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육상전력공급시설(AMP)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여객부두, 터미널, 물양장 등 소규모 항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 SOC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가율
□ SOC 분야	197,531	223,055	234,005	237,268	236,662	4.6
○ 교통 및 물류	156,546	183,715	191,379	198,372	203,254	6.7
▪ 도로	58,742	66,683	69,091	70,799	71,044	4.9
▪ 철도·도시철도	55,163	66,792	69,134	70,854	71,575	6.7
▪ 해운·항만	17,172	18,658	18,950	18,604	18,524	1.9
▪ 항공·공항	1,561	2,621	4,544	8,128	12,581	68.5
▪ 물류 등 기타	23,908	28,961	29,661	29,987	29,530	5.4
○ 지역개발	40,985	39,341	42,626	38,896	33,408	△5.0
▪ 수자원	17,311	12,753	12,456	12,356	12,252	△8.3
▪ 지역 및 도시	20,205	23,790	24,997	23,267	19,268	△1.2
▪ 산업단지	3,469	2,798	5,172	3,273	1,888	△14.1

* 본예산 기준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고용부진과 일자리 감소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토교통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창업공간 마련, 좋은 일자리 창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과 삶터를 일자리 기반으로 조성한다.

도시재생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발하고, 청년인턴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도시재생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도시재생지역내 청년창업시설 등을 추진시 용자를 지원한다.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여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또한, 청년층의 선호가 높은 항공분야 일자리 제공을 위해 先선발後교육 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항공정비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한다. 산하 공공기관도 혁신스타트업 양성과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근로자에게 발주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도입을 통해 건설 분야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것이다. 또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휴식시간 보장, 휴게시설 확충 등을 통해 안전한 버스운행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 교통사고 예방 및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소

우리나라 도로는 199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대폭 증가하였으며, 현재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 중에 있고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 따라 앞으로 신규 건설보다는 위험예방 등 안전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 노후 교량 및 터널의 보수·보강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강화하는 한편,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구간, 횡단보도 조명설치, 위험도로 개선 등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안전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구가 많은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 중인 순환고속도로, 대도시권 혼잡도로 및 광역도로도 현장 여건에 맞게 적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19년 3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발족하여, 광역급행버스의 면허권, 신규노선에 대한 타당성 분석, 버스관련 인프라(광역 BRT, 환승센터) 구축, 혼잡도로, 광역철도 등의 사업을 담당하며 체계적인 광역교통 정책을 설계한다.

특히, 2020년에는 출퇴근시 전세버스 지원, 2층전기버스 도입 등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안전·수익성 문제 개선조치, BRT 확충, 환승센터 구축사업 등 버스관련 인프라 확충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경기도 출퇴근, 52시간제 도입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안고 시작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2020년 하반기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계획이다.

■ 삶의 질 개선 및 도시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본격추진

2018년 3월 수립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바탕으로 지역주도의 도시재생 뉴딜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 지역 거버넌스 강화와 함께 본격적인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2016년부터 선정된 사업들의 본격공사 및 완공이 예상된다.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등 생활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앵커시설을 확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생 추진을 위해 창업지원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 쇠퇴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에 선정 한 100여곳의 신규 사업도 2020년부터 본격 착수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주도의 도시재생 뉴딜 추진을 위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지자체·지역전문가 등 추진주체의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지역전문가를 양성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역기반의 경제조직을 육성·지원하여 도시재생 이익이 지역사회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순환구조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상업활동 지원여건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을 통해 영세상인·주민 등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방지해나갈 계획이다.

■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 서비스 확대

정부는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가능케하는 고속철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와 “수원발·인천발 KTX”,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 등 수도권의 통근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 광역급행열차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은 B, C 노선이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적기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GTX 사업이 모두 추진되면 수도권의 통근시간이 최대 80%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 * 동탄⇄삼성(A): 현재 77분 → 19분(75.3% 감소)
- 송도⇄서울역(B): 현재 82분 → 27분(67.1% 감소)
- 의정부⇄삼성(C): 현재 73분 → 13분(82.2% 감소)

정부는 빠르고 편리한 철도망 구축뿐만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후 철도시설을 개량하고, 철도 전용 무선통신망 구축(LTE-R), 철도 시설물에 대한 자동검측 및 원격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유지보수 효율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철도시설과 차량을 설계부터 철거까지 관리하는 생애주기 정보 통합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첨단 기계장비 도입과 정비기술자 자격제도 도입, 정밀안전진단 의무화를 통해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품질도 향상할 계획이다.

■ 혁신과 상생발전의 공항생태계 조성

중국의 국제선 중심 항공전략, 일본의 2020년 아시아 허브 재도약 추진 등 경쟁국은 항공시장 성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동북아 허브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별 공항 SOC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김해신공항 및 제주2공항은 지역 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일정에 따른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도서지역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울릉·흑산 소형공항 건설 추진은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인프라의 지속적인 시설확충 및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19		'23
▪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명)	3,286	⇒	2,000이하
▪ 자율주행차 상용화	레벨2	⇒	레벨4
▪ 비즈니스 드론 상용화 (드론사업체/등록대수)	2,195/7,177	⇒	6,461/15,200
▪ 국도 안전성 미흡 구간 (km)	1,236	⇒	1,036
▪ 스마트시티 기반구축(지자체수)	22	⇒	108

① 지역 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 산업단지 밀집지역 등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으로 화물운송의 효율화와 함께 근로자 등의 출·퇴근 시간 단축 등
 - * 석문산단 인입철도, 대구 산업선 철도, 울산 외곽순환도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등
- 도서지역과 내륙 연결 등을 통해 해안선 관광벨트 조성
 - * 서남해안 관광도로, 영종~신도 평화도로 등
- 새만금 항공 인프라 조성으로 국·내외 교류, 민간투자 유치 촉진

②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 수도권과 영남내륙을 2시간대로 연결하고,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호축 구축을 본격화하여 X축 국가철도망 초석 마련
 - * 남부내륙철도, 충북선 철도 고속화 등
- 충청과 경북지역을 연결하는 동서 제4축 고속도로를 완성하고 수도권과 강원·강원의 간선 도로망을 확충
 - * 세종~청주 고속도로, 제2 경춘국도 등
- 전국의 주요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핵심구간의 병목현상 해소
 - * 평택~오송 복복선화

■ 추진배경

- 자원·인프라 부족, 교통·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의 효과적인 해결 및 4차 산업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필요
- ICT 기술 활용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 및 삶의 질 제고,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 시장선점 경쟁 치열

■ 추진목표

-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 동력창출을 통해 스마트시티를 조성·확산 하고, 세계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도약
-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다양한 정책사업 등과 연계 하여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배려
- 적극적 지원과 규제개선으로 관련 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기반 구축

■ 추진방향

- (도시성장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신규개발/도시운영/노후·쇠퇴 단계 등 다양한 도시별 여건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적용
- (맞춤형 기술 활용)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을 위해 미래형 신기술과 상용기술의 적극 활용
- (민간·시민·정부의 협업)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파를 추진하고, 도시조성·관리의 전과정에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시스템을 도입

7. 농림·수산·식품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최근 5년간(2014~2018년) 농림·수산·식품분야는 연평균 1.3% 증가하였다. 농림분야 예산 규모는 복지예산 확대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긴축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총지출 증가율보다 낮은 증가율로 인해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8년 기준 4.6%로 하락하였다.

부문별 재정투자 방향을 살펴보면, 농업·농촌 부문은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국내 농업의 경쟁력 및 체질 강화에 최우선 중점을 두었고, 재해예방·가축전염병·식품위생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안전 관련 투자를 확대하였다. 또한, 농민 생활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수산·어촌 부문은 첨단 양식 산업화, 수산 자원 회복 및 관리, 수산 식품산업 육성, 수산물 수출 지원 등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청년어촌 정착지원, 귀어귀촌 활성화, 특화어항 개발 등을 통해 활력 있는 어촌 조성을 지원하였으며, FTA 피해대책 시행 및 보험 확대 등을 통해 어업인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식품업 부문은 식품기술개발, 기능성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해외진출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시장의 외연을 넓히는데 주력하였다.

임업·산촌 부문은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숲을 찾는 국민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산림복지서비스 공급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4	'15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 농림·수산·식품 분야(조원)	18.7	19.3	19.4	19.6	19.7	1.3%

* 본예산 기준

농림수산분야 정책여건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농어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젊은 층의 농촌유입이 정체되면서 농촌 고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지속적인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 분야의 생산성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여 GDP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

* 농·어·임가인구(총인구 대비): ('10) 348.8만명(6.9%) → ('18) 262.1만명(5.1%)

- 65세이상 인구(비중): ('10) 108.6만명(31.1%) → ('18) 115.7만명(44.1%)

* 농림어업분야 GDP(명목GDP 대비): ('10) 28.4조원(2.1%) → ('18) 34.5조원(1.8%)

또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 농업경영비 상승, 주요 채소류의 수급불안, 빈번한 재해발생 등으로 인해 농업 소득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교육·문화 등 생활 인프라의 도농간 격차도 여전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국민 먹거리 안전성과 식품 복지의 문제는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생산부터 소비단계에 이르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과 AI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근본적 방역체계 구축, 국민의 건강을 중심에 둔 먹거리 복지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농림수산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업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노동집약적 전통 농업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ICT,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생산·유통·가공 등에 접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빅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농어업 확산 거점으로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 등을 조성하여 농어업 전반의 기술혁신과 전후방산업 성장을 도모할 것이다.

또한, 농식품 분야를 일자리 창출의 한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식품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종자·곤충 등 신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 보육 확대,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및 식품·외식 연관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전후방 농식품수산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농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종자·곤충·바이오 등 고부가 생명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 농식품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에 중점 투자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 식품산업클러스터의 창업·성장 지원 기능 강화 등을 통해 R&D, 네트워크, 수출의 허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

■ 농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

개방 확대, 고령화,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농어업소득은 정체되고, 이상기후에 따른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으로 농어업경영의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농어업 보험, 재해대응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으로 농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기존 농가소득 보장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현행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 공급과잉 문제가 해결되고 중소농의 소득 안정,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적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가의 안정적 활동 보장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복구비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농업재해보험의 품목을 확대한다. 취약 계층에 대한 농기계종합보험 국고지원 비율도 상향조정(50→70%)한다.

어가소득 보장을 위해 조건불리직불금을 지속 지원하고, 태풍·가뭄·이상기온 등 재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는 등 어업인 경영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19) 78품목 → ('20) 83품목

* 어업재해보험: ('16) 24품목 → ('17~) 27품목(유지)

또한, 농어업인 소득 정체와 경영 불안정의 근본 원인인 농수산물 가격 등락 완화를 위해, 수급안정 사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콩,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여건 조성을 통해 밭작물 자급률을 제고하고, 주산지 중심의 자율적인 수급대책을 강화함으로써 가격 등락이 심한 노지 채소에 대한 수급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지속하고, 농지연금 등을 통해 농어업인 고령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농어촌 활력 증진

농어촌 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라 농어촌 지역은 점차 활력이 감소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농어촌 지역 소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휴양·관광 수요도 충족하는 농어촌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청년들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어업의 구조조정도 도모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들에게 준비·정착·성장 단계별로 취창업연계 장학금, 정착지원, 농지임대, 컨설팅, 융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경쟁력있는 청년농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2022년까지 어촌 뉴딜 사업 300개소 확대를 통한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연 경관과 수산 자원 등 다양한 해양관광자원 개발로 어촌을 보다 활력이 넘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누적 스톡을 감안하여 축소기조를 견지해왔던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은 재해예방능력 강화를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수리시설, 방조제에 대한 개보수 지원을 확대한다. 배수시설 개선에 대한 투자를 늘려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기반도 조성한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투자 확대로 농촌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농림·수산·식품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19	'20	'21	'22	'23	연평균 증가율
□ 농림·수산·식품 분야	200,303	209,665	214,510	218,594	222,043	2.6
○ 농업농촌	149,143	155,924	158,671	161,079	164,892	2.5
○ 수산어촌	22,448	23,687	24,470	25,231	24,969	2.7
○ 식품업	6,970	7,367	7,567	7,750	7,988	3.5
○ 입업산촌	21,743	22,687	23,802	24,534	24,194	2.7

* 본예산 기준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경쟁력있는 청년 창업농 육성

우리 농업·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역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농업 분야 투자 감소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실제 65세 이상 경영주 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 61.63%에 이르고, 40세 미만 경영주 비중은 0.8%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 혁신의 주역인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의 농업·농촌 유입과 영농 창업 이후 정착·성장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예비영농인 양성을 위해 농고·농대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농고·농대의 실습지원을 강화하고 영농후계자 대상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농수산대학교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우수 인력이 농어업 분야에 유치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영농 및 농촌소재 농식품 분야 취창업 의무가 적용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대학교 3~4학년 대상 등록금과 장려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농들의 초기정착의 어려움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확대할 것이다. 최대 3년간 80~100백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비축농지 임대, 자금 융자 및 보증 등을 지원하여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 컨설팅, 판로개척,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청년농들의 안정적인 성장도 지원한다.

아울러, 농식품 기업 취업을 원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취업 지원 등 인턴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 등으로 청년들의 농식품 분야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스마트 농어업 확산을 위한 혁신거점 조성

영세성, 고령화, 시장개방 압력 등 우리 농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농업을 청년들이 도전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집약형 스마트 농어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원예, 축산, 어업 양식 등에 대해 스마트농어업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확산함으로써 농어업 분야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혁신과 전후방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8개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3개소,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2개소를 조성한다. 데이터 기반 영농을 위해 스마트농업 정보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하여 농식품분야의 양질의 데이터 수집·생산·분석·유통 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무인 트랙터, 농업용 드론, 농업용 로봇 등 첨단 농기계를 이용한 농업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한다. 수직형 스마트팜 보급을 통해 농업의 공간적 제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래 농업 생산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로 수출 경쟁력 강화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은 일·중·미 3국 비중이 약 44% 수준이며, 상위 5개 품목 비중이 30%를 상회하는 등 국가 및 품목이 편중되어 있다. 최근 일본의 수출제재와 같이 특정 국가와 무역 마찰이 발생할 경우 농식품 수출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는 잠재적 취약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 수출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출시장을 일·중·미 중심에서 신남방·신북방 등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 중심으로 다변화하고, 검역해소품목을 중심으로 전략품목을 육성한다.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근 세계적 위상이 높아진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등과 연계를 강화한다. K-Food Fair 및 바이어초청 행사 등을 민간의 K-Concert와 연계 개최하여 현지인의 관심을 유도하고, TV·온라인·SNS 등을 활용한 농식품 홍보도 확대한다.

■ 사전적 수급관리 중심의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 효율화 도모

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 주요 농산물은 주로 노지에서 재배되어 자연기후에 따라 생산량이 급변한다. 그에 비해 소비량은 고정적이어서, 정부는 매년 과잉 공급된 농산물을 수매하고 폐기하거나, 부족한 농산물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등 수급안정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고비용·저효율의 정부 주도 사후적 수급관리에서 저비용·고효율인 생산자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농업 관측의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산지 재배면적, 작황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드론 촬영 등 실측을 강화하고, 가정, 단체급식 등 주요 소비처의 지출액, 구매의향 등 소비실태 조사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유통정보 등과 연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관측정보를 고도화하여 농가에 제공한다.

농가에 강화된 사전 수급조절 의무를 부여하되, 가격 폭락 시 평년 가격의 80% 수준까지 보장해주는 '채소가격안정제'도 강화한다. 주요 농산물 5품목(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을 중심으로 적용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농가의 사전적 수급관리를 지속 유도한다.

국내 농산물 유통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 구조도 다변화할 계획이다. 로컬푸드 직매장,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 직거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 단위 푸드플랜'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유통 비용 절감을 통해 농가에는 제값을 보장하고, 가정에는 싼값으로 제공하여 수요자·공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유통구조로 전환한다.

■ 농어촌 지역의 영농·생활 여건 개선

재정분권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 기능 조정으로 인하여 지역 농어촌 마을단위에 대한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이양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중심지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 전략사업 육성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재편할 계획이다. 농촌 중심지 대상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다양한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농촌지역의 전략산업을 발굴·고도화하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농촌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개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난개발이 유발되고 정책의 효과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한계가 노정되어 왔다. 이를 감안하여, 농촌 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해 지역별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통해 그간 도시 중심의 국토관리체계를 보완하면서 다양한 농촌지원 사업들이 농촌공간계획에 기초하여 제도적으로 재배치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새로운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등 시설 관리와 재해대응 역량 강화에 보다 중점을 둘 것이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선착장, 대합실 등 해양교통·관광 생활SOC를 확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어촌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으로 2019년에 70개소가 사업에 본격 착수하였고, 2022년까지 3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 자연 재해와 사고로부터의 농어업인 안전망 확충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예상치 못한 폭염·가뭄·우박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열악한 농업분야 작업환경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은 큰 반면, 재해 보험 가입률은 낮은 수준이다. 농가의 안정적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 확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가뭄발생빈도: [1904~2000년] 35회(0.36회/년), [2000~2015년] 10회(0.67회/년)

* 산업전체 재해율(4일이상 요양) 0.5%, 농업분야는 0.9%('16년)

이에 복구비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는 한편, 농가의 재해보험 보험료를 지속 지원하고, 품목 확대와 보장수준 강화 등으로 재해보험 가입률 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영농 활동 중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 계층에 대한 보험료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하고(영세농 50%→70%), 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로 산재보험 수준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바다에서 발생하는 태풍, 적조, 고수온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식시설을 현대화하고, 액화산소 공급기 등 관련 장비 보급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양식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어가의 경영안정도 도모할 것이다.

■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으로 축산업 패러다임 전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우려,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대규모 가축질병의 반복, 살충제 계란파동, 가축분뇨 문제 등 밀식·감금 사육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럽연합(EU)은 2003년부터 모든 회원국의 산란계 폐쇄형 케이지(battery cage) 사육 및 어미돼지 고정틀(stall) 사육을 전면 금지하는 등 동물복지 기준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축산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재정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동물농장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체계적인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적극적인 교육·홍보 등을 통해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축 사체의 매몰 등 관행적 처리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랜더링 방식 등의 살처분 가축 처리시설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

농업은 농산물의 생산 외에도 많은 효과를 유발한다. OECD(2001)에서는 농업의 결합생산물로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 중에서 일부가 외부효과를 창출해 시장실패를 유발하는 경우 이를 다원적 기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농업이 생산과정에서 시장가치로 평가되지 않는 경관보전, 환경보호 등의 공익적·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농림분야 예산의 배분에서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제9호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마. 생태계의 보전
-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우선 농업직불금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직불제를 공익형직불제로 개편할 것이다. 그간 직불금이 농가 소득보전 중심으로 지원되었다면, 공익형직불금은 농가의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다. 직불제 개편의 기본방향은 쌀과 밭작물간 단가차이를 없애고, 대농몰림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생산자에게 상호준수 의무(농지유지, 환경보전 등의 이행조건)를 부여하는 것이 공익형 직불제 개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농림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으면 농림분야 예산 투자 확대에 동의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들에 대한 국민 체험, 도시 내 농업공간 조성 및 텃밭 프로그램 운영,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안정적 수산물 공급 및 수산물 부가가치화

수산자원 남획, 치어 포획, 환경 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최근 10년간 매년 4% 감소)하면서 2016년 처음으로 어획량이 100만 톤 이하로 감소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수산자원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어획량이 높은 대형근해어선을 중심으로 감척 대상을 확대하고, 자원 관리 대상어종에 대해 산란기 일시적인 조업 중단을 지원하는 한편, 대체어장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TAC(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을 지속 확대하고, 연안어장의 바다목장, 서식·산란장, 바다숲 조성을 꾸준히 추진하여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수산물 안전 강화, 소비 및 수출 확대 등을 위해 생산-유통-가공-소비-수출 등 각 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산단계에서는 생산해역 및 위판 관리 기준 강화, 잔류물질 조사·평가, 청정 위판 모델을 조성하고, 유통단계에서는 집적화된 산지거점유통센터 조성, 수산물 이력제 지속 추진 등을 통해 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위생수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가공 및 소비단계에서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등 기반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수출단계에서는 수출가공클러스터 등 기반 확충과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상품개발 및 인증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다.

수산물도 로컬푸드에 입점하고, 소비자가 산지 위판장에서 경매되는 수산물을 직접 영상을 통해 확인하고 구매하는 직거래 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수산물 유통단계에서 위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지 위판장에 저온경매장, 자동선별기 등을 보급해나갈 계획이다.

■ 산림자원 육성·관리 및 산림산업 경쟁력 제고

1970~1980년대 조림한 나무들의 벌채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자원가치가 높은 경제수종으로 점차 교체하고 기능별 산림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청년창업, 경영지원, 전문임업인 양성을 통한 산촌활성화로 산림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가뭄·홍수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산림재해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3대 산림재해(산불, 산사태, 병해충)에 대한 예방 중심의 재난 안전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업단지 등 발생원 주변에 차단숲을 조성하고, 도심 내 바람 통로가 될 수 있는 숲공간(바람길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림, 숲가꾸기 등 기존 사업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추진 방식을 강구한다.

아울러,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 특히 우리나라 3대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 DMZ일원 및 도서지역의 산림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산림 고유기능 유지 및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구 분	'19		'23
▪ 스마트 온실(ha)	5,017	⇒	7,000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명, 누적)	32	⇒	96
▪ 어촌·어항 통합개발(개소)	70	⇒	300
▪ 농업관측정보 신뢰도(%)	80.6	⇒	84.6
▪ 채소가격안정제 도입 생산량 비중(%)	10	⇒	15
▪ 국유림 면적(천ha)	1,648	⇒	1,710

8. 환경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 상·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보급률 확충

우리나라 환경예산은 그간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 중심으로 투자되며 환경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결과 2017년 말 기준 전국 상수도보급률 99.1%, 하수도보급률 93.6%에 이르는 등 선진국 수준의 보급률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상·하수도 시설의 도농격차 문제가 여전하고 하수관로 노후화, 4대강 녹조, 미량유해물질 등 하천 수질 문제에 대한 이슈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 친환경차 초기시장 형성 지원

미세먼지 저감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예산은 최근 5년간 약 23배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전기차는 연간 보급 대수가 2014년 1,075대에서 2018년에는 30,669대로 급증하였으며, 충전인프라(환경부 기준)도 2014년 237기(누적)에서 2018년 말 10,171기(누적)로 대폭 확충되었다. 전기차에 이어 2013년부터 보급이 시작된 수소차의 경우 2015년 48대(누적)에서 2018년 말 기준 889대(누적)가 보급되었으며, 수소충전소(환경부 기준)도 2015년 9기(누적)에서 2018년말 기준 14기(누적)가 보급되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 정비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화학물질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이행지원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 환경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4	'15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 환경 분야(조원)	6.5	6.8	6.9	6.9	6.9	1.5%

* 본예산 기준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노후시설 개량 중심 수질사업 내실화,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보급률을 고려하고,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편중된 환경부 예산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신설투자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동 수질사업 예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환경기초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반침하, 수도관 파열, 누수 등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노후 시설 개량 예산을 확대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상습침수지역 정비,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 대한 투자 등은 강화함으로써 내용면에서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또, 4대강 녹조 등 수생태계 건강성 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수생태계 건강성과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도시침수와 가뭄을 완화하고, 비점오염원도 저감하는 등 종합적인 물 관리 솔루션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에 중점 투자

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2012년($41\mu\text{g}/\text{m}^3$)을 저점으로 상승하고 있고 (2016년 $48\mu\text{g}/\text{m}^3$),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이 전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상황이다. 새정부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저감하기로 하였으며 지름 $2.5\mu\text{m}$ 이하인 초미세먼지($\text{PM}_{2.5}$) 환경기준을 일평균 $35\mu\text{g}/\text{m}^3$ 및 연평균 $15\mu\text{g}/\text{m}^3$ 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2018년 3월 27일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2018년 4월)하고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강화(2020년 1월 시행 예정)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과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개소(2018년 6월)하는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나 건설기계 저공해화 등 단위 투입비용당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한편, 어린이 통학차량과 소형 화물차량의 LPG 전환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4~5종 영세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반도 3대 핵심 생태축 보전·복원 강화

백두대간, 4대강, DMZ, 국립공원, 습지 등 핵심생태계의 훼손지역을 적극적으로 복원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한다.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습지, 생태·경관우수지역, 도서지역 등을 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하고, 보호지역 내 사유지 매입 및 훼손지 복원 등 생태복원 사업을 강화한다.

도시 내 단절된 생태축 복원사업, 건물 옥상에 비오톱(예 : 정원)을 조성하는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등을 통해 생활주변의 생태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생태관광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통해 국민들의 생태체험 기회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 공고화

2018년 3월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9년부터 시행되었다.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가 도입되며,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되도록 개편된다.

이에 따라, 흡입독성챔버 등 화학물질 위해성 시험기반을 확충하고, 살생물제 승인 심사 및 위해성 평가자료 작성 지원 등 중소기업의 제도 적응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19	'20	'21	'22	'23	연평균 증가율
□ 환경분야	73,972	88,259	95,692	101,318	105,535	9.3
○ 물환경	39,463	40,060	43,020	46,971	48,829	5.5
○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6,708	8,177	7,821	8,336	8,986	7.6
○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13,808	26,371	31,044	31,939	33,364	24.7
○ 자연환경	6,379	6,360	6,310	6,415	6,569	0.7
○ 환경일반	4,739	4,638	4,725	4,832	4,960	1.1
○ 해양환경	2,875	2,653	2,772	2,825	2,827	△0.4

* 본예산 기준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미세먼지 저감 사업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수송부문에 대해서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당장 폐차가 어려운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DPF)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과 소형 화물차량의 LPG 전환을 지원하여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사업장 배출원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비재정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면서, 4~5종 영세사업장에 대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등 규제순응 지원과 모니터링 강화를 병행하고,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한·중 협력 강화를 위해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본격가동하고,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친환경차 보조금은 내연차량과의 가격차이, 생산량, 핵심부품 기술발전 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하면서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및 협력금제도 등 비재정사업으로 단계적·점진적으로 전환하여 자생적인 시장 생태계 구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2019년 5월 상수관망관리 부실 및 수돗물 사고 대응체계 미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천 수돗물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후 서울, 포항 등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 먹는물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한 바, 정부는 스마트 SOC를 활용하여 먹는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노후상수도 정비 등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의 지방상수도에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ICT를 활용한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한다. 실시간으로 수질·수량을 측정해 수돗물 사고를 사전에 감시하고, 수질 이상이 감지될 시 오염수를 자동배출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다.

또한, 지방상수도시설에 대한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기 시설개량 및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며,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인력·전문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상수도 전반에 걸친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지방상수도에 대한 정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 상수관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부터 추진 중인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2020년까지 모두 착수하여 2028년까지 계획된 사업을 2024년에 조기 완료하여 시급한 시·군 지역의 관로 정비를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 자원순환기본법 본격 시행으로 자원순환사회 건인

정부는 2018년 하반기 불법폐기물 급증에 따라 방치·불법투기·불법수출 폐기물에 대해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하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19.2월)’을 수립·추진, 이후 약 120만톤의 불법폐기물을 2020년까지 전량 처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간에 의존하던 폐기물 처리를 위해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불법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 깨끗한 국토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매립장,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지속하되, 노후시설 현대화나 인접지역 간 광역화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2018년 5월 수립한 폐기물 재활용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저감, 재활용산업 활성화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재활용대상 폐기물을 비축하는 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등록 및 안전관리 강화

2001~2011년간 (주)옥시 등 11개 회사에서 14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판매하였고, 2012년 2월 질병관리본부에서 호흡기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확정함에 따라, 2013년 8월부터 정부는 가해기업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전제로 인과관계가 입증된 피해자에 한해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하여 왔다. 2017년 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 이외 질환 및 만성·장기 피해에 대한 인정이 확대되고, 간병비 및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며, 가해기업 부도로 배상받지 못하거나 개별적 인과관계 소명이 부족한 피해자 등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18년 8월 법률 개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조건을 변경했으며, 특별구제계정 재원에 정부 출연금을 추가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개정하여 1톤 이상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의무적으로 유해성 정보를 등록토록 하였고,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하여 살생물제는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였다.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흡입독성챔버 등 유해성 시험기반을 조속히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법 이행을 지원하며, 살생물제법 시행에 대비한 시범사업 등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구분	'19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미세먼지 국내배출량 감축률(%) * 대책 기준년도인 '14년 배출량 기준 	12.5	⇒	35.8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생산량당 폐기물 발생량(kg/톤) 	39.4	⇒	3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등록건수(개) 	343	⇒	1,800

■ 추진배경

- 노후상수관 유지·관리 부족 및 미흡한 수도운영시스템 등으로 인해 인천 적수사고 발생('19.5월)
- 대부분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여건 및 전문성 부족으로 시설관리 및 사고대응이 미흡한 바,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안 필요

■ 주요사업내용

- 수돗물 공급 과정에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지원대상) 161개 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
- (지원기간) 2020~2022년
- 세부 사업내용
 - ICT 기반 수질관리(재염소설비, 정밀여과장치 등), 수질감시(자동수질측정장치), 위기대응(자동드레인, 관세척) 및 물관리 시설(스마트미터 등) 구축
 - 지방상수도 시설 전반을 DB화하여 잔존수명, 위험도 등을 평가해 최적·적기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관리시스템 마련
 - 유역수도지원센터 운영으로 지자체에 기술지원·이전 등 사고예방부터 대응·복구까지 전과정 지원
- (기대효과) 지방상수도 시설관리 개선 및 지자체 수도사고 대응역량 강화로 모든 국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여 보편적 물복지 실현

■ 추진배경

- 민간 처리시설 부족, 입지지역 주민갈등, 방치·불법 및 유해폐기물 등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국가차원의 “사회안전망” 부재
- 현행 민간처리체계를 보완할 “사회안전망” 확보차원에서 국가 주도의 공공 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추진 필요

■ 주요사업내용

- (사업기간) 2019년~2023년
 - *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19.2,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따라 사업 추진
- (사업내용) 권역별 공공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 * ’20년은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후보지 실태조사 및 기본구상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유해폐기물 처리체계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통해 현행 민간처리 체계의 한계점 극복
- 친환경적 처리시설 설치·운영, 이익 공유, 정보제공 등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선도적인” 폐기물처리 인프라 구축

9. 국방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국방비는 최근 5년간(2014~2018년) 연평균 4.9% 증가하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전력운영부문은 연평균 4.2%, 방위력개선부문은 연평균 6.5%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국방비 내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2014년 29.7%에서 2018년 31.3%로 증가하였다.

그동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안보의 구현을 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구축 및 현존 전력 능력발휘 보장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으며, 병 봉급 인상·급식 및 군수품 품질 향상 등 장병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였다. 또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주도적 대응을 위해 우리 군의 핵심전력 증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다.

< 국방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4	'15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 국방 분야 (일반회계 총계기준, 조원)	35.7	37.5	38.8	40.3	43.2	4.7%
○ 전력운영비	25.2	26.4	27.2	28.1	29.6	4.2%
○ 방위력개선비	10.5	11.0	11.6	12.2	13.5	6.5%

* 본예산 기준

국방비의 특성상 인건비, 급식·피복, 군수지원 등 경직성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방비 지출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군수품 상용화, 성과기반군수지원 적용 등을 통한 국방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전군 유사·중복 정보체계 통폐합 등 업무효율성 증대 및 예산절감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전방위 위협 대응 강화 및 전작권 전환 역량 적기 확보

북한 및 주변국의 다양한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력 및 우리 군 주도의 지휘구조 개편을 위한 전작권 적기 전환 역량 등을 확보하기 위해 ①핵·WMD 대응 전력, ②전작권 전환 핵심군사 전력, ③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전력, ④군구조 개편 기반 전력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찰·통신 위성, 유·무인 정찰기 확보 등을 통해 감시·정찰 능력을 확장하고, 지대지·공대지 등의 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확보로 전략표적 타격 능력을 보강하고, 미사일 탐지·요격·통제 체계를 확보하여 복합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확장된 작전지역과 우리 군 주도 지휘구조 개편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해상·공중 전력을 강화하여 튼튼한 안보를 보장할 것이다.

■ 국방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국내방산 경쟁력 강화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미래 전략기술 및 첨단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국내 방위산업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수출 지원 등 국내 방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R&D 분야는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자율·인공지능 기반 감시정찰, 미래형 추진 및 스텔스 기반 플랫폼, 미래형 첨단 신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한 전문화된 국방기술개발 추진을 위해 연구인프라보강, 기술/연구지원 등 출연금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민간의 성숙한 기술을 방위력개선에 활용하여 국방 R&D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군 협력에 적극 투자할 것이다.

방산분야는 국방벤처·방산강소기업의 창의적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부품국산화 및 무기체계 개조개발을 지원하는 등 국내 방산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 투자할 것이다.

■ 우리 군 전력의 역량 발휘 보장

장병은 오로지 전투 준비와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의식주 및 의료 등 기본적 복무여건을 사회발전 수준에 맞게 향상시키고, 군 생활이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자기개발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따라서, 직업군인 주거지원제도 발전 및 처우개선, 병영생활 의식주 질적 수준 향상 등을 통하여 직업장병 의·식·주 등 기본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통하여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생산적 군 복무 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장병 안전·지자체 상생가치 실현으로 국민 신뢰 회복

환경문제를 새로운 재난으로 인식하여 병영시설·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군사시설의 유해환경 정비 등을 통하여 장병의 안전한 주거여건을 조성하고, 군사시설 주변의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군사시설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유해환경으로부터 장병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 군사시설 유해환경 개선, 주민 친화적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국방운영으로 도약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추세에 대비하여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을 국방운영 시스템에 접목하여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병력은 감축되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스마트 군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첨단장비운용에 적합한 국방인력구조 개편을 위해 정원구조를 개선하고 간부·군무원 증원할 계획이며, 실전적 과학화 예비군 훈련체계 개선·발전을 통하여 병력 감소에 대비해 나갈 것이다.

■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국방예산 효율성 제고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국방개혁 2.0 등 국방분야 중점사업의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국방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방 전반의 재정개혁 추진을 위해 군수품 상용화 확대,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업무효율성 및 예산절감 효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 국방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19	'20	'21	'22	'23	연평균 증가율
□ 국방 분야	466,971	501,527	533,882	564,314	595,018	6.2
○ 전력운영비	313,238	334,612	352,896	364,547	374,861	4.6
○ 방위력개선비	153,733	169,915	180,986	199,767	220,157	9.4

* 본예산 기준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위력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핵·WMD 대응 전력, 전작권 적기 전환 전력 등을 조기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선제적·적극적 위험관리로 현안 발생 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여 전력화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합참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소요결정 체계를 개선하고, 무기체계의 특성·사업난이도를 고려하여 사업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유연한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복잡한 방위력개선사업의 규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전력화 지연을 방지하고 핵심 군사능력을 적기에 확보하는 등 사업추진방식을 효율화 해 나갈 계획이다.

■ 방산기업 안정적 경영 여건 마련

방산원가구조 개선을 위해 실 발생비용 보상 원가방식에서 표준원가 개념을 적용하여, 원가절감 유인 및 적정원가 보상을 제공하는 방산 원가구조 개선을 통해 방산수출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다.

사업정보공개를 확대하는 Debriefing(업체의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등 공개), 업체를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DAPA-GO를 통해 업체의 방위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체상금으로 인한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체상금을 50%로 축소하는 제도를 정착하고, 지체상금에 대한 소송 제기에 따른 정부 및 업체의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체상금 이의제기 시 공정한 심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ombudsman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제도를 실시할 것이다.

■ 수출주도형 방위산업 육성

최근('16~'18년) 30억불 수준에서 정채된 방산수출 50억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산수출 기술료 면제,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확대, 절충교역 제도 보완, 방산수출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또한 방산분야의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체계적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며, 정부차원에서 국제방산협력 및 시장개척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새로운 수출 판로개척 등 안정적 수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 군 전력의 적정 가동 보장

현존 전력의 가동률 보장 및 능력 극대화를 위해, PBL 등 군수지원 확대로 장비 가동률을 향상하고 계획정비 강화로 핵심전력 정비적체를 해소하여 첨단무기체계 등에 대한 후속 군수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시 초 주요 장비 능력발휘 및 전투 생존성 보장을 위해 신규 전력화 장비에 부합한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 방탄복·헬멧의 100% 확보를 통한 전투 생존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 장병의 기본적 인프라 개선 및 軍 복무의 합리적 보상 및 지원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 봉급을 인상할 계획이며, 전 장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 전역 후 사회적응 지원 등 장병 자기개발 지원으로 미래 준비에 대한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간부 복지 증진을 위해 수요자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 제공을 위해 간부숙소를 조기 확보하여 초급간부 주거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민간병원 이용 시 의료비의 개인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병사 단체 실손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국군외상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장병의 진료 여건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 유해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 보장 및 지역사회 상생 도모

미세먼지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의 보급 기준 확대, 공기청정기 확대 보급 등으로 장병 건강을 보호하고 군 구매물량 승용차를 친환경차로 보급하는 등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으로 국가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군사시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수질·수량이 불량한 급수원을 조속히 개선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 여건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작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 해·강안 철책 철거하고,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편익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며, 군 유휴시설 철거 등을 통하여 주민 친화적 시설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방인력구조 개편과 스마트 국방혁신을 통한 스마트 군 육성

병력 감소 자원을 간부·군무원으로 대체하기 위해 전투부대는 장교, 부사관 중심으로 보강하여 전투력을 강화하고, 비전투분야는 민간인력 활용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간부 획득·운영체계 개선으로 숙련된 전투력 확보를 위해 기존 피라미드형 계급구조에서 향아리형 계급구조로 전환을 추진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공간의 제약없이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을 추진하기 위해 마일즈 장비를 보급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실전적 교육 훈련체계 구축을 위해 육군 소 부대의 연 2회 이상 과학화 실전 기동 훈련 여건 보장 및 군·사단급 과학화 훈련장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며,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가상·증강현실을 통해 실제 전장 환경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모의훈련체계 확대,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구축, 스마트 예비군 훈련 관리체계 도입에 적극 투자할 예정이다.

■ 국방비 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국방업무와 현 정보체계를 분석하여 중복되지 않고 누락 없이 전 업무 영역을 지원할 수 있는 국방정보화 서비스 목표모델을 정립할 예정이다. 소요 조정 및 통합개발 등을 통한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데이터의 집중 및 표준화를 통하여 빅데이터 분석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

또한, 성과기반군수지원(PBL) 확대 적용을 통한 수리부속 조달 및 정비지원에 향상된 성과달성으로 장비가동률 보장 및 비용·노력 절감에 기여할 예정이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구분	'19		'23
▪ 국방비 내 방위력개선비 비중	32.9%	⇒	37.0%
▪ 병 봉급 인상 (만원, 병장 기준)	40.6	⇒	69.6

□ 개 요

- 수출 가능성 있는 무기체계를 구매국이 요구하는 성능 및 운용 환경에 따라 개조개발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내용) 과제당 최대 3년간 개발비의 75%(최대 100억원)

* 중소기업 75% 이내, 중견기업 60% 이내, 대기업 50% 이내

- (지원방법) 개발비 직접지원 또는 이차보전

- (선정절차) 1차 과제 선정(중소기업만 대상) 후 잔여지원금 한도 내에서 2차 대상과제 선정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현황

사업연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예산(억원)	21	27	22	22	22	200
선정과제수	6	1	6	7	2	미정

□ 제도 확대 필요성

- 軍수요 중심의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사업 투자확대 필요

- 방산업체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형 산업구조로 도약

- '19년 과제공모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대형무기체계 개조개발을 통한 가시적 수출성과 창출 기대

<대형무기체계 접수과제> (총개발비 100억원 이상)

- 수출형 경공격기 성능향상을 위한 급유장치 등 개조
- 수리온 모래지역 운용을 위한 엔진/APU 보호시스템 개발
- FA-50 수출기용 레이저 유도 및 표적 추적기능 통합개발
- 수리온 수출기본형 무장능력 확장 개발
- 중동 수출형 K2전차 주요장치 개조개발

■ 개 념

- 주요 전투장비의 가동률 보장을 위해 업체와 장기계약을 맺어 그 수행성과(performance)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

* 성과기반군수지원 (PBL) : Performance Based Logistics

■ 현 문제점

- 주요 무기체계 수리부속은 해외구매 및 주문제작 형태로 조달기간 장기화
- 주요 무기체계 수리부속 확보 및 정비 애로에 따른 장비가동률 저하

■ 추진경과

- 新정비지원개념으로 성과기반군수지원 도입 검토 : 2006~2009년
- 제도 시행기반 구축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정 등) : ~2010. 6월
- 시범사업 추진 (공군 KT/A-1 등 3개 장비) : 2010~2011년
- 주요 무기체계 적용 확대(現 총 10개 장비) : 2011년~

* 공군 F-15K, (K)F-16 엔진 등

■ 개선효과

- 수리부속 조달기간 단축 및 안정적인 가동률 보장
- 장기 미사용 수리부속 최소화 및 재고수준유지 비용 감소

10. 외교·통일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외교수요 증가 등에 따른 재정투자 확대

외교·통일 분야 총지출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9% 증가하였다. 이는 글로벌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 역할 확대, 신흥국 부상 등 외교환경 다변화,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 증가 등에 따른 외교 수요 증가와 ODA 및 국제기구 분담금 등 국격 제고를 위한 지출이 계속 확대되어 온 것에서 주로 기인한다.

아울러,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미·일·중·러 주요 4국과의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꾸준히 강화하는 한편,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평방 및 신평방 지역에 대한 교류협력 정책을 원활히 이행하여 아세안, 인도, 유라시아 지역 등으로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활발히 확대해 왔다.

또한, 반세기만에 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농업, 산업 등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했다.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16~2030)’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참여, ODA 지원실적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1년 1조 4,667억원에서 2018년(잠정) 2조 2,586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ODA/GNI비율도 2011년 0.12%에서 2018년(잠정) 0.14%로 증가하였다.

< 외교·통일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4	'15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 외교·통일 분야(조원)	4.2	4.5	4.7	4.6	4.7	2.9%

* 본예산 기준

■ 공공외교 역량 지속 강화 및 국민외교 추진

우호적 외교환경 조성을 위한 스포츠 공공외교, K-Pop을 위시한 한류 확산 등 주재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공공외교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프로젝트를 지속 확대해왔다.

주요 외교현안 대응전략 개발, 공공외교법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공공외교 통합조정체계를 공고화하는 한편, 현지 맞춤형 종합 공공외교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향상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본격적인 국민외교 발전을 위해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틀 마련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2018년에는 남과 북이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전면적·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였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간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 남북대화의 일상화 단계에 진입하였다.

철도·도로, 산림, 체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협력을 통해 남북 화해 및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였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탈북민 정착지원 등 분단의 고통을 해소·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와 함께, 평화·통일교육 확대 등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 및 외교수요에 부응하는 외교역량 제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 외교 추진,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지속 등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재정을 적재적소에 투자하여 국익중심, 국민중심의 외교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 등 주변국과의 전통적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키는 한편,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외교 역량을 지속 제고해 나갈 것이다.

■ 영사조력법 시행을 위한 재외국민보호 기반 확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19.1.15.)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외 체류 우리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영사조력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영사조력법 시행('21.1.16.)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관련 지침을 정비하는 동시에 재외국민 보호 관련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영사조력 법령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재외공관 영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영사조력법을 차질없이 시행함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한층 강화된 영사조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 국민외교 · 공공외교 역량강화 도모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을 위해 지역별 · 국가별 맞춤형 공공외교를 한층 강화해나가는 한편, 다양한 공공외교 주체(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 민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문화 · 지식 · 정책 공공외교를 아우르는 융복합 공공외교를 중점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한류의 전략적 확산 및 디지털 공공외교도 점차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대국민 소통공간인 국민외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모바일 앱을 포함한 온라인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유·무상원조 역할 강화 및 국민 참여 확대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각각 유상 ·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국내 ODA 정책 및 제도 기반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협력을 위해 다양한 개발협력사업 주체들 간의 협력 강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또한, ODA 사업의 경쟁적·중복적 이행을 지양하고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프로젝트에 多부처가 협업하는 융합예산의 발굴을 확대하는 등 ODA 투자의 전략성 및 효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에 대한 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무상사업 심의 과정에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 및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비정부부문과의 파트너십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평화경제’구현 및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 확산

정부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간 교통망 연결 등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DMZ 등 남북 접경 지역을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를 체감하고 남북이 호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 번영의 장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통일·대북 정책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우호적 담론과 지지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 외교·통일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19	'20	'21	'22	'23	연평균 증가율
□ 외교·통일분야	50,648	55,329	58,750	62,568	66,090	6.9
○ 외교부문	37,026	40,595	41,969	44,105	46,262	5.7
○ 통일부문	13,621	14,734	16,781	18,463	19,828	9.8

* 본예산 기준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외교 환경 다변화에 대응한 외교역량 강화 노력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다. 또한 외교 다변화를 통해 우리 외교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보다 심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우리의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과 정부간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외교를 활발히 전개함으로서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여 나갈 것이다.

■ 신남방·신북방정책 추진을 통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신남방정책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 공동체’를 구축하고 인도 등 서남아·태평양 국가들과의 전략적 교류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신북방정책 이행을 위해 러시아·중앙아시아 등과 정상급·고위급 교류를 지속 추진하고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각급 협의채널을 내실있게 운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 협력 채널을 활성화하고 우리 청년들의 러시아 진출을 지원하는 등 민간 교류 외연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평화구축위원회·인권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이사국 활동 등을 통해 국제평화·안보, 인권,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기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격 등을 감안하여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강화

3,000만 해외출국자 시대를 맞아 제정된 영사조력법을 충실히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 국민에게 해외안전정보를 적시에 전파하여 사건사고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고, 사건사고 발생시 영사조력을 효과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다.

해외안전 정보와 관련하여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는 등 영사조력을 필요로 하는 우리 국민이 보다 세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24시간 365일 해외 사건사고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영사콜센터의 민원 접수 채널을 확대하고 무료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 국민의 편의 제고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 개발협력 분야 인적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 추진

청년·스타트업, 중소기업 및 국내 비정부부문(시민사회, 학계, NGO 등)의 ODA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등 개발협력을 통한 ODA 생태계 육성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①청년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②개발협력 코디네이터 파견, ③장기 해외봉사단 확대 및 ④KOICA 사업의 경력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여 개발협력분야 청년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이다.

■ 남북간 교통망 연결 및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통해 남북간 교통망을 연결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선도하는 ‘평화경제’ 구현을 차질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 진전 등 여건이 조성되는 데 따라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종합적 구상을 마련하여 DMZ의 복합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평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북간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민족 동질성 회복 지원

평화통일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을 구축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요국 정책협의, 해외 신진학자 교류 등 평화통일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국제경기 단일팀 출전, 문화유산 공동발굴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교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탈북민 정착지원은 탈북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거주지 중심의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실시하고, 중앙-지방-민간 간 협업을 통해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특히 하나원 내에 맞춤형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관을 신규로 운영하고, 남북통합문화센터를 개소하여 남한주민과 탈북민이 문화를 매개로 소통하며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구분	'19		'23
▪ 재외국민보호제도 만족도(점)	75.0	⇒	81.5
▪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수급률(%)	23.8		21.8

■ 추진배경

-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이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영사조력법”）」이 2019.1.15. 공포
- 부칙에 따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1.1.16.부터 시행 예정으로, 법 시행 유예기간 중 하위법령 제정 및 관련 지침 정비, 관련 인프라 확대 추진

■ 주요내용

- 영사조력 6개 유형*별 영사조력의 내용 규정
 - * ①형사절차, ②범죄피해, ③사망, ④미성년자·환자, ⑤실종, ⑥해외위난상황
- 여행경보제도, 무자력자 긴급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등 투입,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등 기존 재외국민보호제도의 법적 근거 규정
-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등 재외국민보호체제의 체계적 구축 기반 명시
-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및 관련 인력·예산 확보 책무와 재외국민의 해당국 법령·제도 준수, 문화·관습 존중, 안전 확보 주의 책무를 동시에 규정하여 영사조력 관련 국가와 재외국민 간 책임과 의무의 균형 도모

■ 기대효과

- 헌법상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처한 우리 국민에게 법률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 제공

■ 추진배경

-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기반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 국민의 평화 체감도 제고
-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 및 「9.19 군사합의」에서 DMZ 평화지대화에 합의, GP 시범철수, 상호 적대행위 중지 등 합의사항 이행
- DMZ 포럼, 남북공동 종합조사, 웹플랫폼 구축,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DMZ 평화지대화 합의사항 이행 동력 확보

■ 주요사업내용

- DMZ 국제포럼 개최, DMZ 종합조사,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DMZ 통합 플랫폼 구축, 「남북접경지역관리위원회」 구성 준비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특징)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기 위한 종합적 구상 및 계획
- (기대효과) DMZ의 복합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평화를 체감

11. 공공질서·안전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사법, 치안 등 법질서 유지와 사회통합, 재난 관리 관련 투자는 2014년 16.9조원에서 2018년 19.1조원으로 연평균 4.8% 증가하였다.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분야로 그간 안정적인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여 국민 범죄불안 해소, 사회적 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확대 등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였다.

특히,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도입, 112 범죄신고시스템 고도화 등 범죄피해에 대한 보호 강화와 법률조력 강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복지분야에 중점 투자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해·재난 예방투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다.

< 공공질서·안전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4	'15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 공공질서·안전 분야(조원)	15.8	16.9	17.5	18.1	19.1	4.8%

* 본예산 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여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범죄 피해자에게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긴급생계비, 간병비 등의 다양한 의료·경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일센터·성폭력피해자 통합 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심리치유, 상담, 법률조력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또한, 진술조력인·피해자국선변호사 등의 법률조력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수사·재판 참여 지원 및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으며, 보복범죄 우려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이전비·위치추적장치 등 신변보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조력 강화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무료 변론 등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민을 위한 맞춤형 법률복지 서비스인 법률홈닥터 운영, 중소도시 지역 등의 법률 복지 향상을 위한 동(洞)지역 마을변호사의 지속적 확대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성폭력, 약물, 정신질환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도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심리상담 치료 프로그램 확대, 경제력이 미약한 경미 범죄 주취·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감독시스템 기능 개선, 전자감독 대상자의 24시간 위치추적 및 비상 경보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신속대응팀 확대 등 다양한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여왔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서비스 강화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제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전자소송 확대, 사건기록 전자화, 판결문 공개 등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우선지원창구를 설치하고 전담 민원상담위원을 배치하는 등 사회적 약자가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국민생활에서의 안전체감도 대폭 개선

여성·청소년 중심 치안정책을 아동·노인·장애인까지 확장하고 예방치안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주력한 결과, 주요 치안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특히, 스토킹·데이트폭력·불법촬영 등 젠더폭력 전반에 대해 강력 대응한 결과 여성들의 체감안전도가 향상되었다.

또한, ‘차량 중심’ 교통정책에서 ‘사람 우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6년 11월 3,884명에서 2017년 11월 3,805명으로 2.0% 감소하였다.

< 주요 치안 지표 >



■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

최근 이상기후로 국지성 집중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 특히, 여름철 평균 강수량과 국지성 호우빈도는 증가 추세로서 방재시설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재해도 빈발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하천 및 제방 보수,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침수, 붕괴 등 재해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을 중점 정비하는 등 재해예방 투자를 확대하여 재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과거에 비해 피해 규모 및 피해복구 지출 소요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재정투자 효율성 측면에서도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재해 피해액 및 복구비 추이 >

구 분	'06~'10 평균	'11~'17 평균	비 고
예방투자	3,385억원	6,757억원	99.6% 증액
피 해 액	5,968억원	3,919억원	34.3% 감소
복 구 비	1조 1,554억원	8,185억원	29.2% 감소

< 재해예방 인프라구축 재정투자 추이 >

구분(억원)	'11	'12	'13	'14	'15	'16	'17	'18	'19
재해위험지역 정비	3,075	3,688	4,293	3,523	4,640	3,692	3,586	3,760	3,992
소하천정비	2,072	2,269	2,585	2,093	2,645	2,115	2,115	2,115	2,585
우수저류시설	388	557	690	655	881	718	710	695	553

■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체계 구축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택, 온실'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가입률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주 택 >



< 온 실 >



■ 생활 속 안전관리 강화

생활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내실있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과 안전점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점검 실명제 및 지자체 평가제 도입, 점검결과 공개 제도화 등을 시행하였다.

또한, 승강기 사고의 경우, 종전에는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 사고만 조사하였으나,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개정(’19.3월 시행)하여 모든 승강기 사고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추진하고 있다.

■ 해양경계 및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 강화

우리해역의 해상경계 및 순찰 강화, 해양사고 예방 및 수색구조 능력 대응을 위하여 함정 및 헬기, 항공기 등을 확충하고 노후함정 대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함정은 2009년 283척에서 2019년 337척으로 헬기, 항공기 등 항공전력은 17척에서 24척으로 크게 증강되었으며 노후함정은 매년 4~5척씩 대체 건조 중이다. 특히 항공전력 중 대형헬기가 처음으로 2014년 부산에 배치되었으며 이후 2017년에 목포에 배치되어 해경의 해상 순찰 및 해양사고 대응 능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또한 해상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2017년도에 경인·태안 연안관제 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영흥수도, 울산, 포항 등의 관제 사각지대에 레이더를 확충하여 해상교통 관제면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 불법 외국어선 감소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서해 5도 특별 경비단을 창단하고 경비함을 증강했다. 또한 현장중심 단속체계 개편 등으로 최근 외국 불법침범 어선 및 무허가 외국어선이 감소하고 있다. 불법 외국어선이 많았던 서해 NLL 지역 경비를 위해 2017년 4월부터 연평·대평도에 특수진압대를 상시 배치중이며 해군, 해수부 등 관계기관 등과 수시로 합동훈련, 단속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 외국어선 감소는 우리 어민들의 생업터전 보호와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 불법 조업 외국어선 조업 현황 등 >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2020년부터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사형 등 단기 3년 이상 중범죄자 중 경제적 취약계층은 '21년에 도입 예정)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선변호인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의 수혜자 폭을 확대하는 등 법률 복지서비스의 충실화를 도모한다.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한 서민들에게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실패했다 하더라도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법률홈닥터, 무변촌에 마을변호사를 운영하는 마을변호사 사업 등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복지서비스에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형사사법절차에서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재소자 및 출소자 취업역량 강화

수형자 처우의 중심을 구금에서 출소 후 취업지원 강화로 전환하여 출소 후 취업에 유용한 직업훈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복귀 시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직업활동과 관련된 기능을 습득하게 한다. 수형자 취업에 유용한 직종을 선별하여 2019년부터 버섯종균, 정보통신 설비 직종을 확대하였고 2020년도에도 수형자 취업에 유용한 직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수형자의 출소 후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정착금인 작업장려금을 인상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함양을 유도할 것이다. 이에 따라 수형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에 큰 뒷받침이 될 것이다.

■ 재소자 등 인권보호 강화

정서·심리적 문제로 인해 재범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치료적 처우를 강화하여 범죄 요인 제거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또한, 노후·유희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수용공간을 확대하여 교정시설 및 소년원 과밀 수용 해소를 지원할 것이다.

소년원생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외부병원 진료 확대가 필요하므로 건강보험관리공단 예탁금을 증액하는 등 소년원생 의료처우 개선을 강화할 것이다.

■ 대체복무 시설 개선 및 운영

대체복무자의 교정기관 36개월 합숙복무를 위해 구 경비교도대 생활관을 리모델링 및 신축하여 2020년부터 대체복무역 540명을 복무하도록 하고, 2022년까지 1,620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를 통한 인권강화

경제적으로 실패한 서민, 중소기업을 위한 New Start 상담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재비행 방지와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사범형그룹홈 지원을 강화하며,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증인지원실을 꾸준히 확충할 계획이다.

■ 조정제도 활성화 추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분쟁당사자들의 원만한 사건 해결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사건 당사자들이 시간·비용을 절약하고 다수의 조정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상근조정전담변호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공동체 협업치안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보호 내실화

민간협력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의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경찰-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 등이 지역사회의 치안 문제에 대한 근본적·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밀착형 공동체 협업 치안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이들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경우 다기관 협업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것이다.

■ 인권보호를 경찰행정의 기본원리로 정착

인권정책연구 및 교육 강화, 인권영향평가 확대 시행 등 인권보호의식 확립 노력을 지속하고, 수사부서의 조사공간과 사무공간을 분리하여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무환경도 개선한다. 영상진술 녹화실을 추가로 설치하여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치장 환경 개선 및 변호인접견실 설치, 인권친화형 포승 도입 등 유치인 권리도 보장할 계획이다.

한편, 형사 소송절차에 피해자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 평가를 확대하고, 신속한 피해회복과 근본적 갈등·분쟁 원인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회복적 경찰활동을 도입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기후 리스크에 대비한 재해·재난 안전 인프라 투자 확대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위험요인 증가, 특정 시기의 강수량 감소 및 물 부족에 따른 가뭄 발생 우려 증가 등 재해 예방투자의 필요성이 지속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후 리스크에 대비한 재해·재난 안전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사후적 재해복구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특히, 재해예방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 ‘개별사업 단위’에서 ‘마을 단위 종합정비’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예산 절감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한 우수저류 시설도 지속 확충하고 그동안 채원 부담으로 인해 정비가 여의치 않았던 사유지 내 붕괴 위험지역도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국민 일상보호를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확대

교통안전 강화, 산재 감소, 자살예방 등을 위한 예산 지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3대 분야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등 국민 일상보호를 위한 생활 밀착형 안전 투자를 적극 확대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및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 지역 교통안전 강화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아울러, 위험도로 개선, 도로 유지·보수, 철도 노후시설 개량 등 노후 교통 SOC에 대한 안전 보강 투자도 중점 지원한다.

그리고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 현장 추락 사고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상담요원도 확충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노후 시설 점검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서면·현장방문 위주의 지자체 평가 방식을 지역안전수준 종합평가로 개선하고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정보 공개도 추진할 계획이다.

■ 대형·복합재난 대비, 전국적 대응체계 구축

대형·복합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4개 중앙119특수구조대와 7개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의 장비 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형 소방헬기 2대를 추가 보강하여 전국 4대 권역별 특수구조 대응체계를 완성할 것이며, 울산 화학센터에는 국내 최초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도입하여 고양저유소 화재('18.10월)와 같은 초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를 단시간에 진압할 역량을 갖추어 예정이다.

■ 해양사고 대응능력 강화

해양사고 예방 및 적극대응을 위해 전국 95개 해양경찰 파출소에 신형 연안구조정 배치 및 전용 계류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연안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95개 파출소 중 25개를 구조거점 파출소로 설치하여 전문인력 및 장비 등을 집중 배치하고 잔여 70개 파출소는 초동 잠수요원을 양성하여 해양사고 발생시 30분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원거리 및 대형 해상사고 대응을 위해 대형헬기를 거점별로 배치하고 구조사 및 관련 구조장비 등도 보강할 계획이며 해상에서의 안전한 선박 통항을 위해 선박 운항이 많으면서 해상사고가 많았던 군산, 목포, 제주, 서귀포 지역에 대해 연안 해상교통관제(VTS) 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 민간 협력·지원 체계 강화

해양관련 종사자와 해양사고 공동 대응 및 수색·구조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일반 민간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해 피복, 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일반 민간인에 대해서는 구호활동시 활동비 등을 지급하여 해양사고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상에서의 안전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위하여 30년이 초과된 노후 유·도선에 대한 선박 대체건조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 공공질서·안전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19	'20	'21	'22	'23	연평균 증가율
□ 공공질서·안전 분야	201,317	209,468	218,319	226,765	235,061	4.0
○ 법원및헌재	20,652	21,713	23,062	24,102	24,430	4.3
○ 법무및검찰	40,615	42,241	43,526	45,059	45,995	3.2
○ 경찰	113,558	119,910	125,777	131,783	139,027	5.2
○ 해경	13,845	15,252	15,988	16,101	16,161	3.9
○ 재난관리	12,647	10,352	9,967	9,719	9,448	△7.0

* 본예산 기준

3) 중점 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신규 도입

현재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인을 체포된 피의자까지 확대하여 수사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미성년자, 장애인,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후, 2021년부터 사형 등 단기 3년 이상 범죄에 해당하는 중죄로 체포된 피의자 중 경제적으로 취약하여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까지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기존 시설과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피의자국선변호인관리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여 형사공공변호인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성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익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 재판 절차에서 더 많은 피해자가 진술조력인,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고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 사례담당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혁신하여 피해아동의 재학대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등과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강력범죄 피해자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스마일센터를 확충하는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 소년원생 · 재소자 · 보호관찰대상자 등 인권보호 확대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한 시설 · 수용환경을 개선하고, 일반 · 보편적 교육에서 범죄별 · 개인별 맞춤형 교육으로 교정교화프로그램을 개편하는 등 재범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희부지 내 수용동 증축, 시설물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개별가족 중심의 가족접견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수용자 가족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원격의료센터를 운용하여 교정기관 부속의원과 외부의료시설 간 상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여건 미비로 교정시설 내 혈액투석실을 이용할 수 없었던 미결수용자를 위해 전용투석실을 신설 · 운영하는 등 수용자 의료처우도 개선할 것이다.

또한, 정신·심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치료 의지가 강하고 자발적 입원의사가 있는 빈곤 대상자에 대해 입원치료비를 지원하고,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자의 범죄자 관리를 강화하여 심신장애, 약물중독, 정신성적 문제 대상자의 심리상담 등 치료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심리치료 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건강 회복 및 안정적인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소년원생과 피치료 감화자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의약품과 의료비, 건강보험관리공단 예탁금을 증액하는 등 의료처우를 강화할 것이다.

■ 재소자 · 출소자 취업역량 강화로 사회정착 지원

직업훈련 내실화를 위해 산업현장의 수요가 많고 출소자가 일반인과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한 직업훈련 유망종목(예: 농기계정비, 세탁, 열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출장요리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통합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NCS 훈련기준을 반영한 직업훈련 및 사회연계형 직업훈련 시행을 통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한데 이어, 작업장을 신축하여 좁은 거실에서 대기하는 미작업자를 해소하고 출소 후 취업이 가능한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과 연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수형자 및 출소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출소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는 취업처를 알선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버스, 화물차, 택배 등 운전 일자리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수·대형차량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체복무 시설 개선 및 운영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현재 국방위 계류 중)하여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교정기관 36개월 합숙복무를 골자로 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교정시설의 구 경비교도대 생활관을 리모델링하여 합숙시설을 마련하여 우선적으로 2020년 대체복무역 540명을 복무하도록 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생활관 및 후생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신축, 증축을 통하여 1,620명의 대체복무 인원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체복무역에게 군인과 동일한 급여, 여비 등 운영비 등을 지급토록 지원하여 대체복무역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의경 단계적 감축에 따른 치안 공백 해소

집회·시위 대비, 청사 방호, 해안경계 등 다양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의경이 단계적으로 감축되어 2023년에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규 경찰관부대 창설, 경찰관서 출입 통제시설 확충, 해안경계업무 과학화 등을 통해 의경 폐지에 따른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지원 강화

소상공인의 68% 이상은 전·월세로 사업장을 임대하는 등 영세한 경우가 많아 경우가 많아 태풍, 집중 호우 등으로 침수나 파손 피해가 발생하면 스스로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목적물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포함하도록 '풍수해보험법'을 개정하여 2018년 5월부터 22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2019년에는 37개 시군구로 확대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어 2020년부터는 보험료 지원을 2배 인상(국고 25→50%) 하여 소상공인의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해상사고 대응을 위한 초동잠수요원 양성

세월호 및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이후 해양경찰 현장요원들의 수중 구조대응능력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전문 잠수요원 채용 및 자체 인력양성을 통해 전문구조 요원을 확보 중이나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고 특성상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고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일선 파출소 및 함정 요원들을 대상으로 해상 차량추락 사고 및 전복선박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을 위해 연안 초동잠수요원을 양성할 계획이다.

■ 해상 구조장비의 최적 운용성능 보장

경비함정이 크게 증강되어 함정 사용연수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함정 정비 및 관련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함정운용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함정정비 및 노후 함정 전문기관 검사 등을 지원하고 제2정비창인 서부정비창 설립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안 구조정 등 장비 배치시 계류시설 등 관련 부대시설 등도 추진하여 장비 운용 성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의 해상교통관제 운영체계 구축

현재 우리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개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이 운용 중에 있으며, 2021년에 군산, 목포, 2024년에 제주, 서귀포 등 4개소가 추가로 운용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고가 발생했던 인천 영흥수도와 포항구항에 레이더를 신규 설치하여 해상교통관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 레이더 교체 등을 통해 장비 운용 능력을 향상하는 등 관련시설에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 소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사기 진작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들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 연구, 복지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중앙소방학교는 이론 중심이 아닌 실화재 훈련시설을 활용해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시행할 것이다. 2019년 5월 신설된 국립소방연구원은 2배 규모로 충원된 인력을 활용해 소방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R&D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위해 대상인원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19		'23
▪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건수(만 건)	180	⇒	190
▪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율(%)	7.6	⇒	7.2
▪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중 가족접견률(%)	15.1	⇒	19.5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율(%)	38.4	⇒	60.0
▪ 주택임대차 조정구조 수혜자 수(명)	3,000	⇒	5,100
▪ 해양사고 인명구조율(%)	99.4	⇒	99.6

■ 추진배경

- 불법체포, 고문 등 수사단계에서 국민들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 수사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원권 강화 필요
- * '11년 양천경찰서 고문사건, '17~'18년 광주지방경찰청 불법체포사건

■ 주요내용

- (지원대상) 국선변호인 지원 대상을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에서 체포된 피의자까지 확대
 - (1단계) 체포된 피의자 중 미성년자, 농아자 및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는 2020년에 실시
 - (2단계) 사형 등 단기 3년 이상의 중범죄로 체포된 자 중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2021년에 실시
- (운영주체/운영기관) 피의자국선변호인관리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 관리위원회는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이 3인씩 동수를 추천하여 조직 및 업무의 독립성 보장
- (역할) 공공변호인은 선임과 함께, 피의자 접견·신문 참여 및 수사 절차에 관한 의견 개진 등의 업무 수행

■ 기대효과

- 국선변호제도를 수사 중인 피의자까지 확대하여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침해 방지 및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실질화

■ 추진배경

- 현재에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5①)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18.6.28)
- 이에 따라 현재에서 제시한 기한인 '20.1.1일까지 병역법의 병역종류에 대체역을 신설하는 등 대체복무제도 시행 필요

■ 주요내용

- (대체역 편입신청)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을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은 입영소집일 5일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으로 편입 신청
- (운영주체)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체역 심사·의결
- (대체역 복무기관) 교도소, 구치소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
- (복무기간) 36개월, 다만 1년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
- (20년 소요재원) 25,926백만원
 - 대체복무 합숙을 위한 11개 기관 기존 경비교도대 합숙시설 리모델링 비용 : 24,172백
 -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한 급식비, 의료비, 피복비, 여비 등 대체복무 운영 경비 : 1,754백만원

■ 기대효과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시행을 통해 종교적 양심 및 신앙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방지에 기여

■ 추진배경

- 여가활동 및 노후선박 증가로 증가하는 해양사고에 신속대응을 위한 잠수 인력 · 장비 확대

■ 주요내용

- **(구조인력 확보)** 중·소형 함정 및 파출소 일반경찰관을 대상으로 연안사고에 대비한 맞춤형 교육·훈련* 추진으로 구조인력으로 양성
* 해상추락차량, 전복선박 등 주요 연안사고 구조 전문 교육·훈련
- **(잠수 장비 확충)** 잠수 구조장비를 미 보유한 함정과 파출소에 보급하여 현장 소 세력의 잠수 구조가능화 추진

■ 기대효과

- 단계별 해양구조 시스템 구축
※ (1단계)초동대응 구조 → (2단계)구조거점 파출소 → (3단계)해양경찰 구조대 → (4단계)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항공구조



- 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로 해양에서의 인명피해 최소화
- 촘촘한 해양구조 시스템 구축으로 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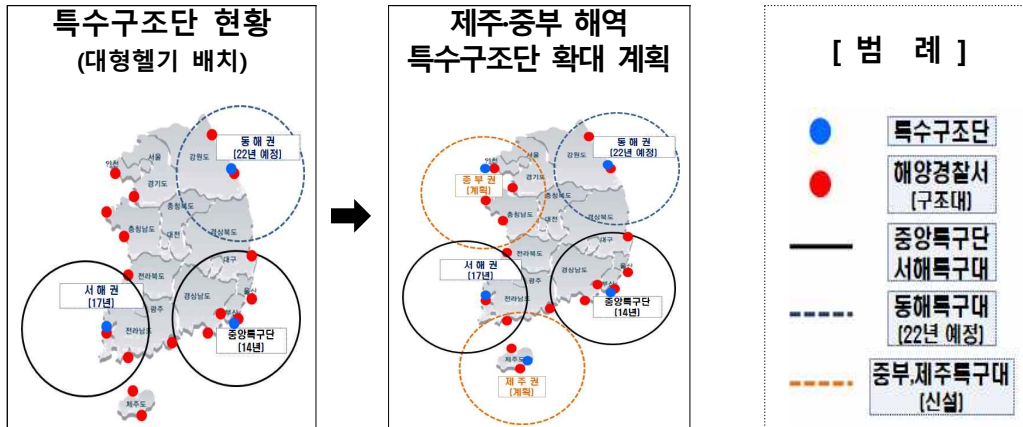
■ 추진배경

- 해역별 대형인명사고·다중 인명수송 등 악기상에서 다목적으로 운용 가능한 대형헬기를 해역별(1시간 내 대응) 도입 필요

※ 서·남해청 각 1대 확보완료, 동해청 1대 도입 중

■ 주요내용

- 해양특수구조대 및 항공구조팀 등 전문 구조세력(수중 잠수구조)을 사고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기 위한 대형헬기 도입·배치
- 제주·(서해)중부 해역 원거리 조업선 안전관리와 악기상시 임무 수행 가능한 대형헬기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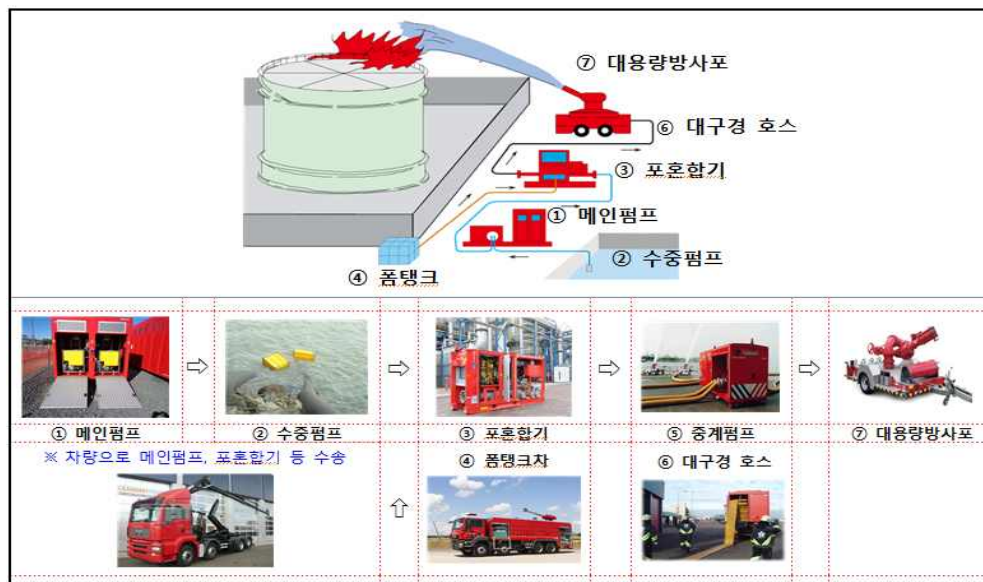
■ 기대효과

- 원거리 또는 대형사고 발생시 골든타임內 신속 대응 가능
- 주·야 신속한 사고 대응이 가능하며 기상악화로 인한 비행제한을 극복하여 대국민 해양치안 서비스가 향상

■ 추진배경

- 석유 저장시설 안전관리 방안 강구 및 대형 유류저장탱크 전면 화재 발생 시 조기 진압체계 구축 필요
- 대형탱크 전면화재 시 복사열(1,500℃이상)로 인해 근접진화 곤란
 - 고양 저유소 화재('18.10월, 128억 피해) 시, 탱크 내 석유를 배유 (180만L) 및 연소시키는 방법을 병행하여 17시간만에 진화
- * 전국에 고양저유소 규모(직경28m, 직경 490만L) 이상 탱크 1,760기 운용 중

■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운영 개요



■ 기대효과

- 대형유류저장탱크 화재 조기진압(6시간 이내)하여 피해규모 최소화
 - 직경 80m탱크 화재의 10시간 진압 단축 시, 105억원 손실 절감 가능
- 강력한 배수펌프 기능으로 수해지원 가능(시간당 1,800m³ 이상 배수)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 지방교부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방재정 지원

정부는 그동안 지방교부세 지원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였다.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지역발전 및 정부·사회혁신 등 국정 성과를 창출·공유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4.8% 증가하였다.

< 일반·지방행정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4	'15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 일반·지방행정 분야(조원)	57.2	58.0	59.5	63.3	68.9	4.8%

* 본예산 기준

구체적으로는, 「중앙-지방간 기능·재원 조정방안」을 통해 2014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인상(5%→11%)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 과세화하는 등 지방재정을 확충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 비중을 확대(20→30%)하고 교부세 불교부단체 우선배분 특례를 폐지하는 등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였으며, 지방재정정보를 통합·공개하는 「지방재정365」를 만들어 지방재정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2018년에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2019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19년 15%, '20년 21%)하여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지역별 가중치 적용 및 지역상생발전 기금 출연·배분을 통해 지역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균형있는 지역발전 도모

소외·낙후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투자도 적극 추진하였다. DMZ 평화의 길, 접경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섬의 날 행사 개최 등 접경·도서지역을 포함한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개발사업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였다.

이외에도 미군기지 반환 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정부지원책 마련 등 국가 균형발전 기반 조성에도 주력하였고, 지역별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지역발전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사업 추진

정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전자정부서비스에 도입·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행정서비스의 통합안내 및 신청에서 처리, 결과확인 등을 한 곳에서 완결적 서비스로 제공하고, 재외공관 업무처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외에서의 민원처리시간 단축(1~2달→1주일 이내)을 추진하는 등 행정 업무 효율성과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세대 전자정부 구현을 추진하여 왔다.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구축하여 3년 이상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5,763개에 대한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132개 정보시스템에 대해 폐기·통폐합을 결정하였다. 또한 제도·환경 변화에 따라 일몰이 필요한 정보시스템 222개를 신규 통폐합 대상으로 식별하여 약 55억원의 운영·관리비를 절감하였다.

2018년에는 325개소 344건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현장점검하고, 공공기관 등의 357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을 모니터링하고 진단·평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침해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외에도 EU 진출 한국기업 편의 및 보호를 위해 EU 개인정보 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 노력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위해 정부는 시민참여, 데이터공유 및 데이터기반 행정 등을 통한 ‘열린 혁신’ 전략을 추진하여 왔다. 지방소멸, 고령화 등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를 독려하고, 「광화문 1번가」를 상설 운영하여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왔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공유, 데이터기반 스마트행정 실현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발굴하여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민간 데이터간 융합을 지원하여 스타트업 육성, 민간 창업 등을 독려하여 왔다. 아울러, 부처·지자체별로 파편화된 데이터를 표준화·연계·융합하는 범정부 통합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일자리 창출·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지역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지원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의 실업문제 해소와 지역정착을 위해 지역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시행하는 상향식 일자리 사업이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약 3만 여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020년에도 약 2만7천명의 사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직접일 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매년 1만명 이상의 일 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 특산물, 전통기술을 활용한 마을기업의 육성·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공동체의 자립 및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역내 소상공인 매출확대, 지역 주민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반한 종합적·체계적 과거사 정리를 위하여 과거사 정리·기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대구 2.28민주운동 등 민주화운동 기념사업과, 舊남영동 대공분실을 활용한 (가칭)민주인권기념관을 비롯하여, 부산 민주공원 부속건물, 대전 3.8민주의거 기념관,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을 추진한다.

또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봉환·조사 범위를 일본·사할린 지역에서 태평양전쟁 격전지(타라와 등)까지 확대하고, 유해봉환사업을 정부 주도에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등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의 상처 치유를 위한 유해봉환사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각각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문적 치유를 지원한다.

■ 국민주도 사회적 문제해결 확대와 정부혁신 지속 추진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 중인 국민참여 정책 및 사회문제 해결 과정을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정책참여방식으로 확립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 정주 기반 마련, 안전 확보, 지역 격차 등 다양한 지역문제에 대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현장중심의 지역문제 해결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 교통안전, 에너지, 자원재활용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문제해결 아이디어 제시와 함께 정책·기술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 직접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스마트한 정부구현을 위한 중장기 공공데이터 개방·공유 확대,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강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첨단기술 기반의 차세대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차세대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지능형 정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범정부 정보자원 공통 활용기반 제공을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국민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자연어 대화형 범정부 민원상담 365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도사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주도의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디지털 행정혁신, 지자체 자치분권 정보화 지원, 참여 기업을 고충해소를 위한 공공정보화 사업 발주제도 혁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자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다수 부처 대상 공통인프라 구축, 다수 시스템 융·복합과제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증거통합 분석 플랫폼 개발, 데이터에 입각한 보건의료정책 개선 및 평가 등 지능형 정부 로드맵 과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공공분야의 4차 산업혁명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디지털 기반의 정부혁신을 실현하고자 한다.

■ 전자정부 거버넌스 확립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성과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성과 중심으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전협의 제도의 이행여부 점검 등을 강화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전에 과도한 개발과 중복기능 개발에 따른 예산 낭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전자정부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분석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점검대상 서비스영역을 지정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점검을 실시, 대규모 정보시스템의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 전자정부 클라우드컴퓨팅 확산계획에 따라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대상 기관 및 정보를 확대하고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확산을 위한 제도 정비 및 보안인증제도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전자정부 국제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Digital-9, OECD E-Leaders 등 전자정부 관련 국제기구 활동을 포함하는 전자정부 선도국 협력을 강화하여 인공지능, 5G 등 신기술의 효과적 도입과 국경 없는 데이터 경제 시대 경쟁우위 확보의 기반이 되는 전자정부 선도 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의 강화, 권역별 전자정부 협력센터 운영, 국제개발협력 사업과의 연계,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의 협업 등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 편리하고 안전한 온라인 서비스 환경 제공

그간 정부 웹사이트 이용시 국민 불편을 초래하던 플러그인(액티브X)을 2019년에는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22대 공공 웹사이트(정부24,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서 8월까지 우선 제거하였고, 768개의 대민

웹사이트(31.8%)에 존재하는 플러그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법적 전자서명 용도가 아닌 본인 확인용 공인인증서도 '20년까지 모두 모바일·지문 등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또한,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익명정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제도화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 재식별 시도 시 과징금 부과·형사처벌 등 다각적인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고, SNS 등의 확산으로 신분증, 민원서류 등 비정형 개인정보인 이미지파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킹·DDoS 등 사이버위협을 자동분석·학습하는 '지능형 보안시스템'을 도입하여 중앙부처·지자체에 AI·빅데이터 기반의 통합보안관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망분리 추진 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을 위한 공통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자체 보안 강화를 중점 지원한다.

< 일반·지방행정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19	'20	'21	'22	'23	연평균 증가율
□ 일반·지방행정 분야	765,597	804,860	824,426	843,171	861,398	3.0
○ 입법 및 선거관리	10,289	14,105	12,856	18,626	12,118	4.2
○ 국정운영	5,861	6,152	5,981	5,920	5,917	0.2
○ 지방행정재정지원	532,631	540,824	548,910	563,832	589,760	2.6
○ 재정·금융	183,262	206,875	222,158	220,021	218,240	4.5
○ 정부자원관리	8,425	8,480	8,280	8,152	8,089	△ 1.0
○ 일반행정	25,128	28,423	26,240	26,620	27,274	2.1

* 본예산 기준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재정분권 추진으로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1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0년부터 지방소비세 6%p를 추가로 인상,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을 이양하여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의 일을 지방의 재원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을 지방의 일반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사업의 안정성 확보 및 지방재정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환 사업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 지방소비세 인상분 배분 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수립, 국세와 지방세 비중 7 : 3 실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지방세 확충, 중앙정부 기능의 추가적 이양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 및 판매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자치사무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도입을 활성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0년 총 3조원('18년 3,714억원→'19년 2.3조원)에 대해 발행액의 4%를 지원할 계획이며(지역별 지원대상 발행규모 한도 존재), 법적 근거 제정 추진, 모바일 상품권 확산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매 대상별·지역별 홍보 등을 통해 상품권 판매도 촉진해 나간다.

다만, 각 지역마다 구매·환전 한도, 할인율 등이 다양하여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 협의를 통하여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상위법이 부재하여 과태료 부과 등이 어려워 근거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과정에서 부정 유통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확산하고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나아가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 공모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는 유통, 홍보 등을 추진하고 전 국민 대상 인지도 제고를 위한 박람회 참가, 영상 제작 등을 할 계획이다.

■ 추진배경

- '18년 고용위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인비용 보전 지원
※ 총 100억원(군산 61억원, 거제 20억원, 경남 고성 6억원, 영암 3억원)
- '19년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액을 6배 이상 확대^{*}
하고 발행액의 4%인 약 884억원 지원
* '18년 66개 지자체 3,714억원 → '19년 177개 지자체 2.3조원

■ 주요내용

- **(개념)**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장이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
- **(종류)** 그 형태와 발행 업체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지류(紙類), 모바일, 카드형 등 다양함
- **(혜택)** 구매자는 상품권 구매 시 할인·포인트 적립이나 사용 시 일정금액 환급 등 혜택이 있으며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이 절감되는 혜택이 존재. 그 내용은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

■ 기대효과

- 소비 진작 : 지역주민의 타지역 구매 대체효과, 관광객의 지역 내 추가 구매효과 등 지역 내 소비 확대
*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 '17.12월
소상공인 1인당 추가 소득 증가 (양구) 2.13%, 연 43.5만원 증가
(화천) 1.12%, 연 22.9만원 증가, (춘천) 0.1%, 연 0.21만원 증가
- 가맹점 매출증대^{*} : 군산사랑상품권 시행 이후 가맹점 66.5%가 매출이 상승했다고 응답
* '18.11.5.~12.14. 8,400개소 가맹점 전수조사, 조사원에 의한 방문조사
- 지역상권 이용 증대^{*} : 군산시 내 응답자 73.2%가 상품권이 주민 가계와 지역경제에 도움된다고 응답, 59.1%가 상품권을 사용한 적 있으며, 상품권 사용 이후 61.1%가 지역상권 이용이 늘었다고 응답
* '18.12.21.~12.26. 군산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709명, 한국갤럽 전화조사

제 5 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혁신 방향

제5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혁신 방향

1. 지출 혁신

1) 지출 구조조정

(1)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과 경제활력 둔화 등으로 인해 내년 세입여건은 녹록치 않은 반면,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세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면서도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지출 구조조정은 단순히 부처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지출을 절감하여 필요한 곳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지출혁신 전략이다.

(2) 추진방향

혁신적 포용국가의 본격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성과미흡·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의무지출은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등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구구조 변화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할 일은 하면서도 낭비적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주요 정책사업 및 신규사업 투자재원은 원칙적으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우선 충당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2) 지출구조 개선

(1) 추진배경

한정된 재원으로 정부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재정사업 심층평가 등의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통해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통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에 핵심사업평가를 도입하고, 1년차 평가는 개별사업의 집행과정 관리와 지출효율화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점검결과 309건의 제도개선 등 성과를 도출했으나 사업군별 심층분석 등 내실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금여유자금 운용규모가 2017년 700조원에서 2018년 778조원으로 증가하고, 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자산이 다변화, 고도화되는 것에 대응하여 심도 있는 기금평가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특별회계와 기금간 칸막이식 운용으로 인해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거나, 예산은 있으나 규제 등 관련 제도 변화의 지연으로 인해 재정사업의 효과가 제한되는 것에 대한 개선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2) 추진방향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한 지출구조 개선 노력 지속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출구조의 근본적인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결과 도출 시기도 예산안 편성 순기에 맞추어 보다 신속한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핵심사업평가 심화 운영 및 기금평가 기간 확대

2019년도부터 현장애로요인 및 비효율적인 사업운영 등에 대한 심도 높은 사업분석을 실시하여, 핵심사업평가를 통한 제도개선 및 예산조정 노력을 강화한다.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현장합동조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집중관리 대상 위주로 점검하고 중기 성과목표 달성여부, 재정투자 방향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폭넓은 의견수렴 및 사업군 차원의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정책 수혜자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현장간담회를 도입한다.

아울러 핵심사업 평가추진단을 체계적으로 개편하여 개별사업별 집행과정 관리를 보완한다. 일자리·복지, 경제분과 등 4개 분과로 평가추진단을 그룹화하고 사업별 점검결과를 분과·사업군별 종합분석으로 연계하여 보다 심화된 재정사업평가가 되도록 할 것이다.

기금평가의 경우 평가단 구성 시기를 2월말에서 1월초로 앞당겨 활동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였다. 다양한 자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하고, 풍부한 제도개선 의견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 재정운용체계 개선으로 지출 효과성 제고

정부는 재정운용체계 개선을 통한 지출 효과성도 제고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앙-지방간 기능·재원 조정을 통한 재정분권, 특별회계·기금간 칸막이식 운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과학적인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전누수를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편성 단계에서 분야별 재정수요 전망에 기반한 지출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합리적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집행관리 단계에서 핵심사업평가를 통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예산과 규제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사업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2. 세입기반 확충

1) 비과세·감면 정비

(1) 추진배경

정부는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과세기반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2) 추진방향

민생안정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면서,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비과세·감면 제도는 성과평가 등을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사항부터 적극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부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의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전문연구기관의 심층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였고, 그 외 조세지출에 대해서도 필요시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한 바, 이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지출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중과세 조정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조세지출은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과도한 조세지출 방지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2) 탈루소득 과세 강화

(1) 추진배경

정부는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2) 추진방향

■ 역외탈세 방지

국제거래 자료 제출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강화하는 등 자료 제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조세부담이 현저히 감소한 우회 거래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업목적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배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역외탈세 방지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OECD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BEPS) 대응 프로젝트」의 국내 입법 및 보완을 지속 추진하고 디지털 경제의 조세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 세원투명성 제고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2019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 적용대상 확대 등 세원 투명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은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체납관리 강화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체납관리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투자재원 다변화

1) 국유재산 활용 확대

(1) 추진배경

2018년 말 현재 국유지의 면적은 25,062km²로 전체 국토면적의 25%에 이른다. 이러한 국유지 중에는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행정재산이 96.9%, 개발·매각·대부를 통한 경제적 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은 3.1%를 차지한다.

2018년 말 국가가 보유 중인 국유재산 규모가 결산 기준으로 1,081.8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국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국유재산 규모의 증가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중요한 재정수단의 한 축인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활용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2018년 3월 「국유재산법」이 개정되어 국유지 토지개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교도소·군부대 등 대규모 국가시설의 외곽 이전 등으로 발생한 대규모 유휴 국유지에 대한 토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2019년 1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을 선정·발표한 바 있다.

* ①부산 원예시험장 ②의정부 교정시설 ③원주 군부지 ④대전 교정시설
⑤원주 교정시설 ⑥전주 지법·지검 ⑦대구 교정시설 ⑧창원 교정시설
⑨천안 국립축산과학원 ⑩남양주 군부지 ⑪광주 교정시설

또한, 2018년에는 최초로 전체 행정재산 501만 필지 중 군사지역·도로 등 미활용 가능성이 낮은 재산을 제외한 199만 필지에 대해 인력과 드론을 병행하여 행정목적 활용여부, 활용유형 지목 등에 대한 총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 추진방향

■ 국유지 개발 및 활용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국유재산을 활용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11곳의 선도 사업지 중심으로 국유재산 토지 개발을 본격화하고 신규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노후 청·관사의 공익적 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국유지 매각·대부 등을 활용한 지역개발 사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유허 국유지를 활용한 국민 편익 증진

유허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 SOC 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행복주택·연합기숙사 부지 공급 등을 통해 청년층·신혼부부의 주거 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국유지 상의 빈집 정리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방식 다양화 등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국유재산의 권리보호와 효과적 활용을 통한 재산가치 증대

국유재산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무상귀속 업무와 은닉재산 조사 업무를 강화하고, 활용 잠재력 높은 비축재산 취득을 위한 제도개선 및 가치 증대 효과를 수반할 수 있는 일반재산 리모델링을 허용할 예정이다.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국유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 마련하는 한편, 해외 소재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관리기반 체계화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운용 효율화

국유재산 관리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개발·활용 후보지 분석 등을 통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미활용 국유재산 특례 규정에 대한 존치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중앙관서의 국유재산 취득·관리의 전문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2)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1) 추진배경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현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에 따라 도입되어 올해는 25년이 되는 해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지난해까지 735개, 130조원 규모로 추진되어 왔으며,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재정사업 대비 비싼 요금과 높은 사업수익률로 인해 국민들이 민간투자사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동력도 위축되었다. 또한 최저수입보장제도(MRG) 폐지로 인해 사업자의 참여 유인이 축소되면서 2007년 이후 사업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투자부진 및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기존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 등 재정의 구조적 도전요인이 부각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을 보완하여 투자활력과 성장동력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나날이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2) 추진방향

■ 대상과 지원 확대를 통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현행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하여 환경·안전 분야, 신성장동력 기반 시설 등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허용을 추진한다.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개별법상 시설 53개로 열거하고 있는 현행 민간투자법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도록 개정하여 새로운 민간투자대상 사업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통해 완충저류시설, 미세먼지 저감시설,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신속한 시설 확충을 도모한다.

범정부 협의체인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한다. 중앙부처·지자체로 구성되고 기재부 제2차관이 주재하는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추진 중인 민간투자 사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을 가속화 한다. 또한 기존 한국개발연구원이 독점적으로 수행했던 제안서 검토를 15개 전문기관으로 확대·허용하여 제안서 검토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의 신속 추진을 지원한다.

■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공공성 제고 병행

현재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을 일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을 추진하여 민자시설 요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민자사업 140개를 전수조사하여 사업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 일정을 수립하여 민자사업의 요금을 단계별로 인하하는 등 공공성을 제고한다.

또한, 민자사업 관련 정보공개를 강화하여 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적격성조사 결과, 사업자 선정과정 및 실시협약 주요내용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하고, 맞춤형 민자사업 정고공개 플랫폼(가칭 '우리 동네 민자사업')을 구축하여 민자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한다.

4. 리스크 관리 체계화

1)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

(1)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으로, 국제기구 및 국제 신용평가사들 역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다만 우리 사회·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출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고령인구 증가 같은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을 감안할 경우 중장기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위험을 미리 진단하고, 재정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추진방향

■ 장기재정전망 실시

인구변화와 장기성장률 추세를 반영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여 장기 재정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5년에 실시된 장기재정전망이 장기 국가채무 수준을 추계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 활용성 측면에서 다소 제약이 있었던 점을 보완하여, 차기 재정전망 추진시에는 민감도 분석과 세대간 영향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 재정지표의 재정위험 관리 기능 강화 지속

각종 거시경제 변수의 국가채무 기여도 분석 및 채무위험 요인 분석 등 재정건전성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지표의 개선과 보완지표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적자성 채무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순채무 개념 도입 검토 등 재정지표를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초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순이자지출) 적자 관리를 위해 이를 보완지표로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2) 국고채 안정적 관리

(1) 추진배경

최근 美·中 무역분쟁 장기화, 영국 브렉시트,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등으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 및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글로벌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한편, 저성장·저물가 구조의 고착화 및 저출산·고령화 등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체질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중장기 재정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국고채 인수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의 변동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전략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추진방향

■ 국고채 인수기반 강화

국고채가 시장에서 원활히 발행될 수 있도록 국고채전문딜러의 인수 의무를 확대하는 등 인수기반 강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고채 유동성도 제고될 수 있도록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도 병행할 것이다.

■ 국고채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시장상황과 수요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참가자들과의 맞춤형 협의채널을 확대하고, 시장동향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물별 국고채 발행물량 등을 시장 발행·수요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장수급여건에 대한 왜곡없이 조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고채 상환스케줄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조기상환과 교환 등을 실시함으로써 국고채 만기구조를 평탄화하고, 적정규모의 중장기물 발행을 통해 차환리스크도 축소할 계획이다.

5. 재정관리의 혁신성 제고

1)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

(1) 추진배경

국가계약제도는 공공조달의 절차와 기준을 규율하는 제도로써 그간 재정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주된 목표로 설정해 왔다. 한편, 공공조달시장은 연 120조원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입찰참여기업도 2019년 조달청 등록업체 기준으로 약 41만개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근에는 국가계약제도가 입찰참여기업 등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 정책적 목표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경우 공공발주 규모가 56조원 수준으로 전체 국내건설시장의 30%를 상회하고 있어 국가계약제도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이 더욱 긴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공사의 발주제도는 그간 가격평가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으며 공사비의 적정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낙찰제도를 능력·기술평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공공공사 공사비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2019년 1월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2) 추진방향

기술중심형 낙찰제도 도입

기술경쟁을 유도하고 개별 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낙찰제도를 능력·기술 평가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는 공사수행능력·사회적책임·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형·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는 기술변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고난이도 공사는 공법에 대한 기술대안을 제시토록 하고, 우수제안자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도를 도입키로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공사에 대하여도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현재 가격중심 평가방식인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는 100억원~300억원 규모의 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가격평가 합리화

공공공사의 가격평가제도 중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였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가격평가 만점기준을 입찰 금액 상위 40%, 하위 20%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방식에서 상·하위 20%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저가투찰의 유인이 되는 요소를 개선하고 적격심사에 대하여도 건설근로자 보호, 안전제고 등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 되도록 공사비 중 해당항목은 가격경쟁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 공사비 적정성 제고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공정성·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량구매를 조건으로 가격이 결정된 관급자재 단가를 사급자재 단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자재단가를 구매규모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에 계상토록 하는 한편,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하여도 국가와 시공업체가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민원·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추가 공사비 중 일부는 국가가 부담토록 하고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간접비에 포함됨을 명시하기로 하였다.

2)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1) 추진배경

전술한 바와 같이 연간 집행규모가 약 120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은 행정목적을 위한 물품과 서비스 구매 차원을 넘어 관련 산업의 지원, 사회적 가치실현 등을 위한 정책수단의 기능도 하고 있다.

세계는 공공조달의 새로운 역할에 주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정부가 공급업체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선도적 구매자가 되어 주는 공공혁신조달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19년 7월에 국민이 만든 혁신에 선제 투자하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추진한다.

(2) 추진방향

■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

공공서비스 수준의 제고와 기술혁신 촉진 관점에서 기술개발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고, 평가를 통과한 제품의 적극 구매를 추진한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R&D) 제품, 상용화 전 시제품은 별도의 성능인증을 받기 전이라도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술개발 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 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발굴 및 속도감 있는 지원

복지, 환경, 안전, 치안, 행정서비스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전적 공공수요 대표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2020년 이후에 속도감 있게 실행한다. 사전에 규격을 확정하지 않고 입찰업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 규격을 결정한 후 최적의 공급기업을 선정하는 문제해결형 계약 방식을 활성화하고, 시장에 없는 기술을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할 경우 수요기반의 조달연계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 국가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

공공조달 분야의 수요-공급자 간 쌍방향 정보교환이 가능한 통합몰을 구축하여 2020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처별로 분산된 공공 수요조사 창구를 통합하고 혁신제품 시범구매, 문제해결형 계약방식 등 신설된 계약절차를 전주기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공공조달 관련 국가적 중장기 정책·제도 심의 및 범부처 협업·조정을 위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 산하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의 도전적 조달수요를 발굴·확정하는 ‘민관합동 공공수요발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적극 조달행정 면책·인센티브 활성화

적극적인 조달행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을 우선 활용하거나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을 구매하는 조달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을 강화하고, 혁신 제품·기술 구매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우수사례는 포상한다. 또한 적극 조달 행정 안내서를 마련하여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재정정보 관리 고도화 및 공개 확대

(1) 추진배경

정부는 그간 효율적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정보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dBrain)을 개선하고 열린재정 홈페이지 내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재정정보 관리 고도화와 재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지자체-교육지자체의 재정정보는 독립적인 재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재정정보 대국민 공개 역시 중앙-지방-교육재정별로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공개 중이다. 이로 인해 정책당국과 국민이 국가 전체의 재정사업 정보를 파악하고 관련 통계를 이용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 개통을 목표로 2019년 하반기부터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여러 부처와 기관에 산재된 재정·행정 정보를 연계하고 정책의사결정 및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2) 추진방향

■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을 중심으로 산재된 재정·행정DB 연계

현재 여러 부처·기관에서 분절적으로 관리 중인 재정·행정 DB를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하여 재정정보와 행정통계를 망라한 완성형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dBrain(중앙), e호조(지방), 에듀파인(교육)의 재정정보DB와 KOSIS(통계청), ECOS(한국은행), 행정정보DB(행안부)의 경제·행정정보DB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산재된 정보 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적시성 있는 통계를 산출하여 정책당국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포괄한 통합정보공개 플랫폼 구축

현재 중앙재정(열린재정), 지방재정(지방재정365), 교육재정(교육재정알리미) 별로 각자 공개 중인 재정정보를 포괄하는 통합재정정보공개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이 한 곳에서 국가 전체의 재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개편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개편 시 국민이 보다 손쉽게 재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의 가독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재정 투명성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4) 공공기관 혁신 강화

(1) 추진배경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공공성 강화 및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선도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기관 고유업무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기관을 운영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경제활력 회복 지연 및 성장잠재력 둔화 등에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투자확대 및 혁신성장 지원 등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정채용 및 공정경제 문화 확산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2) 추진 방향

안전관리 강화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기관 고유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관리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9년 3월에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경영평가 안전지표 배점을 최대 6점까지 확대하고, 중대사고시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에 대한 해임건의 등 관리체계를 개편하였다. 또한 기관별로 안전기본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인력 확보 및 노후시설물 보강 투자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를 위한 필수 인력을 지속 확충해 나가는 동시에, 2020년까지 비정규직 9.6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역할 강화

공공기관이 경제활력 제고 및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함께 혁신성장 지원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전년 대비 10.5조원 확대된 54조원의 2019년 공공기관 투자계획 집행실적을 지속 점검하고, 추가 투자방안도 발굴해 나갈 것이다. 또한 혁신성장분야 자금지원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제품·기술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하는 등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리경영 강화 및 국민소통 강화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2018년과 2019년에 두차례에 걸쳐 마련한 채용비리 근절 대책 및 2018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 등이 현장에 정착되어 공정채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컨설팅 개최,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지속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경제 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의 거래관행 개선도 유도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빅데이터 등 新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을 지속 개선하고, 2019년 3월 개통한 쌍방향 시스템인 공공기관 혁신포털 (ALIOPLUS+) 등을 통해 국민 소통·참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6. 재정운용의 포용성 강화

1) 재정분권 추진

(1) 추진배경

정부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책임·재원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재원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방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원은 세입기준 23%에 불과하나 지방이전재원을 포함한 지방의 가용재원은 68%에 달하는 수준이다. 재정분권은 이러한 지방의 중앙 의존적인 구조를 개선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추진방향

실질적인 재정분권 구현을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018년 10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함으로써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우선 2019년도에 지방소비세를 4%p 인상하였으며, 2020년도에 추가적으로 6%p 인상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와 연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중 3.6조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기능을 지방에 이양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이 자기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2) 국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

(1) 추진배경

정부는 지난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206건의 사업제안 중 38개 사업 928억원이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다.

올해 정부는 제도 운영 2년차를 맞이하여 국민참여예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참여확대, 소통활성화, 제도운영개선’ 세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참여 확대와 대표성 제고를 위해 예산국민 참여단과 일반국민 설문조사 인원을 각각 300명, 1,000명에서 400명, 2,000명으로 확대하고, 참여단은 통계적 추출을 통해 성·연령·지역별 대표성을 갖추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참여단은 국민이 제안해주신 사업 아이디어 중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심사 및 숙성을 거쳐 구체화된 후보사업을 심의·평가하였으며, 참여단 논의 결과와 일반국민 선호도 투표 결과를 50:50으로 반영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였다.

향후에도 ‘국민 참여’가 핵심인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국민의 뜻과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여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추진방향

■ 국민 참여의 편의성 확대

사업제안 접수기간이 2018년에는 1개월에 불과해 지나치게 짧은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019년부터는 접수기간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전환하였고 이를 통해 앞으로 국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취약계층, 고령층 등을 직접 찾아가는 취재형 사업제안을 활성화하여, 생업 등으로 바쁘거나, 이동성·정보접근성이 낮은 국민들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고, 보다 현장감 있는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 국민 참여의 질적 제고

올해 새로이 도입된 문제해결형 국민참여방식을 내년부터는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방식은 국민제안에 대해 해당부처 중심으로 구체적인 예산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던 기존 방식과 달리 국민 제안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집중토론과 상시 피드백을 통해 구체적인 예산사업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방식은 올해의 이슈 선정→온라인토론→국민참여토론회→예산사업화→참여단논의에 반영 순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아동보육지원, 청년희망사다리 복원, 중기·소상공·자영업자 행복한 일터 구축 3개 이슈를 선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내년에는 이슈의 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질의·응답 게시판을 활성화하여 국민예산 참여단과 일반국민 설문조사 응답자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참여단 숙의와 일반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개선할 계획이다.

■ 소통 활성화

국민-정부 간 소통강화와 더불어 상호토론 및 정보공유를 위한 플랫폼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에 Facebook에 “대한민국 국민참여예산” 그룹 계정을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도 운영을 내실화하여 예산국민 참여단, 사업제안자 등 국민·전문가·정부의 모든 담당자가 참여예산 편성·집행 등 콘텐츠를 실시간 게시·공유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3)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1) 추진배경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는 1999년에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 체계적인 공공투자사업 관리를 위해 SOC 분야를 대상으로 최초로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이후 20년간 총 849개 사업, 386.3조원에 대해 예타를 수행했고, 이 중 사업수 기준으로 35.3%에 해당하는 300개 사업, 154.1조원은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불요불급한 대형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다만, 예타가 도입된지 20년이 경과하면서 그간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균형발전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실현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경제성이 예타 통과와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당초 예타 대상이었던 SOC 외에 복지사업 등에도 ‘시행·미시행’의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정책적 판단을 포함한 종합평가까지 모두 수행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 있고, 복지·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예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예타 조사기간의 장기화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다는 의견이 있다.

(2) 추진방향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적극 반영

수도권 지역 사업과 비수도권 지역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항목별 비중을 달리 적용하고 평가 가중치를 조정하여 비수도권 지역 사업의 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수도권 지역 사업은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평가한다. 다만, 수도권 중 접경·도서 및 농산어촌 지역 사업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평가하여 역차별을 방지한다.

그리고 ‘정책효과’ 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일자리, 주민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을 평가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정책성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분석한다.

복지·소득이전 사업은 ‘시행·미시행’의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비용-효과성 등 평가항목별 점검방식으로 전환하고, 예타 결과는 ‘사업추진 적정’, ‘조건부 추진’, ‘전면 재기획 후 재요구’로 도출하여 각 항목별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다.

■ 제도 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기재부에 예타대상 선정, 예타결과 등을 심의·의결하는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산하에 사업별 종합평가를 수행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사업 주무부처 또는 필요한 경우 관련 지자체도 참여하여 주요 항목별로 사업 효과를 설명하고, 조사기관이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한 후 분과위원과의 질의·응답을 거쳐 종합평가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非R&D 사업분야를 담당할 전문기관으로서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초기에는 복지 등 비정형사업 예타를 전담하되 추후 SOC·건축 등의 분야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예타 조사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재기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철회·반려를 적극 허용하며, 예타 재요구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예타 신청 전 사전에 준비할 자료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 등 사업 주무부처의 사전준비 절차를 강화하여 예타 조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